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 2021년 주요정책 자체평가보고서(상세본)



2022. 1.

법 무 부

# 목 차

1. 자체평가 개요 .....	1
(1) 중점 평가방향 .....	1
(2) 평가추진 개요 .....	2
2. 평가결과 .....	6
(1) 총 평 .....	6
(2) 주요성과 .....	7
(3) 개선·보완사항 .....	9
(4) 평가결과 종합 .....	10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13
4.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 결과 .....	15
(붙임)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	279

# 1. 평가 개요

## (1) 중점 평가방향

-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이 종합 반영된 ‘법무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 국민 중심·현장 중심의 자체평가 운영
- 평가결과의 적극적 환류로 정책 품질 개선 및 조직 효율성 제고

### □ 국민 중심·현장 중심의 평가

- 국민의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
-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여부 평가에 반영

### □ 자체평가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 자체평가 위원에게 관련 정책자료 수시 제공을 통해 자체평가 신뢰성 제고
- 자체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자체평가의 투명성 제고

### □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평가 책무성 제고

- 실·국·본부별 자체평가 분과위원회 및 평가지원팀을 구성·운영 하여 성과관리 과정과 평가에 대한 책무성 강화

### □ 평가결과의 적극적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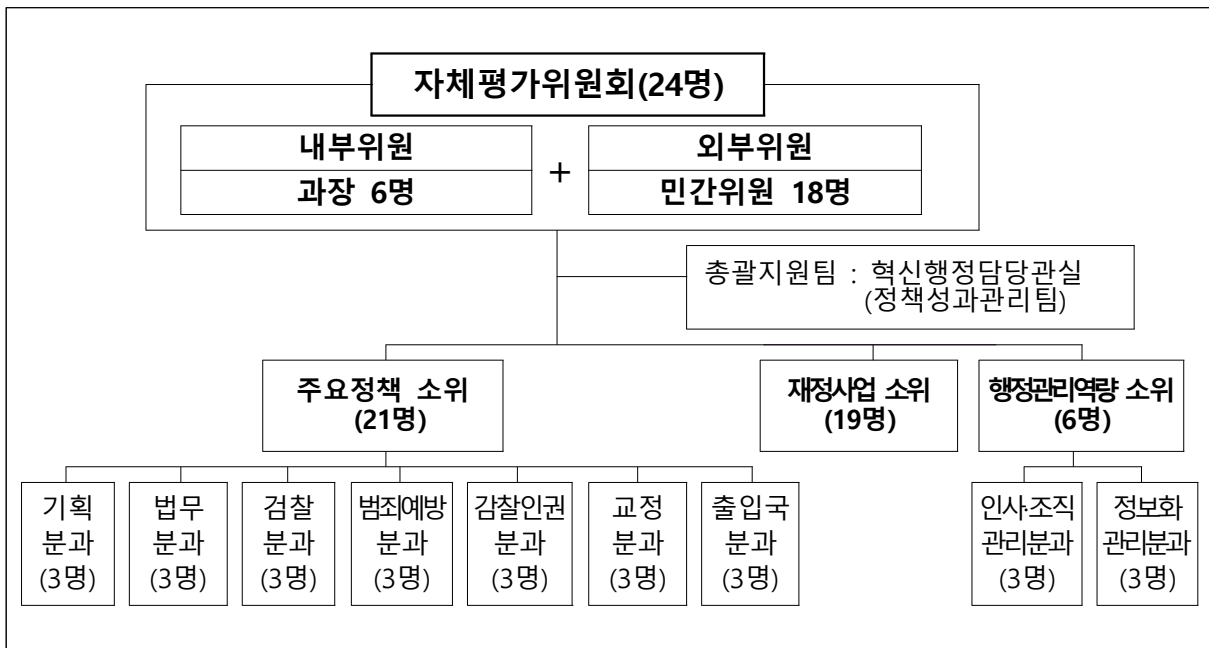
- 평가위원의 정책개선 의견 적극 반영
- 정책성과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 성과상여금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과관리 추동력 확보
- 전년도 평가결과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미흡·부진(하위 2등급)과제의 경우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 강화
- ※ 자체평가 결과가 반영된 성과평가 결과를 승진심사 10%, 개인 성과급 지급 30% 반영

## (2) 평가추진 개요

### □ 평가추진 체계

-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및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주요정책·재정사업·행정관리역량' 부문의 3개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주요정책 소위는 법무부의 정책특성을 고려하여 '기획', '법무', '검찰', '범죄예방', '감찰·인권', '교정분과', '출입국' 등 7개 분과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
- 행정관리역량 소위는 '인사·조직 관리분과', '정보화 관리분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음

<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도 >



※ 기획분과 위원이 인사·조직관리분과 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재정사업 소위는 차관(위원장)과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

## □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전체위원회>

-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각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
- 의사결정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분과·소위원회>

- 각 분야별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전체위원회 안전 상정
- 주요정책 평가 등 각 분과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검토·심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안전 상정
- 그 밖에 전체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심의
- 의사결정 방법 : 전체위원회와 동일

## □ 평가방법

- 주요정책 담당부서에서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여 실적 및 근거자료 등을 입력한 후, '2021년 법무부 자체평가계획'의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 분과위원회별로 평가 실시
  - \* 국무조정실의 '2021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마련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평가결과 의결(서면, 1. 24. ~ 27.)

##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법무부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등 59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 계획수립의 적절성 등 5개 항목 13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지 표	측 정 방 법	평가시기	배점
계획수립의 적절성(15)	계획수립의 충실성	○사전 조사 및 의견수렴 여부, 과제추진 계획의 적절성	상반기	5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상반기	10
시행과정의 적절성 (10)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상반기 하반기	7
	협업 노력도	○관련 기관·부서와 유기적 협업을 통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수범 사례	하반기	3
정책 효과성 (60)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하반기	30
	정책 효과성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등 발생 여부	하반기	30
정책 소통의 충실성 (15)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정책의 집행 등 정책 추진 단계별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정도	하반기	6
	홍보 노력도	○방송, 언론보도 등 홍보 실적 및 홍보 우수사례	하반기	6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의 충실성 ○제공 자료 내용의 충실성 등	하반기	3
가점(6)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국정과제 및 전략목표와 관리과제 간 연관성 및 기여도	상반기	(2.5)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전년도 하위 등급(미흡~부진) 과제에 대한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여부	하반기	(1)
	기관장 노력도	○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장·차관) 실적	하반기	(1)
	정책 개선의견 반영도	○평가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등	하반기	(1.5)

# 2021년 법무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 체계

##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법무부의 임무

- **법질서 확립**  
-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외국인 관리 등 법집행 업무 수행
- **인권옹호**  
- 국가 인권정책 수립, 인권침해 예방,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 **법무서비스 제공**  
- 국가로펌으로서 법령 자문, 기본법령 제·개정, 송무 업무 수행

## 법무행정 비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전략 목표

I	II	III	IV	V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li> <li>②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li> <li>②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권 보호체계 및 국제인권 대응체계 강화 등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li> <li>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li> <li>②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li> <li>②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li> <li>③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li> <li>④ 법무행정 지원역량을 강화한다</li> </ol>

## 2. 평가 결과

### (1) 총 평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법무행정 비전으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5대 전략목표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적폐청산의 차질 없는 추진' 등 12개 성과목표 하위의 59개 관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

- 2021년 총 47개 부서의 5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3개(5%), 우수 10개(17%), 다소우수 8개(14%), 보통 17개(29%), 다소미흡 9개(15%), 미흡 9개(15%), 부진 3개(5%)로 나타남
  - 매우우수한 과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등 3개 과제, 우수한 과제는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등 10개 과제이며, '채권추심법 개정' 등 3개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 전략목표별 평가 결과는 ①'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②'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 추진', ③'인권의 가치 중시 및 약자 보호·지원', ④'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⑤'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순임
  
- 총 59개 관리과제의 11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결과,
  - 전체 117개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7.3%로
    - 102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100% 이상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5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입법동력 감소로 인한 입법과정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법무시설 출입 금지', '검찰 직접 수사부서 축소' 등으로 분석됨



## (2) 주요성과

□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등 3개 과제는 '매우 우수(1등급)'한 것으로 평가

### ○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체계 개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및 '신속수사팀' 신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안정적으로 관리

※ 특정범죄 재범률 : '19년 1.97% → '20년 1.68% → '21년 1.65%

-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지속 확대,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구축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긴급상황 대응력 강화

### ○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벌금 전입비율 상향(6→8%)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을 전년도 대비 **29%** 대폭 확충(824억원→1,060억원)

- 코로나19로 찾아가는 법률지원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 **화상상담**을 전년도 대비 **6배 이상**(2,568→16,365건) 전면 확대 시행

※ 화상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이 PC·모바일을 통해 주거지 내에서도 쉽게 실시간 법률상담 가능

### ○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법무부 '교정 홍보대사' 위촉, '유튜브 인플루언서' 교정 행정(교도관·수용자)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 온라인 홍보채널 구독자·팔로우 수 전년도 대비 대폭(45%) 증가

-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으로 '수용생활 카툰 공모전'을 개최 ('21. 10.)하여 수상작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 공모 주제 : 수용 생활 중 변화된 삶

□ '공증제도 활성화' 등 10개 과제는 '우수(2등급)'한 것으로 평가

○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 가이드북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화상공증 제도의 안전성·편리성 등을 적극 홍보, 화상공증 이용건수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
  - ※ 화상공증 :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스마트폰·PC 등으로 공증할 수 있는 제도
- 비위 공증인 등 부적정 공증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징계(공증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공증 신뢰도 제고
  - ※ 38명의 징계대상자에게 과태료(15명), 견책(23명) 등 징계 의결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논의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국회제출('21. 10.) 및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사법 개정안 후속입법 추진

○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 및 농어촌에 외국인력 지원(약 6만 명)
- 민원실 혼잡 완화를 위한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15→34개) 등 코로나19 확산 및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확대

○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집단감염에 취약한 수용시설의 실태에 맞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수립하고, 월 1회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기관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 총 87개(교정기관 54, 소년보호기관 12, 외국인보호시설 21) 대응지침 수립
- 매월 '의무점검 테마'(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를 선정하여 계절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법무시설을 선제 점검, 재난 예방

### (3) 개선·보완 사항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등 9개 과제는 '미흡(6등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3개 과제는 '부진(7등급)'한 것으로 평가

####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 재판 원칙에 반하여 일부 선거사건 재판이 지연되거나 편파성이 논란된 사례 존재
- 당선무효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기한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 하되,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
  - ※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찰시민위원회' 등 적극 활용

#### ○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

- 국고손실 환수소송에는 소송을 수행하게 될 소관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 및 수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소관부처의 인식 제고 필요
  - ※ 각 부처 소송총괄관 회의를 통해 국고손실 환수 업무 소개 및 협력 당부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에 대한 국회 입법 동력이 떨어져 입법 과정이 지연
  - ※ 금융위, 금감원에서는 2017년 이후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실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관심이 줄어들
- 법무부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본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에 7회 설명, '21년 정기 국회 주력법안으로 선정되는 등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

#### (4) 평가결과 종합

연번	주요정책 관리과제	등급
1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부진
2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미흡
3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부진
4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미흡
5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미흡
6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보통
7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미흡
8	토착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미흡
9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보통
10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방지	다소미흡
11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	미흡
12	금융·증권·조세 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미흡
13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미흡
14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보통
15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보통
16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미흡
17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우수
18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매우우수
19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다소우수
20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다소우수
2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부진
22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우수
23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보통

연번	주요정책 관리과제	등급
24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보통
25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매우우수
26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다소우수
27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다소우수
28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보통
29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보통
30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다소우수
31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보통
32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보통
33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보통
34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우수
35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다소미흡
36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보통
37	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구현	우수
38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보통
39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우수
40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보통
41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우수
42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다소미흡
43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보통
44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보통
45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다소우수
46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다소미흡
47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우수

연번	주요정책 관리과제	등급
48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다소미흡
49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우수
50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보통
51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보통
52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다소미흡
53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다소미흡
54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다소미흡
55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다소미흡
56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매우우수
57	출입국.외국인정책 홍보 강화	다소우수
58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다소우수
59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우수

###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 평과결과 환류

#### ① 자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 시 반영

- (직급별 반영비율) 승진심사 시 직급별로 자체평가결과 반영기간 (최근 4년~최근 1년)을 차등 적용, 직급이 높을수록 자체평가 점수가 장기간 우수할 경우 승진에 유리하도록 설계
- (반영방법) 직급별 반영기간의 자체평가 평균점수를 승진심사 시 필요한 종합서열명부에 10% 반영

#### 【 승진심사 시 자체평가(BSC) 결과 반영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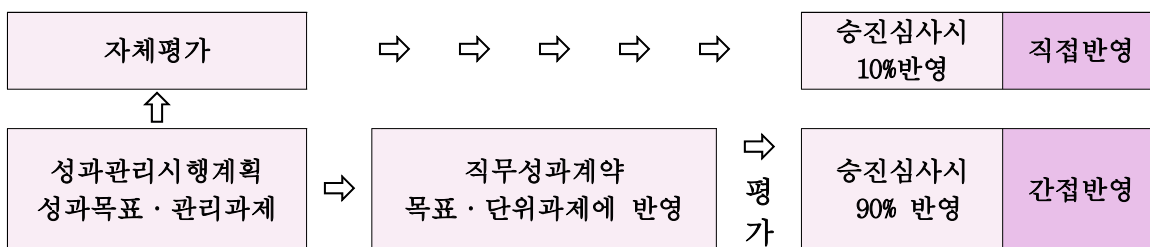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8급	9급
반영기간	최근 4년	최근 4년	최근 3년	최근 2년	최근 1년
반영비율	10%	10%	10%	10%	10%
비고	직무성과계약 평가	근무성적평가			

#### ☞ 자체평가 결과를 BSC에 직접 반영

#### ② 4급 이상의 경우 자체평가결과를 승진 시 직·간접 반영, 연계 강화

- (반영내용) 자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 시 10% 반영(직접반영)하는 이외에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서 목표·단위과제 설정 시 업무와 관련 있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를 선정, 계약하고 그 평가결과를 승진심사 등에 반영(간접반영)

#### 【 4급 이상 자체평가결과 반영 내용 】



### ③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내부심사 시 반영

#### 【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내부심사 기준 】

구분	훈련과제 점수	어학성적	근무성적 평정점수	BSC 점수	총 근무연한
반영비율	30%	20%	20%	10%	20%

☞ 자체평가 결과를 BSC에 직접 반영

### ④ BSC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 과제 등 반영

- (반영내용) BSC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BSC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로 반드시 반영

####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성과지표의 BSC 성과계획 반영 예시〉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	BSC 관리과제	BSC 성과지표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V-3-④)	스마트 접견 실시 실적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 접견 실시 실적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제 이용자 만족도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제 이용자 만족도

■ 성과지표 실적

조회구분	년도	월	부서	성과지표	현재	과제구분	관점	성과지표	단위	가중치	주기	목표값	실적값	구분
	2019년	12월	보안과(범무부)	성과지표	현재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학습성장	교육훈련시간(본부)	%	2	반기	100	100	지표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학습성장	지식마일리지	마일리지	3	년	20	29.73	지표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학습성장	성과관리 참여도(공통지표)	점	3	반기	100	100	요소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성과관리 문제발생 건수	점		반기		0	요소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지체일수	점		반기		0	요소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운영/행정개선	행정개선 마일리지(공통지표)	%	3	반기	100	212.80920860	요소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기관 행정개선 마일리지	%		반기		67	요소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전체 기관평균 행정개선 마일리지	%		반기		31.4836	요소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정책(업무)	정렬마일리지(공통지표)	%	5	년	100	108.19165378	요소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기관 행정마일리지	%		년		70	요소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전체평균 정렬마일리지	%		년		64.7	요소
<input type="checkbox"/>				공통과제			고객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도(공통지표)	점	4	년	100	76.8	지표
<input type="checkbox"/>				관리과제			정책(업무)	스마트접견 실시 실적(건)(본부)	평가점수	60	년	100	99.75	지표
<input type="checkbox"/>				관리과제			정책(업무)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제 이용자 만족도(%)(본부)	평가점수	20	년	100	99.75	지표

(BSC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시행계획 과제 반영 예시)



#### 4.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부진
---	------------------------	----

##### □ 총 평

-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맞는 형량이 선고·확정되도록 추진함

##### □ 주요실적

-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수행하여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 노력 지속

##### □ 주요성과

- 검찰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운영하고 있으나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 공판 초기부터 수사검사로 구성된 공소유지 전담 공판팀을 운영하여 공소유지에 총력
-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 결과,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확정되는데 큰 성과를 거둠
  - 특검과 검찰에서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총 45명 중 현재까지 36명 판결 확정(35명 유죄, 1명 무죄), 9명(문형표, 홍완선, 김기춘, 조운선,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김상률, 김소영) 재판 중
  - 21년 들어 7명(박근혜, 이재용, 우병우,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추가 유죄 확정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적폐청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 철저 계속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과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의 목표로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선정하는 등 충실하게 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실적’은 정책의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협업 실적 미제출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실적(%)
6	정책 효과	미흡	■ 국정농단 관련 철저한 공소유지 계속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실적 미제출
8	홍보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1-1)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실적 미제출

## □ 총 평

-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수사실무에 형사 절차상 변화를 반영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검찰 기능을 조정한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

## □ 주요실적

- 수사권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법령 검토 및 제·개정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정·시행('21.1.1.)
  -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 훈령) 제정·시행('21.1.1.)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정·시행('21.1.1.)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1.3.1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1.3.16.)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1.3.16.)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1.3.16.)
  - 특별수사청 설치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검토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시행('21.11.16.)
  - 「형사소송법」 개정·시행('21.12.21.)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시행('21.12.28.) 등
- 형사절차의 변화가 실무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른 각종 수사매뉴얼·지침 등 제·개정
- 검사의 업무 절차 및 범위 조정 등에 맞추어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선, 변화된 수사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통계시스템 등 정비

□ 주요성과

-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유관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이 차질 없이 시행('21.1.1.)되도록 추진
- 검찰기능을 조정한 제도가 실무에 신속히 안착되게 함으로써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실질적인 수사권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이행 추진
- 실무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변화된 수사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 검찰기능의 조정·통제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검찰상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청회·연구용역 실적, 해외사례 연구 등 단순 산출 지표 외에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보완이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협업 실적 미제출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	■ 검찰제도개선 추진 실적(점수)
6	정책 효과	미흡	■ 후속조치가 필요한 유관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추진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국민신문고 민원 7건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유관 법령 제개정 시 현장의견 수렴
8	홍보 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8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13-1)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총 평

- 최초로 기회균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인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세부 인사 기준·절차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등 공개된 규범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
- 또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유지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심사하는 등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세부과제에 대하여 지연없이 정상 추진 중

□ 주요실적

○ 검사인사제도 개선

-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자연스럽게 쉬운 용어로 개정('21. 1.)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조(검사의 전보) 4. 그 밖에 <u>경향교류</u> (京鄕交流),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제10조(검사의 전보) 4. 그 밖에 <u>수도권과 지방 교류</u> ,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인 「검사인사규정」, 세부 인사 기준·절차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개정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을 개정하여 인사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제·개정 추진

- 인권·민생·법치 및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 등을 위한 인사 실시('21. 상·하반기)
  - 인사 규정상 주요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민생 중심의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공인전문검사·우수 여성 검사 발탁하는 등 공정한 인사 실시
  -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대, 우수 검사 전국 균형배치 및 전담별·지역별 인적 구성 다양화
  -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전면적인 '전진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 도모
-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의 공식화·실질화('21. 6.)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실질화 하여 신임 검찰총장을 2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이 최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함
-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적정성 등을 엄정 심사 하여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무인원을 축소하고, 해당 인력을 일선 검찰청에 재배치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사 18명 파견 감축(40개 기관, 64명 파견 → 33개 기관 46명 파견)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위한 검찰 조직개편('21. 상반기)
  - (주요 내용) ① 사법통제 및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② 형사부 직접수사 범위 조정 및 검찰총장 승인 규정 신설, ③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기능 통합 등\*
  -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비직제) 신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

- (진행 경과) ① 5. 20. 직제개편안 마련, 검찰 의견 조회, ② 6. 17. 협의안 마련 후 입법예고·의견조회, ③ 6. 24. 차관회의 의결, ④ 6. 29. 국무회의 의결, ⑤ 7. 2. 개정·시행

○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검사에 대한 징계집행 및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절차를 개선함과 아울러 검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외부위원 추천 권한을 외부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21. 4. 개정 「검사징계법」에 따라 외부위원 2명 신규 위촉)

□ **주요성과**

- 공개된 법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생 중심의 형사·공판부 검사를 적극 발탁하는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 등을 통한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상 확립
- 검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제고를 통한 청렴한 검찰상 구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인권 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운영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국외훈련 만족도 실적 향상을 위해 국외 훈련 사전 교육 및 현지 지도감독관을 지정하고 국외훈련 관련 개선 등을 위하여 국외훈련 복귀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실히 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보완이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사법통제 기능 전담하는 인권보호부 및 국세청·금감원 등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신설 등 직제 개정 협의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2.2%	■ 국외훈련만족도(점수)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미흡	■ 공개된 법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실적 미제출
8	홍보 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5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13-2)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전략목표1)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총 평

- 4. 7. 재·보궐 선거 대비,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하에서 신속·엄정 수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
- 검·경 실무협의회 개최하여 선거사건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검·경 상호협력모델 확립에 기여

□ 주요 실적

- 선거사범 대처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 강화
  - 4. 7. 재·보궐 선거 대비,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하에서 신속·엄정한 수사 지시('21. 1. 4.)
  -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 회의 개최('20. 12. 14.)
- 주요 선거사범 집중 단속·엄정 처리
  - 4. 7. 재·보궐 선거사범 수사결과('21. 10. 8.)
  - 4. 7. 재·보궐 선거 관련, 선거사범 339명 입건, 107명 기소

< 입건 및 처리 현황 >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입건	처 리		
		소 계	기 소	불기소
광역단체장	274	274	71	203
기초단체장	21	21	6	15
광역의원	39	39	27	12
기초의원	5	5	3	2
합 계	339	339	107	232

※ 동일인에 대한 수 건 고발은 접수된 사건 수로 수 명 처리

· 폭력선거, 흑색·불법선전, 금품선거 등 주요 선거사범 처리

< 범죄유형별 입건 및 기소 현황 >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기소인원)]

구분	흑색·불법선전	금품선거	선거폭력·방해	기타
광역단체장	113(12)	9(0)	70(32)	82(27)
기초단체장	10(1)	7(2)	0	4(3)
광역의원	7(3)	7(5)	5(0)	20(19)
기초의원	2(0)	2(2)	0	1(1)
합 계	132(16)	25(9)	75(32)	107(50)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을 통한 후보자 검증 목적의 보도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고발 증가 추세

○ 선거사범 수사의 전문성 강화

-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

·2021년도 공공수사 검사 타겟 교육(2회) 실시하여 일선 검사들의 선거사건 수사 및 수사지휘 역량 강화('21. 11. 4~5. / 11. 11~12.)

○ 공명선거문화 확산에 기여

- 대검, 선거사건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경 실무협의 회 개최 3회('21. 3. 17. / 4. 9. / 11. 1.)

- 당선인을 비롯하여 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적용한 엄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와 철저한 공소유지 지시('21. 4. 9.)

○ 선거사범 처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공공수사 전담검사들을 상대로 「2021년 공공수사 타겟 교육과정」에서 선거법개론, 선거사건 주요쟁점 및 수사 유의사항, 공직선거법 주요 벌칙 개관 등 강의를 통해 선거사범 수사의 전문성 제고(2회 실시, '21. 11. 4~5. / 11. 11~12.)
- 일선청 공공수사 분야 업무 관련 검찰수사관 대상으로 선거사건 기본법리 및 수사사례 등 주요쟁점 및 사례 강의를 통해 선거사범 등 공공수사의 전문성 제고('21. 5. 20~21.)

□ 주요 성과

○ 4. 7. 재·보궐 선거사범 수사 결과

- 선거사범 339명 입건, 당선인 5명(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107명 기소

○ 4. 7. 재·보궐 선거 대비,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하에서 신속·엄정한 수사 지시하여 선거사범 관련 정보 공유, 중점 단속 대상 선정 논의 등을 통해 선거사범 단속예방의 효율성 증대('21. 1. 4)

○ 대검, 「선거사건 수사」 검·경 실무협의회 개최

- 선거사건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경 실무협의회 개최 3회('21. 3. 17. / 4. 9. / 11. 1.)

○ 선거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수사기관의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홍보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

○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범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 과거 선거사건 수사 미흡한 점

- 선거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나, 종전에 편파성 논란이 없지 않았음
-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 재판 원칙에 반하여 일부 선거사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 존재

### ○ 개선 필요 사항

-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당락,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처리
-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 ○ 제고 방안

-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찰시민위원회 등 적극 활용
- 선거범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
-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 ○ 추진 방향

-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의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
- 당선무효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 하되,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범죄유형 통계자료 및 사례 분석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 목표는 소속정당·당락 여부를 불문하고 독립적 자세로 공정하게 수사한 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불편부당 하게 처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사전적 예방 활동 및 사후적 단속 및 대응 활동으로 구성된 지표는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대검 및 선거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 수립시 활용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2.9%	■ 선거범죄 예방활동 실질화 실적
6	정책 효과	미흡	■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를 통해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선거 관련 주요 현안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8	홍보 노력도	미흡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2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전략목표1) 범무·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COVID-19로 입국제한 등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송환이 어려웠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주요 범죄인을 국내 송환함
-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당사국 총회,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 회의(PC-OC), OECD 뇌물방지협약작업반 회의 등 중요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COVID-19로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으로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초국가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함
- COVID-19로 범죄수익환수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사이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부정축재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

## □ 주요실적

- COVID-19로 인해 국제공조업무가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범죄인인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사안별 맞춤형 송환 지속 추진
- 금년에는 COVID-19로 여러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아울러 직항노선이 대폭 축소되어 제3국을 경유하는 등 범죄인의 국내 송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주요 범죄인을 적극 송환함(총 64명 송환)
  - '21. 1. 베트남 사범당국과 협력하여, 자유형미집행자(징역 10월) 체포하여 국내 송환
  - '21. 1.~2. 스페인 사범당국과 협력하여,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기기의 현금을 절취한 페루 국적의 특수절도범 2명을 COVID-19로 유럽공항이 폐쇄되어 카타르 도하공항을 경유하여 국내 송환('21. 1. 1명, '21. 2. 1명)

- '21. 2. 독일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범죄인을 체포하여 국내 송환
  - '21. 6. 미국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러시아 국적 해킹 조직원을 긴급인도구속하고, '21. 10. 위 범죄인을 미국으로 인도하여 초국가범죄에 긴밀히 대처함
  - '21. 9. 중국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범죄인을 체포하여 국내 송환
  - '21. 9. 대만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자유형이 확정된 마약사범을 체포하여 국내 송환
  - '21. 10. 체코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특수강도를 범하고 같은 날 카타르로 출국하여 체코로 도피한 범죄인을 국외 도피 3주만에 체코 프라하에서 체포하여 독일을 경유하여 국내 송환
  - '21. 10. 미국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범죄인을 체포하여 국내 송환
  - '21. 11. 베트남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범죄인을 체포하여 국내 송환
  - '21. 11. 아르메니아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국외 도피한 범죄인을 아르메니아에서 체포하여 국내 송환
  - '21. 12. 독일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영국 런던에서 우리 국민을 강간한 영국 국적 범죄인을 독일에서 체포하여 국내 송환
- 국제회의 참석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 강화하고, COVID-19로 인한 국제회의 참석 및 양국 간 대면 협의가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등 적극 활용
-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관련, 스리랑카 법무부와 공조 회의[화상회의 5회 : '21. 2., '21. 5.(2회), '21. 6., '21. 8.]
  -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관련, 사법공조를 위한 법무부장관 친서를 스리랑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달('21. 7.)



-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관련, 스리랑카 법무부와 공조 대면 회의 ('21. 8. 스리랑카 콜롬보)
-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관련, 스리랑카 현지 공판기일에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서 화상으로 증언('21. 11. 한국 증인 10명 증언)
- UN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회의(화상회의 4회 : '21. 1., '21. 2. '21. 3., '21. 5.)
- 미국 법무부와 범죄인인도 관련 협의(화상회의 2회 : '21. 3., '21. 4.)
-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화상회의 5회 : '21. 3., '21. 4., '21. 6., '21. 9., '21. 10., 참석 1회 : '21. 12.)
- UNTOC 이행점검 회의[화상회의, '21. 3.(2회)]
- UNODC 사이버범죄 전문가 그룹 회의(화상회의 '21. 4.)
- 필리핀 법무부와 범죄인인도 관련 회의[화상회의 2회 : '21. 5.(2회)]
-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PC-OC) 회의(화상회의 '21. 5., 참석 '21. 11.)
- 영국 내무부와 범죄인인도 관련 협의(화상회의 '21. 6.)
- UN반부패회의(UNGASS)(화상회의 '21. 6.)
-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이행점검 회의(화상회의 '21. 6., 참석 '21. 9.)
- 아세안 초국가범죄에 관한 고위급 회의(SOMTC)(화상회의 '21. 7.)
-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설립 회의(화상회의 '21. 9.)
- 그리스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21. 10.)
- UNTOC 작업반회의('21. 10.)
-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회의(화상회의 '21. 11.)
-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당사국 총회('21. 12.)
-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추진
  - 강간, 특수강도 및 고액 사기 등 범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한 범죄인 33명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외국 사법당국에 청구
  - 외국 사법기관과 국제형사사법공조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피의자 소재 파악뿐만 아니라 계좌추적, SNS 및 IP 조회, 범죄수익환수 등의 공조를 적극적으로 실시(1,026건)

※ 국제형사사법공조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1.
외국에 대한 요청	99	103	109	181	236	220	240	320	375	420	668
외국의 요청 접수	78	113	80	78	110	137	160	195	235	202	262
계	177	216	189	259	346	357	400	515	610	622	930

- 법무연수원 교육을 통하여 범죄수익환수역량 강화
  - 범죄수익환수 절차의 이해(151명 수료,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 범죄수익환수 전담 검사 교육(21명 수료,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 범죄수익환수 전담 수사관 교육(19명 수료,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 주요성과

- COVID-19로 인한 입국제한 등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송환이 어려웠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주요 범죄인을 국내 송환함(총 51명 송환)
  - 특수강도 범행 당일 두바이를 거쳐 체코로 도피한 범죄인을 3주 만에 체포하여 국내 송환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인 송환 추진
-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총 930건 공조 이행)
  - 2020년 622건의 공조를 이행하였으나, 2022년 1,026건의 공조를 이행하는 등 범죄 국제화에 적극 대처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외국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함
- 이에 따라 양자간 또는 다자간 긴밀한 국제협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COVID-19로 인한 입국제한으로 외국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에 다소 애로가 있음. COVID-19가 진정되면, 주요 현안이 있는 국가와 양자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할 예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국외도피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 역량 강화를 위한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UN 반부패협약 회의 등 국제회의 참가 계획 사전조사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 동 과제의 목표는 국외도피사범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제협력을 통한 범죄인인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외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임. ‘국제형사공조 실적’, ‘부정축재 범죄수익환수 역량강화 실적’이라는 현 성과지표는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우수	■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과 협업하여, 국외 도피 사범을 신속히 체포·송환하여 사법 정의 실현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7.9%	■ 국제형사공조실적 (점수)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COVID-19로 인한 외국의 입국제한 등 범죄인 국내 송환에 장애요인이 많았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범죄인 51명을 송환하고, 적극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실시하여 2021년 930건(2021. 11. 현재, 2020년 622건)의 공조를 실시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실적 미제출
8	홍보 노력도	미흡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1-2)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검찰·법무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감찰·감사 활동, 검사적격 심사 참고 자료 및 검찰·법무부 소속기관 직원들에 대한 세평 자료 수집·분석, 집중적이고 강화된 감찰활동 구현을 위한 감찰 인력 확대,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을 통한 비위 발생 예방,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일상감사 시행,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으로 직장 내 갑질 근절에 기여
- 정기감사 이외 특정정책분야 집중점검으로 단기간의 사무감사 한계 보완 및 주요비위 직접조사 확대 비위사건을 적시에 감사함으로써 내부비위 근절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익명신고시스템(Help-Line) 활성화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개편 확대 등 외부부패통제인 더욱 강화, 청렴우수기관 청렴파트너 선정 정보 공유, 찾아가는 현장감사, 부패취약분야 근무자 대상 워크숍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20년 종합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미흡분야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식개선이 필요한 계층 부패위험진단 평가, 장·차관, 고위직 등 청렴라이브에 참석 청렴가치 공감 확산에 솔선수범,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활동 활성화
-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 점검을 실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통한 공공기관의 공정성 강화,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자의 비위행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공공분야 전반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 다만, 감사의 전문인력 확보 노력 등으로 감사인력이 일부 증원되었으나 감사 대상기관에 비해 여전히 감사 인력은 부족하여 감사의 성과 등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보다 내실있는 감찰·감사 활동을 위해 충원된 직원의 정식 직제화 필요

## □ 주요실적

- 비위직원 관리를 위한 사정 활동 및 감찰 직접조사, 인력 증원을 통한 감찰활동 강화, 법무부 특정 부서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 규정 마련
  -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을 통한 검찰에 대한 감찰·감사 기능 강화,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2021.4.27.시행) 제정으로 감찰담당관실을 비롯한 관련부서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취득을 제한하여 사전적인 비위 근절 방안 마련.
  - 감찰 활동 팀을 작년보다 1팀 증원하여 8개조로 편성운영, 암행 감찰활동 강화
  - 법무부 소속 비위직원, 검사적격심사 대상자, 검찰직 5급 이상 승진대상자의 인사 참고자료 등을 수집하여 감찰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법무연수원 직원 성비위 사건, 제주교도소장 품위유지의무위반 사건, 본부 검찰사무관 음주운전 신분은폐 사건,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한 前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상확인 등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위사건 조사
- 특정정책분야 종합적인 점검으로 단기간의 사무감사 한계 보완 및 선제적인 해결방안 도출로 '국민안전 및 인권보호' 등 강화(연 2회)
  -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방안의 적시성 및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여 성공·우수사례는 전 기관 확산·공유, 실패·지적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시스템 개선에 기여
  - 지속적으로 청렴도 점수가 낮은 '보관금품(舊영치금품) 접수'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민원인 관련 청렴도 저해요인 원인 분석으로 부패 유발요인(횡령·유용 등) 사전 차단 및 부패방지 제고방안 모색
- 취약시기·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공공분야에 대한 공정성 강화,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
  - 자체 공직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한 수시 복무감사 활성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근무해태, 시설 및 장비 점검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 공직기강 강화(연4회)

-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 점검을 통한 채용비리 근절과, 법무시설조성 공사현장 특정감사로 안전사고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 예방(연 2회)
- 감찰관실 제보사건 비위 직접조사 확대로 감찰관실의 신뢰도 제고 및 조직 내 부패 척결(연 7회)
-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투명성 제고(연중)
  - 반부패·청렴 추진체계를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확대하여 전 기관·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 반부패 추진 동력 강화
  - '17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이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도약, '21년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인원·역할 및 기간관 교류 확대로 외부 부패통제 더욱 강화
  - 청렴도 평가 결과 저조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분석, 금품 접수 등 특정감사 실시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 외부 청렴도 제고 및 조직문화 개선 지속 추진으로 내부청렴도 제고

## □ 주요성과

- 암행 감찰활동을 통해 예방적·선제적으로 비위 발생에 대응
  - 감찰사건 직접 조사를 통한 복무기강 확립은 물론, 법무부 소속 비위직원, 검사적격심사 대상자, 법무부 소속 5급 이상 승진대상자 등의 비위사항, 인사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감찰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함으로써, 법무·검찰의 인사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 '20.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21.3.~7.), 소극행정 적발 관련자 징계 조치 및 개선방안 발굴·시정 조치
  - ※ 54개 교정기관 방역 실태 비교 분석 후 실제적 개선방안 모색
- 부패방지 제고를 위한 '보관금품(舊영치금품) 접수'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21.2.~8.), 민원실 접수 및 온라인 입금 등 접수단계, 보관금 관리(배부반환) 등 단계별 부패요인을 점검, 개선방안 검토·시행
  - ※ 청렴시민감사관 실지감사에 참여(관계직원 의견청취 및 자유토론)

- 설추석 명절, 하계기간 특별점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전 소속기관에 대한 복무감사를 통해 비위행위 사전 차단 및 근무기강 강화(연 4회)

※ 총 4회 실시(설·추석 명절(1월, 9월), 특별(5~7월)) : 총 55건(주의·시정 등)

- 정부법무공단 등 5개 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21.9.~10.) 거창구치소 등 2개 기관 신축공사 현장 특정감사(연 2회)

※ 채용실태 점검('19.12.~'20.12. 신규채용 및 정규직전환) : 총 34건 조치(경고주의, 통보 등)

※ 공사추진 실태 점검('21.10.~11.) : 현장관리 실태, 설계변경 적정성, 공사하도급 실태 등

- 본부의 청렴정책(갑질 등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을 소속기관과 공유, 소속기관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 소속기관장 참여 청렴협의체 발족(총 123개 기관), 전 기관에서 '청렴멤버스' 모집·선발(총 42명)

- '21년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확대 개편, 외부 부패통제 더욱 강화

① 청렴시민감사관 신고 센터(7th+ 청렴함) 신설(장관 제안 사항), 신고사건 처리

②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장관지시사항'으로 관리

③ 외부청렴도 저해요인 특정감사 참여(수용자 보관금품 감사)

④ 특정사안에 대한 제언·자문 역할을 위한 '특별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집중 추진,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강화로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 ①갑질피해 계층(신규 300명) 대상 청렴워크숍 개최, ②대국민 공모전(청렴 이모티콘, 시서화, '21.10.~12.), ③'청렴의 날' 운영(매달 첫째주 월요일, 연 12회 실시)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법무부 일선기관 직원들의 갑질신고 민원·국민신문고 민원 등 시스템을 통한 감찰요구 민원의 급속적인 증대로 감찰관실에 의한 직접 감찰에 한계
- 감찰·감사업무의 전략적이고 효율적 접근을 위해 감찰·감사의 협업 강화, 다양한 정보수집 수단 확보 등도 필요
-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비대면 감찰 업무 매뉴얼 개발 등 감찰업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노력

- 수도권외의 코로나19 방역조치 4단계 지속으로 일부기관에 대한 감사가 보류되었으나 '21. 11.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전 기관 감사 완수함
- 법무부 종합청렴도 2년 연속 3등급으로 원인분석을 토대로 구성원의 참여, 각종 조사·평가 및 특정감사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법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및 우리 부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 2021년도 연간감사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 설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의 목표는 공정하고 엄정한 감찰·감사활동, 청렴한 공직문화 구현을 통해 법무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므로, 수감 기관에게 감사의 전문성·공정성·감사관의 태도 등을 조사하는 자체감사활동 만족도 조사 지표는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감사원과 협력관계 유지, 감사관련 제도 시행, 감사계획 추진 및 후속 조치사항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8.5%	■ 상시 암행 감찰 활동 횟수 등 5개 지표
6	정책 효과	미흡	■ 반부패·청렴추진체계를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확대하여 전 기관·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반부패 시책의 연계 및 추진 동력 강화, 반부패·청렴정책 확산 기반 조성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전직원 대상 부조리한 경·조사 관행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6건
8	홍보 노력도	우수	■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적 18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국가 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함

## □ 주요실적

- 기존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에 대한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지속적인 단속 전개
  -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일선청 단속 실적을 매월 보고받음으로써 주요 부패범죄 단속 독려 계속

## □ 주요성과

-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305명 기소, 95명 구속('21. 1.~12.)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검찰의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기대만큼 상향되지 않음
-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 및 대외적인 수사결과 발표 등 홍보활동을 통해 부패척결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결과 분석 및 전국 부패범죄수사 전담부장 화상회의를 통해 5대 중대 부패범죄 및 특별수사의 향후 효율적인 수사 방안 논의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공직사회와 재벌에 대한 비리를 엄단하는 등 5대 중대범죄를 척결하여 국가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은 국가 부정부패 방지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보통	■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경이 적극 협력하여 주요 반부패 범죄의 실체를 규명한 모범 사례로, 개정 형사법 하에서의 뉴모델 제시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4.1%	■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
6	정책 효과	미흡	■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5대 중대 부패범죄를 적발하고 엄단함으로써 국민 신뢰도 제고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실적 미제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9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2-3)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 ■ (전략목표2) 5대중대 부패 엄단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공공기관의 납품비리, 철도·선박·원전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사 진행
-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보조금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사회 전반의 비리에 적극 대응
- 변호사의 탈세·수임 관련 비리, 브로커의 사건 수임 비리, 재판·수사 기관 공무원의 사건 청탁 관련 비리 등 법조비리에 대한 전면적·상시적 단속 활동 전개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갈취, 각종 이권·청탁 개입 행위 등 사이버 언론사범 집중단속
- 교육 인프라의 부실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는 교육관련 비리를 근절하여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 □ 주요실적

- 지역토착형 비리, 교육비리, 법조비리, 방위사업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부패범죄에 상향된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부 신뢰 회복에 기여
- 법조비리 관련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철저한 자금추적을 실시하여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함으로써 범행동기를 원천 차단하고 포탈 세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 불법이익의 철저한 박탈로 브로커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원천적으로 제거

## □ 주요성과

- 국가보조금 비리 단속 지속 실시
  - 보조금 비리 사범 15명 기소, 3명 구속, 부정수급액 약 154억 원 적발('21. 1.~12.)
-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방탄사업 납품비리, 군납 브로커 알선수재 사건 등 방위사업비리 사범 5명 기소, 1명 구속('21. 1.~12.)
- 공공기관 비리, 공공인프라 안전 관련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 실시
  - 공기업·공공인프라 비리 사범 총 9명 기소('21. 1.~12.)
- 각 검찰청에서 법조비리, 사이버언론비리 등에 대한 상시 단속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 법조비리사범 32명 기소, 8명 구속('21. 1. ~ 12.)
  - 사이버언론 및 토착비리사범 125명 기소, 40명 구속('21. 1. ~ 12.)
- 교육시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 관련 비리 근절
  - 교육비리 사범 18명 기소, 3명 구속('21. 1. ~ 12.)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비리가 여전하여 효율적·집중적인 수사가 필요
-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범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직역별 숨은 비리에 엄정 대응 예정
- 법조비리에 대한 지속적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건 알선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근원적인 차단에는 한계가 있음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법조비리, 사이버언론비리, 교육비리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실시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법조주변 비리 사범 통계 분석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 중앙지방법무사회의 업무협약을 통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형사고발 등을 약속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방위사업 비리, 국고보조금 비리, 법조브로커 비리, 사이비 언론 관련 범죄, 교육계 비리 등 전문직역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체계 확립을 통한 숨은 적폐를 청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토착비리 단속 및 부패대응 활동은 정책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유관기관 수사의뢰 등 이첩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유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고유출과 직결되는 방위사업 분야 등 부패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하여 엄정 대응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59%	■ 지역 토착비리 단속 및 부패대응 활동(점수)
6	정책 효과	미흡	■ 관급공사, 방위사업 등 안전 관련에 대한 공공기관의 민관유착 비리를 적발하고 엄단함으로써 공공기관 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실적 미제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4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전략목표2) 5대중대 부패 엄단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부처간 원활한 소통) 시민공익위원회의 조직과 설치 부처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다양한 부처의 이견이 존재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공익법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였음('21. 5.)
-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이견협의) 차관회의 상정 직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으나,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적극 대응하고 협력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여 협의 도출('21. 7.)
- (입법절차 정상 진행) 공익법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1. 7)된 후 정상적으로 입법절차 진행 중임

## □ 주요실적

- 법안 성안
  - '21. 1. ~5. 행정안전부와의 이견조율 및 법제처 심사
  - '21. 6. ~7.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이견 협의 및 수정안 마련
  - '21. 7.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 법안 국회 제출
  - '21. 7. 국회 제출
  - '21. 8. 국회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1. 11. 국회 소위원회 직회부
-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 '21. 7. 국회 법사위 박성준 의원실 방문 및 법안 설명
  - '21. 8. 정기국회 의원워크숍 법사위 분임토의 참석 및 법안 설명
  - '21. 8. 여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 법안 설명
  - '21. 9.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위원실(진선희 전문위원) 방문 및 법안 설명

- '21. 10. 법사위 박성준 의원실 방문 및 법안 설명
- '21. 10. 법사위 여당 간사(박주민 의원실) 방문 및 법안 설명
- '21. 11.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위원실(진선희 전문위원) 방문 및 법안 설명

○ 시행령 개정을 위한 기초작업

- '21. 9. 11. (개정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21. 10.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감시기구인 '한국가이드스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시행령 개정 시 참고사항 조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언론홍보, 국회에 대한 홍보·설명 등 여러 수단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공익법인 등 총괄기구 설치 관련 해외 입법례 분석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에 관한 일본 및 프랑스 법제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의뢰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의 목표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를 통하여 정경유착 비리에 의한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방지,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 실시,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 체계화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지표는 공익법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과정지표). 향후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보완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우수	■ ‘시민공익위원회’의 조직형태 및 소속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 등 다양한 부처와 충분한 소통을 실시한 결과 ‘법무부 산하 행정위원회’ 형태의 최종안을 도출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68%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공익법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점수)
6	정책 효과	보통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공익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통일성 및 관리·감독의 투명성 확보하고 공익법인의 사회적 위상 및 공신력 제고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공익법인법 세부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미흡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2-5)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법무부 국가소송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15. 9. 출범)을 중심으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국가 상대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철저한 환수 추진 중
- '21년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 관련 38건의 국가소송(소가 및 신청액 합계 1,278,472,020원)을 제기하고, 총 10,239,947,371원을 환수하는 등 적극적 환수 업무 수행
- 향후 지속적인 환수소송 제기 및 소송지원활동을 통해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 주요실적

- '21. 1~12. 부패비리·입찰담합 및 우체국 보험사기 등 관련 환수소송 제기 및 지급명령 신청 총 38건(소가 및 신청액 합계 1,278,472,020원)
- '21. 1~12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 유관기관 실무자 간 업무협의 총 22회 실시
- '21. 1~12. 10,239,947,371원 환수 완료

## □ 주요성과

-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 관련 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38건 제기(소가 및 신청액 합계 1,278,472,020원)하여, 국고손실 환수의 발판 마련
  - '21. 1. 16. 서울고검 수행 국유 부동산 환수 국가소송 제기(소가 354,880,393원)
  - '21. 1. 29. 경남경찰청 반복·허위신고 관련 국가소송 제기(소가 5,790,337원)
  - '21. 4. 23. 조달청의 관수 레미콘 입찰담합 사건 국가소송 제기(소가 200,000,100원)
  - '21. 6. 24. 병무청의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축사업 입찰담합 관련 국가소송 제기(소가 500,000,000원)

- '21. 1.~12. 우체국 보험사기 관련 34건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지급명령 신청(소가 및 신청액 합계 217,801,190원)

※ '15. 9. 22. 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 후 '21. 12.까지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 국가소송 총 688건 제기(소가 합계 약 955억 5,251만원, 서울고검 국가1팀 수행 사건 포함)

○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 관련 국가소송 10건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국고손실 환수의 근거 법리 및 집행권원 확보

- '21. 4. 17.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공사 입찰담합 관련 국가소송 일부승소 확정
- '21. 4. 17.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인터넷지도사업 입찰담합 사건 관련 국가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결정 확정
- '21. 6. 4. 서울고검 수행 이완용 후손에 대한 국유 부동산 환수 국가소송 전부승소 확정
- '21. 6. 18. 경남경찰청 반복·허위신고 관련 국가소송 전부승소 확정
- '21. 7. 3.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 사건 관련 일부승소 확정
- '21. 10. 20. 국군재정관리단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 숙소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관련 국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 '21. 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골재채취 구조조정 지원금 부당수령 관련 국가 소송 3건 전부승소 확정
- '21. 11. 3. 우정사업본부 보험사기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일부 승소 확정

○ 국고손실액 총 10,239,947,371원 환수 완료

- '21. 3. 18.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집행을 통해 76,553,561원 환수
- '21. 5.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인터넷지도사업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해 420,000,000원 환수
- '21. 6. 24.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공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집행을 통해 9,622,483,110원 환수
- '21. 10. 29. 경남경찰청 반복·허위신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해 390,397원 환수

- '21. 12. 16. 서울고검과의 협업을 통해 성폭력 무고사건 변호사보수 환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액 및 이자 5,645,283원 환수
- '21. 1.~12. 우체국 보험 사기 사건 32건에서 피해액 114,875,020원 환수
- ※ 15. 9. 22. 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 후 '21. 12.까지 합계 약 182억 6,840만원 환수

- 국고손실 환수 유관기관 실무자 간 간담회 및 유선·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 협의를 총 22회 진행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소송수행자 등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우정사업본부, 해양수산부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 교육 총 3회 실시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국고손실 환수소송에는 소송을 수행하게 될 소관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 제기 및 수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소관부처의 인식 제고 필요
  - ※ 소관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개최(연중 상시)
  - ※ 소관부처 소송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고손실 환수송무 교육 실시(연중 상시)
  - ※ 소송총괄관 회의를 통해 국고손실 환수 업무 소개 및 협력 당부(매년 1회 개최)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후 '21. 2. 까지의 국고손실 환수소송 진행상황, 실무자 간담회 개최 현황 등을 사전 검토, 소송총괄관회의 개최('20.12.)를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 소송총괄관 의견 수렴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 환수가능 사례 발굴, 환수금액, 승소 건수 등을 포함한 국고손실 환수 실적 지표는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보통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군복원단 구매 입찰당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전달받아 검토 후 방위사업청과 소제기 관련 유선 협의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	■ 국고손실 환수 실적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컨트롤타워 로서 환수소송 지속 발굴 및 소송지원 활동으로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한국가이드스타의 연구원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 실시
8	홍보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손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 현행법 체계와의 충돌 등의 문제로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가의 적극적 재정지출이 요구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
- 실현가능한 제도 도입 관련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및 법안 발의 의원실, 관계 부처 등과 지속적 소통 및 협의 추진

## □ 주요실적

- 국민소송제도 도입 로드맵 수립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국가 재정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소송제도 도입 로드맵’을 수립함
- 관계부처 의견 조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부 간담회 추진 등이 어려울 수 있어 그에 따른 순차적 일정 지연 등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 등과 유선 및 공문을 통해 비대면 적극 협의
- 국회 협의 진행
  - 법안 발의 의원실(박주민 의원실)과 유선·이메일을 통해 법안 통과 등에 대한 의사 협의 사항 등 전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국회 내부 논의사항 점검
- 국민소송제도에 대한 해외 유사 입법례 조사
  - 국민소송제도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해 해외 유사 입법례를 조사함

□ 주요성과

-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논의된 국민소송 제도의 주요 쟁점 파악에 기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의 적극적 추진이 어려웠는바, 이로 인해 국회 법사위 논의 등이 지연되어 연내 법안 통과 불투명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미국과 일본의 국민소송제도 분석을 통해 비교법적 시사점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 도출, 국민소송제도 관련 심포지엄 개최 협의를 위하여 법안 발의 의원실(천정배 의원)과 간담회 개최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국민소송제 도입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인 국민이 예산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 동 지표는 국민소송제도 입법을 내용으로 하는 지표로서(과정지표) 향후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보완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미흡	■ 기획재정부와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국민소송제도 법률안의 쟁점들을 일별하여 향후 개선점을 발굴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6.7%	■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실적
6	정책 효과	보통	■ 방위산업 비리 또는 사인(私人)을 위한 부적절한 세금 집행 등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이미 지출된 국고를 환수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향상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국민소송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 조회 회신
8	홍보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2-2)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의 방지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상장회사 경영주,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관련 범죄,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입찰담합, 불공정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하여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등 조세포탈범죄를 단속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정보공유 및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도모를 원활히 추진함

## □ 주요실적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범죄 철저 단속
  - 가격 및 입찰 담합 사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우월적 지위 이용 하도급 관련 금품수수 등 집중 수사
  -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공유주요현안 협의 등 긴밀한 협업관계 유지
-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기업사냥꾼 등 정상적 기업활동 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구조적·고질적 금융·증권 비리 척결
-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1. 9. 1.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
  - 협력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검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수사관과 금융·증권분야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6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수사팀의 직접 수사와 검사의 사법통제, 기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도입

## □ 주요성과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입찰비리 등 불공정거래사범 17명 단속('21. 1~12.) 등 경제질서 저해사범 엄단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및 대출비리 등 금융 관련 비리 사범 95명 단속, 4명 구속('21. 1~12.)
- 재정·경제 분야 비리 등을 중점척결비리로 선정하고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행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 탈세 등에 대해 효율적·지속적 단속
  - 자료상 등 조세포탈 사범 60명 단속, 6명 구속('21. 1~12.)
- 회계·금융 등 전문분야의 수사력 보강을 위한 '반부패수사 전문수사관 보수교육(회계분석·금융거래추적)' 실시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수사 종결 후에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클린피드백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부패유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 등은 전국 단위로 조직적으로 은밀히 진행되므로 세무자료상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필요
- 자료상·역외탈세·해외비자금 조성 범죄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 지속 강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21년도 증권범죄, 불공정 거래 관련 기사 분석 및 한국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의 목표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형 경제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주가조작 단속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행위 적발 실적 등으로 구성된 현 성과지표는 정책에 대한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미흡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5.3%	■ 경제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6	정책 효과	미흡	■ 검찰 수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엄중히 과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 세탁범죄를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기소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실적 미제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4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24-1)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 (전략목표2) 5대중대 부패 엄단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총 평

-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 기술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일선 28개청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문체부, 특허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 실시
-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신속한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 요청에 부응하고 검찰 수사역량을 전문화·집중화하는 차원에서 '15. 11.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17. 12. 수원지검을 「첨단산업 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하고, '18. 2.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였으며, 전문검사, 전문수사관, 특허수사자문관 등 인적·물적 전문자원을 중점검찰청에 집중 배치하여 전문 수사시스템을 구축

□ 주요실적

- 2021년도 단속 실적('20. 1. 1. ~ '20. 12. 31.까지 누계, 아래는 구속)

총 계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게임산업,영화및비디오,음악산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15,987	22,208	3,816	4,637	4,319	5,696	7,522	10,991	330	884
70	99	5	7	6	7	59	83	0	2

※ 기간 중 검찰인지 52건 87명(구속 4건, 8명)

## □ 주요성과

- 검찰 지식재산권 수사력 강화
  - 특허청과 합동으로 '지식재산 맞춤형 과정' 실시(21. 5.)
  - 저년차 검사 특허·지재 분야 역량강화 과정 실시(21. 6.)
- 첨단·지능화하고 있는 기술유출·지식재산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체계 구축 확립
  -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사경 지휘방안 수립·실시(21. 1.)
  -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사범 등 단속(연중)
  - <특허수사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시행(21. 4.)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온라인 범죄 증가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의 정보 교류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20년 불법복제물 유통량 통계 분석,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교류를 통해 최신 동향 정보공유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의 목표는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문화산업 콘텐츠 등 지식재산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합동단속 실적, 교육 횟수 등으로 구성된 현재 성과지표는 정책내용을 대표하고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보통	■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검,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간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근절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협력 체제 구축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2%	■ 지식재산침해사범대응 실적(점수)
6	정책 효과	미흡	■ 온라인 상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인재 및 수사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수사의 전문성 제고, 최근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빠르게 대처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실적 미제출
8	홍보 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4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전략목표2) 5대중대 부패 엄단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위해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초안 마련 후 마무리되지 못했던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8년만에 인권위와의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인권모니터링을 중앙부처 최초로 실시하여 인권 침해 요소가 높은 분야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함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제도화와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정부가 미가입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가입 추진 및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이행입법위원회 운영을 통해 법률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유엔 개인진정 답변, 국가별정례 인권검토(UPR) 보고서 작성 등 국제인권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임함
- 시민사회, 관련 기관 등과의 소통과 적극적 의견수렴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 간담회, 공청회,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시 인권정책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등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함

## □ 주요실적 및 성과

-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옹호 정책 총괄**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이 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인권정책기본법」 주요 내용

- ▶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명시
-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장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지자체 인권기구' 설치 근거 마련
- ▶ 학생, 공무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및 정부의 인권교육 지원
- ▶ 국가보고서 제출, 국제인권기구 권고 사항의 국내정책 반영 노력의무 규정 등

-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국무회의 구두보고, 입안보고(1차) ('20. 11.)
- ※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간담회('21. 2.~3)
- ※ 법무부-인권위 공동소관 합의, 관계부처 및 인권위 의견 반영한 수정안 입안보고(2차) ('21.5.~6.)
- ※ 입법예고 실시, 사전영향평가 진행 ('21.6.~8.)
- ※ 법률안 입법 추진 현황 파악 및 의견 조화와 협의를 위한 김영배 의원실 및 최기상 의원실 방문('21.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21.9.)
- ※ 법제처 심사('21.12.),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21.12.), 국회제출('21.12.)

-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이행점검 강화 추진
  -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년도 이행상황 점검 완료

< 제3차 NAP 2020년도 이행상황 현황(분야별) >

분 야	추진 과제	2020년도 이행상황				
		소계	과제 완료	정상 추진	추진 지연	기타
합 계	272	272	19	248	3	2
■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25	25	2	21	2	-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2	12	-	11	1	-
■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23	23	7	16	-	-
■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8	8	-	8	-	-
■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93	93	8	85	-	-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69	69	1	68	-	-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32	32	1	30	-	1
■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10	10	-	9	-	1

-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력 강화를 위해 이행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2차 시범과제 13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실시
- ※ 인권정책자문단 전체회의(2회), 분과별 위원회(3회)를 통해 이행상황 결과에 대한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각 소관부처에 이행상황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하여 피드백 회신

-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적극 지원
  - ※ 법무부안을 반영한 인재근의원 고문방지법 제정안 발의('20. 7.), 동 법안 법사위 소위원회 회부 중('20. 9.~)
  - ※ 입법 추진 현황 파악 및 적극 지원을 위한 인재근 의원실 방문·협의('21. 8.)

- 인권 침해요소가 높은 분야에 대한 사전 평가와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신규 실시

### 인권모니터링 제도 개요

- ▶ 법무부는 인신구속, 수용자 관리 등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고, 특히 검찰·보호·교정·출입국 등 다양한 직렬이 각자 업무처리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인권 침해 위험성이 상존
- ▶ 제3차 NAP 및 인권위 권고 이행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추진시 국내·외 권고 준수 여부, 재량권 행사 시 인권보호방안 구비 여부 등 자문

※ '21. 4.1.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규정」(훈령) 제정·시행 후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각 실국본부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4.8.) 하였고, 총 6건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22년 접수 예정 과제

- ① 「수강명령 등 집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② 「보호소년등의 면담 신청권」 제도, ③ 무자격외국인 단속 관련 지침/매뉴얼

#### < 2021년 인권모니터링 결과 >

관리 번호	대상 명칭 (소관부서)	결과 통보서 (인권국)	이행상황 통보 (소관부서)
2021-01	<b>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일부개정안</b>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주요 개정사항 - 2차 피해의 예방 및 처리 - 고충상담센터 지원 - 조사결과 보고 -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제10조 제10항 각 호 개선 · '정당한 이유없이' 문구 삭제(2~7호) · '합의 중용 행위' 추가	반영 완료 (6. 10. 시행)
		② 제16조 제5항 개선 · 고충심의위원회 의견 진술방식 변경 (대면 → 비대면)	반영 완료 (6. 10. 시행)
		③ 공직유관단체 포함 관련조항 개선 · 적용범위에 산하단체 추가(1~2조) · 이관 이후 조치에 대한 기준 명시(22조2항)	반영 완료 (6. 10. 시행)
		④ 예방 또는 발생방지 대상을 '2차 피해가 아닌 '2차 가해'로 변경 (1조, 4조4호, 10조8항 및 9항, 20조5항)	반영 곤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입법취지 존중)
2021-02	<b>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b> (형사기획과)  ※ 주요 개정사항(7조 2항 2호) - 군인 임용에 필요한 신원조사 회보 중 소년부송치·기소유예 삭제	<원안동의> · 인권위 권고(소년부 송치)보다 낮은 단계인 기소유예도 회보에서 제외 · 기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필요	-
2021-03	<b>외국인보호소 CCTV 운영방식 변경 계획</b> (이민조사과)  ※ 주요 내용 - 영상 표출 거실 한정 취침시간(22시~06시) 영상 비표출 - 청주('21.6.~ 1년 시범) → 화성·여수('22.6.~ 확대)	① 변경 시행시기 개선 · 확대 적용을 앞당겨 시행('22.6.→'21.7.)	수정 반영('22.1. 시행) (사건·사고 분석 필요)
		② 표출방식 변경 시간대 개선 · 법령에 보장된 취침시간(22시07시) 외 영상 표출	반영 완료 (6. 28. 시행)
		③ 보호소 지침의 영상처리기기 관련 조항 개정 · (청주) 5조3항(근무원직), 14조5항(업무분장)	반영 예정 ('21.12.까지 개정)
		④ 변경 대상기관 범위 및 조사방법 개선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보호실 확대 적용, 합리적인 실태조사 실시	사후보완 예정 (인력·시설 등 제반여건 확보 후 순차적 확대)
		⑤ 보호시설 내 사건·사고 감소 대책 마련	사후보완 예정 (사건·사고 분석 등)



관리 번호	대상 명칭 (소관부서)	결과 통보서 (인권국)	이행상황 통보 (소관부서)
2021 -04	<b>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b> (범죄예방기획과)  ※ 주요 개정사항 - 기관 시설에 따른 관할 조정 - 보충교육을 교육생 전반으로 확대 - 출석 유도를 위한 상·벌점 조정 - 공결 처리 기준 신설	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조항 신설 · 대상 : 「인권위법」 제2조제3호 차별행위 · 대상자 인권 보장 노력 명시	반영 완료 (11. 1. 시행 예정)
		② 재의뢰 교육 이전 취득 이수시간 인정 개선(제40조 제2항) · 교육 종류별로 차별 없이 적용	반영 완료 (11. 1. 시행 예정)
		③ 중독예방 교육과목 운영 개선(제30조) · 예시 과목 추가 : 스마트폰, 게임 · 3일 이상 교육과정에서 특정 과목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운영	반영 완료 (11. 1. 시행 예정)
		④ (기타) 교육내용 문구 개선 · 인성교육 필수 요소 반영(자존감, 사회성 기술, 피해자공감 등)	반영 완료 (11. 1. 시행 예정)
2021 -05	<b>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일부개정안</b> (사회복지과)  ※ 주요 개정사항 - 수용자 간 발송할 수 있는 편지의 범위를 제2조에서 정의하는 유형보다 좁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 삭제	① 실무상 좁게 해석·운영할 수 있는 용 어 개선(제19조) · 대상 : 편지 → 서신	반영 완료 (‘22. 1. 시행)
		② 「우편법」 상의 용어 체계와 통일화하여 서 신 개념 명확화(제2조) ·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의 서신 정의 추가	반영 완료 (‘22. 1. 시행)
2021 -06	<b>형 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b> (교정기획과)  ※ 주요 개정사항 - 범죄 피해자인 수용자가 사건의 공범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제100조 표제 수정(공범 분리 → 사건 관련자 간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이행계획(공범 분리 → 공범 등 분 리)보다 더 권고 결정에 충실하게 개선</li> <li>○ 권고 결정에 따라 「수용관리 및 계 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52조 등이 개정되어 부호체계 정비 완료</li> <li>· 공범부호 → 식별부호</li> </ul>	-

## ○ 국제인권기준과 국내인권정책의 연계성 제고

- '21. 제1차 국가인권정책협의회('21. 5.) 서면 개최 및 대국민 하이브리드 공청회('21. 4.) 등을 통하여 우리 정부 인권정책에 대한 유엔의 우려 및 질의를 파악하고, 국제기준에 비추어 현행 정책을 검토,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
  - ※ 대용 감방 폐지 등 교정시설의 물리적 여건 개선 및 기타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대표적 개선 사항 제시
- 강제실종방지협약 등 미가입 국제인권협약 가입 추진 및 관련 국내 이행법률 마련
  - ※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및 협약 가입안을 마련하여 외교부 조약과에 협약 가입 국내절차 의뢰('21. 8.), 10차에 걸친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입법위원회' 운영('20. 11.~'21. 9.)을 통해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권고안 마련(관련 정부입법 추진 중)
-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20. 5.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행의 일환으로, 법무부-인권위 공동 주최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21. 12.)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최근 핵심적 인권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배포('21. 12.) 등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
  - ※ '21년 국내 기업 발간 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비재무정보 보고서 등) 기준 국내 동향 보완 및 주요국 인권실사 관련 최근 입법례를 보강하여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수정본 마련, 최종 전문가 감수를 거쳐 '21. 12.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관련 부처·기관, 기업협회 등에 약 2,400부 인쇄·배포 및 법무부 누리집 게시

## ○ 국제인권대응

- 자유권규약위원회 신규 개인진정사건(3877-2021) 관련 정부 측 답변서 제출 및 기존 개인진정사건(2273-2013) 후속조치 보고서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회신, 유엔 제48차 인권이사회 사형제 문제 결의안 찬성 표결 검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우리 기업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연루 관련) 및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검토 등 국제인권 사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미 정부가 매년 전세계 국가에 대해 발표하는 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해 주한미대사관에서 보내온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부 답변을 취합·송부, 연례적 반복 질의에 대한 답변 보장 및 추가적 정보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내용의 질적 제고 노력
- 우리정부의 유엔 인권협약 이행보고서 공통핵심문서(Common Core Document)\*에 최근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우리부 관련 내용 수정 및 보완하여 외교부를 통해 제출
  - ※ 인권협약 관련 심의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당사국 기본정보를 담은 공통 문서로, 협약 이행 심의 시 활용
- 외교부 소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우리부 답변 취합·송부등 우리 부 소관 핵심 국제인권조약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력
- 인권위 주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쟁점 간담회(10. 29.)',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 쟁점 간담회(11. 24.)' 등 토론 참석, 미가입 국제인권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 방향성 검토
- 유엔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 후 권고 이행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국제인권매커니즘에 적극 대응 및 협조 의지 재표명
  - ※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연임 중임

-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차별철폐협약'제9차 국가보고서,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권리협약'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우리부 답변 취합·송부 등 국제인권조약 가입·비준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성실 이행
- '인권의 주류화' 관점에서 인권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국제인권 카드뉴스,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등

## ○ 정책 소통 강화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년 이행상황 결과보고서 작성 및 '19~'20년 시범과제(30개) 이행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 수정·보완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21.10.) 및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전체회의 개최('21.11.)를 통해 인권 전문가 의견 수렴
-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홍보하고, 전국민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년 이행상황 책자를 발간하여 국회, 행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 약 700부 배포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대국민 하이브리드 공청회 개최('21. 4.)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21. 5.)를 통해 부처 간 유기적 인권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및 국민 의견 수렴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21. 8.) 및 토론회('21. 12.) 개최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 및 특별회의 개최('21. 10.)를 통하여 우리 부가 제정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 제고 및 일반 국민, 국내외 기관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 의견 수렴
- 국제인권 카드뉴스,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국제기구 결의, 외국의 모범적 인권정책 사례 등을 국내 부처·지자체 담당자 및 일반 국민에게 안내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인권정책기본법 관련 부처간 이견 발생으로 인한 입법 지연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처와 법안 내용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하여 입법 과정 일부 지연
- 지속적인 이견 조정 및 해소 절차를 통해 연내 법안 국회 제출하였으며 향후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 지속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인권관련 내·외신 정보 수집 및 분석 및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범정부적·통합적 인권정책체계를 수립하여 인권을 우선하는 정책 및 법제를 구축하고, 국제인권기구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체계를 마련하여 국제인권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정책 관련 의견 제시 횟수나 각종 국제인권회의의 참석 횟수 등을 포함하는 현 지표는 정책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우수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와 의견 조정 및 보완을 거쳐 입법추진 일정 공유 및 공동소관 추진 합의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4%	■ 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 옹호활동(점수)
6	정책 효과	우수	■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절차를 규정하여 국제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국제인권기구에 국내인권상황을 보고하고 설득하는 데 추진동력을 얻게 됨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 6건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2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6-1)국민 인권 보호 강화 (6-3)국가폭력피해자지원 ■ (전략목표3) 인권위 권고 수용률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지속적인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인권침해 예방·구제 및 주제별 실태 조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수준 향상

- (실태조사)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 등 심도 있는 구금·보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종래 대상기관의 인권상황 전반을 일반적으로 점검하던 실태 조사 방식을 넘어 인권 사각지대에 있거나 인권향상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다수 기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점검하여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의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
    - \* 1차 주제로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 실태점검'을 선정하여 서울소년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개선안 마련('21.4~'21.8.)
  -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설, 환경, 수용처우 등을 연중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정기 실태조사 실시
    - \* '21년 광주교도소 등 12개 기관 실시
- (직접조사) 화상조사 적극 실시로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인지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조사를 최소화하면서도 직접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인권국내 노후 화상조사장비 1기를 정비하고, 화상조사시스템 확대 구축 ('20년 55개 기관 → '21년 57개 기관)
  - 이를 통해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진정한 면담 등 직접 조사율을 높임으로써 신속한 조사 및 인용·구제

## □ 주요실적

### ○ (실태조사)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 사각지대 발굴·해소('21. 11. 24.현재)

- 정기 실태조사 :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총 12개 기관을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토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으로 인권침해 예방

▲ 개선조치 47건, 설문조사 782명, 직접면담 164명 실시

\* 현재 9회분 실태조사 결과 보고 완성, 3회분 결과 보고는 추가 보고 예정

▲ '21. 12. 말경 4개 우수 기관 선정하여 포상예정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 서울소년원 등 5개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안 마련(개선조치 18건)

▲ 의료과장 등 직원 60명 면담, 수용소년 직접 면담 158명, 설문조사 525명 실시

### ○ (직접조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구제

- (직접조사율) 인권침해사건 3,608건 접수,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구제를 위한 직접조사 2,298건 실시('21. 11. 24.현재 직접조사율 63.69%) - 직접조사 2,621건('21. 12. 31.현재)

- (소속기관 화상조사시스템 구축)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면전진정'\*사건에 신속·적극 대처하기 위해 화상 조사 시스템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

\* 구체적인 진정내용 기재 없이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접근성을 강화한 방법

▲ '21 상반기 강원북부교도소 등 2개 기관 화상조사시스템 추가 설치하여, '21. 11 현재 총 교정기관(54개소) 및 치료감호소 등 57개소에 구축 완료

- (인권국 화상조사실 개선 등) '21. 7. 법무부 인권국 화상조사실의 노후화된 화상조사 장비 1기 교체, 조사관별 시간표 작성하여 공실 없이 풀 가동

- (현장조사반 편성) 중요 인권침해 사건 또는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 신속한 현장조사로 개선·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에 대비한 인권침해사건 현장조사반 편성 운용
- (인권교육) 인권교육 개선 및 지속 실시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교육 집행 인원과 횟수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미진하나, 과거 일방적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한 능동적·참여형 교육 강화 등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실시에 주력
  - 각 직렬별 업무 현장과 밀접한 내용으로 인권감수성훈련 과정 운용
    - \* 교정 4회 69명, 보호 2회 35명, 출입국 1회 15명 인권감수성훈련 실시
  - 수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 지속 추진
    - \* 검사 3회 36명, 검찰수사관 10회 94명 1:1 맞춤형 교육 실시
  -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인권개념의 변화, 강의법 등을 익힐 수 있는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 신설·운영
    - \*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 총 3회 47명
  - '21. 6. 공모절차를 통해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였고, 지방 소재 일선기관을 배려해 전국 단위로 출장가능한 강사진을 확대함
    - \* 직역별 현황 : 법조계(10), 학계(19), 복지기관(2), 작가(1) 등
    - \* 출강지역별 현황 : 전국(11), 수도권(16), 영남(8), 강원(2), 충청(1), 호남(1), 제주(1)
  - '21. 9.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해 기존 과정의 전반적 진단 및 신규 콘텐츠 개발 추진 중
- (인권보호상황평가, 우수인권공무원 선정·포상 등)
  - 검찰청(59개), 교정기관(53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7개), 소년보호(10개), 보호관찰기관(57개) 등 196개 기관에 대한 '20년 하반기와 '21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 실시하여, 시정·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우수기관 포상하는 등 피드백 강화



-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 즈음에 법무부 소속 우수인권공무원(검찰 6명, 교정 4명, 범죄예방 2명, 출입국 2명 등 총 14명)을 선정하여 포상 실시 예정
- **(인권보호상황 평가제도 개선)**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반영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 활용실적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평가제도 지속 개선

**[ 인권보호상황평가 제도란 ]**

- 법무부는 소속 기관(검찰, 교정, 출입국, 범죄예방 4개 직렬 총 196개 기관)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 및 평가 하기 위해 인권 관련 통계실적 및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연 2회 인권보호상황 평가 실시
- 반기별로 우수기관 15개소(최우수기관: 5개소, 우수기관: 10개소) 선정·포상하고, 우수사례 전파, 개선점 발굴 등을 통해 인권환경 개선

-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등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 실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함으로써 제도 안착 도모

\* 추가 항목 및 추가 사유

-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개최 건수: '21. 4.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제8기)에서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권고
- 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의뢰 건수: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비경제적 지원 제도 중 스마일센터 연계 등 심리치료 지원 제도 활성화 도모
-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은 대부분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경 단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정을 독려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촉진
- 난민 인정률 및 인도적 체류허가율: 난민 신청자의 인권향상 위해 일선 기관의 적극적인 난민심사 및 인도적 고려 독려

○ **(노역수형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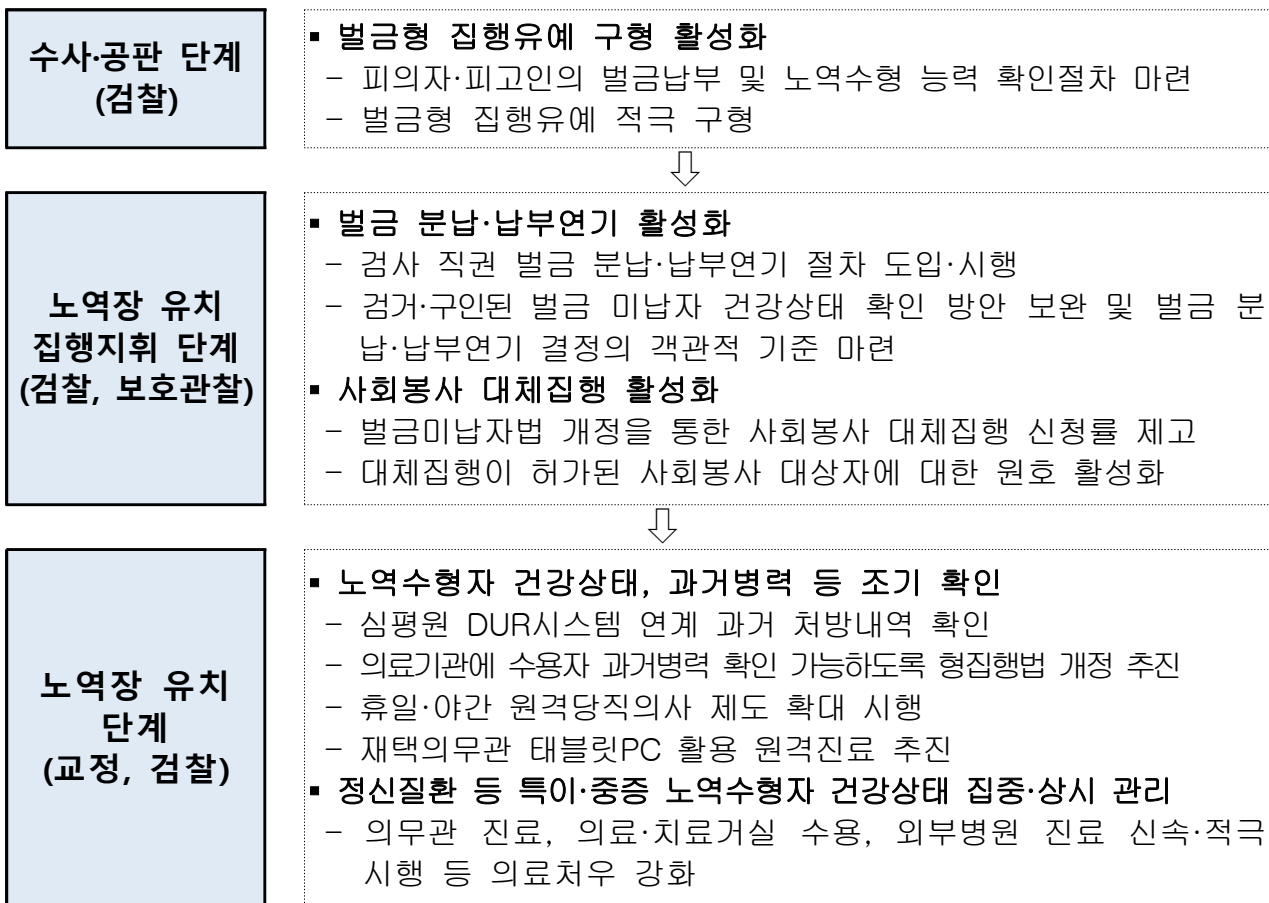
-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팀장: 인권국장) 구성] 교정시설 내 벌금 미납으로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입소 후 단기간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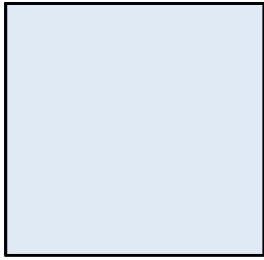
- ▶ '20. 10. 7. TF 발족 및 1차 회의(8가지 집중 점검 및 개선과제 선정)
- ▶ '20. 10.~11. 2차~6차 TF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개최
- ▶ '21. 2. 개선방안 초안 마련
- ▶ '21. 3. 해당 기관에 개선방안 권고(통보)
- ▶ '21. 8. 이행상황 중간 점검 및 결과 통보

**[ 최근 5년간 사망 노역수형자 분석 결과 ]**

- 최근 5년간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 비율은 2.8%인데 비해, 같은 기간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14.4%(17명)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사망한 노역수형자 대부분은 부랑자, 노숙자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건강 상태가 불량(알코올중독, 간 질환, 폐·심장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하였고, 입소 후 단기간 내 사망하였으며, 평균 3.1회 노역 유치 전력이 있었음
- 위 분석을 바탕으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검찰국,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노역 집행 단계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활동 결과) 노역수형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실시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





- 입소 후 일정기간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 CCTV 계호, 이상 행동·증상 발견 시 신속히 보호·진정실 수용 등 집중 관리
- 보호·진정실 시설·환경 인권 친화적 개선
- 중증질환자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센서’ 시스템 도입
- **신속한 노역집행정지**
- 원격·비대면 임검, 예외적 임검 생략 제도 도입 추진



**출소 등  
석방 단계  
(교정, 검찰)**

- **알코올중독 노역수형자 출소 전 치료·재활 조치**
- 노역수형자에 대한 알코올중독 검사 실시, 중독 수준, 잔여형기 등에 따라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마련·실시
- **신체·정신·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벌금 분납·납부연기 결정, 노역 집행 정지 결정, 노역 만료 등 석방 시 보호·연계 조치**
- 경찰, 사회복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연계

- 개선권고안에 대하여는 검찰국(대검찰청), 교정본부, 범죄예방 정책국에서 자체 세부계획 수립 후 개선 추진 중
- 개선방안 권고 후 매 3개월 도과시마다 중간 점검 실시 중(인권국)

\* '21. 8. 중간점검 결과

- 1) 수사·공판 단계 :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와 더불어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소법 개정 추진 중('20. 12. 개정안 발의)
- 2) 노역 집행지휘 단계 : '21. 6. 벌금미납자법 개정안 발의(①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에 관한 고지의무 신설, ② 집행기간 연장, ③ 무자력 요건 판단근거 및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 신설),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원호 지원 방안 마련(최초 면담 시 경제력, 건강 상태 등 파악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 및 생계·주거·교통·의료비 및 직업 훈련 등 지원)
- 3) 노역장 유치 단계 : DUR 연계 가능한 차세대 교정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보호·진정실 증설 및 시설 개선, 원격당직의사 제도의 토대가 되는 간호사 증원, 활력징후 감시 시스템 도입' 지속 추진 중
- 4) 출소 등 석방 단계: 모든 노역수형자에 대하여 알코올중독검사 실시하여 필요 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 출소 시 유관기관의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직접 통보하여 연계하는 체계 구축 중

○ (전국 교정시설 수용처우 관련 수용자 전수조사 실시)

- '21. 4. 장관 지시\*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생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용자 대상 전수 설문조사 실시

- \*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익명으로 설문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교정행정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21. 4.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 수용자 전수조사 추진 경과 >**

- ▶ ’21. 4. 전수조사 계획 수립(인권국, 교정본부 교정혁신추진단)
- ▶ ’21. 5. 설문 문항 작성 및 설문조사 실시
  - ※ 전국 54개 쉰 교정기관(민영교도소 포함) 전체 수용자 51,038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46,504명 응답, 응답률 91.1%)
- ▶ ’21. 6.~8. 설문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초안 마련

-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을 바탕으로 우리 교정행정에 맞게 설문 구성

- \* 만델라 규칙은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국제규범으로(각 분야별 통칙 규정과 수용자 특성별 특별 규정으로 구성), 그 중 통칙 규정을 토대로 10개 영역(기본사항, 시설, 급양, 건강 및 의료, 조사·징벌·보호장비, 권리구제, 외부교통,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직업훈련, 기타) 51개 문항으로 구성함

- 설문 결과, 그간의 교정행정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이 여전히 시설·처우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문 결과 주요 사항 ]**

- 시설 분야에서는 과밀 수용, 냉·난방 등 열악한 환경 개선, 급양(給養)에서는 급식의 질과 식단의 다양성 및 의류·침구의 청결 상태와 지급 수량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강 및 의료 관련하여 운동시간 확대, 외부진료기회 확대, 외부교통 관련해서는 접견, 전화 시간 및 횟수 확대 등의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용자 교육·교화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확대와 질적 개선, 교도관에게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1)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강화 :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전문과정 확대,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 2) 청원 처리절차 개선 : 청원현황 및 후속조치 주기적으로 장관 보고
- 3) 수용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수용공간 확충 및 대도시 교정시설 수용밀도 완화('21.~'28.), 수용동 냉난방 장치 단계적 설치 및 화장실 등 개선
- 4) 운동처우 개선 : 운동면적 기준(1인 4㎡) 도입, 1회 운동인원 제한 규정 개정
- 5) 의료처우 개선 : 의료진 설명의무 도입,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 6) 작업·직업훈련 개선 : 작업장려금 점진적 인상,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훈련과정 확대
- 7) 급양 개선 : 1일 급식 단가 증액 및 취사장 현대화, 의류의 보온성 및 통기성 향상, 자비구매물품 품목 확대 및 품질 개선
- 8) 보호실 개선 : 인권 친화적 설계기준 마련
- 9) 외부교통권 확대 : 접견 및 전화통화 시간 및 횟수 점진적 확대
- 10) 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개발

○ **(검찰 '인권보호관' 역할 강화)**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격상하고, 기관장 직속으로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인권 업무의 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개선

- \* 실무상 기존의 인권보호관(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겸임)의 인권업무 관련 역할은 미미하고, 인권감독관이 사실상 '인권보호관' 역할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무에 맞게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 직위 부여

- **인권보호관을 고·지검 및 차치지청 전체로 확대 배치**

- \* 기존에는 전국 18개 지검 및 5개 차치지청(성남, 안산, 안양, 부천, 고양) 등 23개청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하였으나, '21. 하반기 전국 6개 고검, 18개 지검 및 10개 차치지청 등 34개청 모두에 인권'보호'관을 인사발령
- \* 부처 이하 지청은 현행대로 지청장이 인권보호관 겸임

-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검찰 업무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보고 등 일반 업무 및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

상조사, 6대 범죄 검찰 직접수사 시 적법절차 위반 여부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

- \* 검찰 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전담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21. 하반기 신설된 '인권보호부'와 함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

○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 조사 실시) 진상 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언론 브리핑

- '21. 9. 28. 언론 및 인권단체가 제기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직접 해당 보호외국인을 면담하는 등 10. 28.까지 5차례 현장조사 실시
- 그 과정에서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상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조사 결과 특별계호 및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보호 절차에서의 적법절차 강화 방안,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 등 제도 개선 추진

□ 주요성과

○ 선제적이고, 일선 기관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업무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으로 인권 사각지대 적극 해소 및 인권침해 예방

- 통상적으로 처리해오던 '정기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신고' 사건 처리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이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함
- ▲ 인권 사각지대에 있거나 인권향상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다수 기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점검하고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의 주

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하여 소년 보호기관 의료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21.4~'21.8.)

- ▲ 교정본부와 함께 협업하여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21.4."~5.)
- ▲ 노역수형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21.3.), 이행상황 중간 점검 및 결과 통보('21.8.)
- ▲ 보호 외국인 보호과정에서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1.11.) 등
- ▲ 일선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 활용실적을 인권보호상황평가 항목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 안착 도모('21. 7.) 등

#### ○ 인권침해 신고 접근성 강화

- 구체적인 진정내용 기재 없이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으로 인권침해 신고 접수 지속적 증가

\* '17년 2,782건 → '18년 2,934건 → '19년 3,435건 → '20년 3,967건 → '21.11.24. 현재 3,608건

#### ○ 직접조사 비중 높여 실질적인 인권보호 강화

- 코로나로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화상조사시스템 증설(57개 기관 구축 완료), 화상조사실 개선하고, 화상조사실 풀 타임(full time) 가동하는 등으로 직접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여 실질적인 인권보호 강화

#### ○ 능동적·참여형으로 교육 개선을 추진하여 인권교육 내실화 기반 마련

-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 신설·운영하고, 인권정책연구소와 '인권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능동적·참여형 인권교육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수행 중으로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 법무·검찰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

- 검찰·교정·출입국·보호 등 각 직렬별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연 2

회 실시하여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권보호 우수기관 선정·포상, 직렬별 우수 인권공무원 선정·포상,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등으로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개선·보완 할 사항)

(비정상적인 조직 성과관리 한계 및 조사관 역량 강화)

- 조사관 인력 부족분 3명을 교정, 보호, 출입국에서 단기 지원 받아 충원하여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단절 우려가 있고, 업무 특성상 일선 기관의 과오나 문제점 등을 적극 지적·발굴해야 함에도 근무평가는 원 소속기관에서 받고 있는 등으로 조직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음 → 지원 근무 조사관 3명의 정식 직제 전환으로 장기 근무 추진 필요
- 인권침해사건 신고 증가에 따른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과 사건 처리 효율화를 위해 조사관 회의 수시 개최로 숙련된 조사관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 공유 및 조사기법 전수, 인권침해 사건 조사 매뉴얼 발간 등 조사관 역량 강화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6,972건 중 교정시설 관련 민원 1,681건(24.1%), 검찰관련 민원 146건(2.1%), 출입국관련민원 43건(0.6%)으로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인권침해에 대한 자체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효과적인 구제기능 확보로 법무 행정 전반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 활동 실적, 인권침해사건 직접 조사실적 등 현 성과지표는 어느 정도 정책 내용을 포함하나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실적 등 정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등 집중 점검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다수의 기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점검하고 주제별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도입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9%	■ 실태조사 활동 실적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으로 인권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실현 및 지속 개선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실태 전수 조사 등 의견수렴 6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9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6-3)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 (전략목표3) 인권위 권고 수용률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인권보장과 범죄 대응체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선진법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사실무·통계자료 등을 수집·검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련
- 2회에 걸쳐 개정 완료하였고, 현재도 긴급통신제한조치 법원 사후허가 필수화 등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논의 중

## □ 주요실적

## ○ 긴급통신제한조치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고, 대검·경찰·국정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긴급통신제한조치 실시 후 반드시 법원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1. 3. 11. 국회 제출('21. 6. 18. 법사위 상정 및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 □ 주요성과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제거('19. 3. 28. 정부안 제출 → '19. 12. 31. 시행)

## &lt;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주요 내용&gt;

- ▲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간 신설 (기한없음 → 원칙적 1년, 안보 범죄 3년)
- ▲ 위치정보 추적자료·기지국 수사 시 요건 강화 (보충성 요건 없음 → 신설)
- ▲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범위 확대 (기소중지·수사 중 미통지 → 통지)
- ▲ 통신사실확인 사유통지 신청권 부여 (사유 미통지 → 통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경과>

- ▲ '18. 1. ~ 9. 통신비밀보호 관계기관 TF 4회 개최
- ▲ '18. 3. 통신비밀보호법 연구용역 회신
- ▲ '18. 10.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련
- ▲ '18. 10. ~ '19. 6. 법사위 전문위원에게 개정안 설명 등 3회 회의
- ▲ '19. 3.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 제출
- ▲ '19. 9.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관련 국회 토론회 참석
- ▲ '19. 1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행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제거('20. 2. 10. 의원 발의 → '20. 3. 24. 시행)

####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주요 내용>

- ▲ 인터넷 회선 통신제한조치 집행 종료 후 법원 승인청구 제도 도입
  - 보관 등이 필요한 취득자료에 대해 법원에 승인 청구, 미청구 또는 미승인 자료는 폐기, 폐기결과보고서 법원 송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경과>

- ▲ '19. 4. ~ 10. 통신비밀보호 관계기관 TF 4회 개최
- ▲ '19. 1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련
- ▲ '19. 12. ~ '20. 1. 송기현 의원실에 설명 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전달
- ▲ '20.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원 발의
- ▲ '20. 2. ~ 3. 법사위 전문위원에게 개정안 설명 등 2회 회의
- ▲ '20. 3.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행

- 긴급통신제한조치 법원 사후허가 필수화 등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의 사후허가 받지 못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 폐기, 폐기결과보고서 기록 첨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경과>

- ▲ '20. 1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련
- ▲ '20. 12. ~ '21. 2.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 '21. 3. 차관·국무회의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21. 4. 법사위 전문위원에게 개정안 설명
- ▲ '21. 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및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 사후통제 필수화 등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 ○ 향후 조치계획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실시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범죄 대응체계에도 공백이 없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24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을 분석하는 등 사전조사 실시</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과제는 통신수사 남용 방지와 국가안전 보장·범죄 대응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 영장 필수화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동 지표는 대표성이 있음</li> </ul>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li> </ul>
4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국정원과 패킷감청 시연을 실시하였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 서식 초안 마련</li> </ul>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 정비 준비 실적</li> </ul>
6	정책 효과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한 모든 경우에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 마련</li> </ul>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검찰청·국정원·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 및 실무 자료 및 통계 확보</li> </ul>
8	홍보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적 미제출</li> </ul>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적 미제출</li> </ul>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2)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li> <li>(전략목표1) 범우·검찰신뢰도</li> </ul>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요구됨
- 과밀수용해소를 위한 거창구치소 등 7개 신축사업과 원주교도소 등 7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된 대구교도소 배수시설을 추가보완 하는 등 수용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
- 「수용공간확충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및 단년도 사업 대상(증·개축)을 발굴하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완화 효과 창출 가능한 계획 수립 및 교정시설 신축을 통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동시에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과밀수용 해소 대책 수행
- 노후교정시설 수용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안정된 수용환경을 제공하여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직접적인 수혜자인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후 계획에 참고하여 향후 정책에 환류

## □ 주요실적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주민 친화적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7개 사업)
  - 공 사 중 : 거창구치소
  - 사업 계획 : 남원·화성여자·태백교도소, 경기북부·광주·대전구치소
- 노후교정시설 환경개선 및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이전 사업 추진(7개 사업)
  - 사업 계획 : 원주·대전·전주·창원·안양·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충을 통한 과밀수용 완화
  - 「수용공간확충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영월교도소 등 20개 기관에 현장방문하여 단기간 공사로 과밀수용 완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대상 발굴 및 계획 수립

- 사전자료 조사 및 증축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 등을 조사함으로써 정책현장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원활한 협업 구축

○ 지속적인 기타 수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수용거실 난방시설 개선 및 수용동 외단열 공사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및 석면 철거, 내진설계 보강
- 수용동 공용냉장고 설치 및 TV교체 등으로 인한 편의시설 증진

□ 주요성과

○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체결 및 부지선정으로 사업 신속 추진

- '21. 5. 17. 남원교도소 부지 선정 및 장관님 보고
- '21. 8. 18. 법무부-남원시 업무협약(MOU)체결

○ 태백교정시설,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선정

- '21. 8. 24. 법무부 2021년 제2차 예타면제사업 선정  
※ 예비타당성면제사업 신청 4회 보류 후 5회째 선정

○ 「수용공간확충 실무추진단」 구성 및 수용동 증·개축 계획 수립

- '21. 8. 20. 수용공간확충계획 수립
- '21. 10. 15. 「수용공간확충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성과지표 ‘수용환경개선 수용자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 재고

- 정책수혜자인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의 환류 효과를 기대했으나, 정책수혜자 표본추출시 환경개선 기관 또는 거실에 만족도 조사 대상 수용자가 계속 생활하지 않고 이동을 하는 특수성으로 대상수용자 표본 선정이 어렵고 효율적인 정책 의견 수렴이 어려움
- 시설수준·기관의 사정 등으로 환경개선은 한계가 있으나 수용자의 기대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나 환경과 상관없는 ‘본인의 처우에 대한 만족도’로 작성하는 등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인 갈등 해결을 핵심으로 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협업을 통한 갈등관리 노력’ 지표를 신설함으로 성과지표를 보완하였고, ‘수용환경개선 만족도’ 지표의 지속여부는 재고 필요

○ 교정시설 조성 정책 추진에 대한 대국민 의식 재고 노력 필요

- 국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혐오감·각종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대국민 의식 재고 노력 필요
- 지자체·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설명회·주민간담회 등 적극적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여 갈등관리 노력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관련 실무협의회 참석, 원주교도소 이전 관련 원주 부시장 면담('21. 2.) 등 교정시설 이전 신축 관련 의견수렴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수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협업을 통한 갈등 노력 실적' 지표를 신설하여,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에서 필수적인 갈등 민원해소 과정을 지표에 반영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우수	■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 추진 관련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선정 어려움이 있었으나, 남원시와 협업하여 후보지 선정 완료 및 업무협약(MOU)체결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3%	■ 수용환경 개선 수용자 만족도(%) 등 3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노후교정시설 수용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안정된 수용환경을 제공하여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직접적인 정책수혜자인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보완 및 차후 계획에 참고하는 등 환류 노력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태백교도소 이전 관련 신축 업무 협의 등 의견수렴 6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6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14-8)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 분야 역량 강화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총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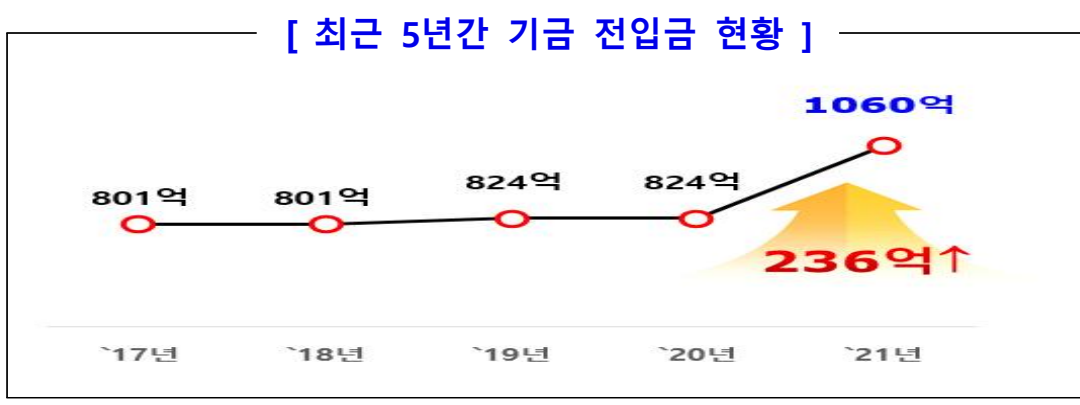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직접 지원이 확대되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한 화상상담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가 강화됨

□ 주요실적

- 벌금 전입금 확충, 구상금 징수 강화, 아동사업 복지부 이관 등 노력으로 범죄피해자 재원 대폭 확충
-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제출로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직접지원 강화
- 코로나19에 대응한 화상상담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취약계층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 수사단계 취약계층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 확대

□ 주요성과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대폭 확충 및 직접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벌금 전입비율\* 상향(6→8%)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을 전년도 대비 29% 대폭 확충(824억원→1,060억원)



- 구상실적 우수기관 포상, 매뉴얼 개정 및 KICS시스템 개선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징수 실적을 전년도 대비 약 49% 대폭 상향(1,242→1,846백만원)하여 추가적 재원 마련

[ 연도별 구상금 징수 현황 ]

단위 : 건/백만원

구상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구조금	43	540	60	809	72	840	66	906	70	630	72	1,139
경제적지원금	16	37	66	205	117	352	168	603	204	612	260	707
합계	59	577	126	1,014	189	1,192	234	1,510	274	1,242	332	1,846

- 아동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이관으로 여유자금(148억원) 확보되는 등 재원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22년부터는 직접지원 비율이 상향(23.1→28%)되어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범죄피해자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
  - 고의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범죄피해구조금을 과실 범죄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21. 11.)
  - 법안 통과 시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대상이 약 2배(1,309건→2,998건) 이상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직접지원 사업 비율이 최대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21. 11. 국회제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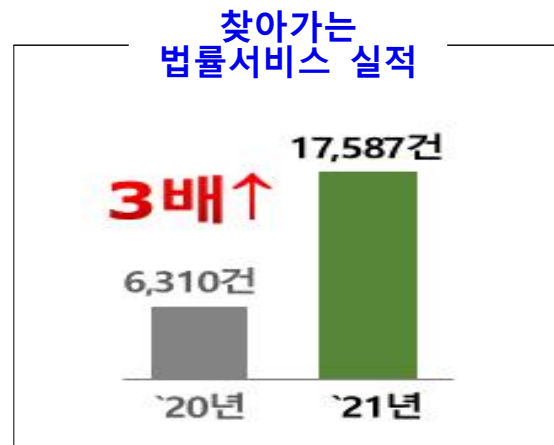
-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를 현행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 피해' 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과실범죄 피해** 까지 확대
- ※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 가능



○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 (화상상담 확대) 코로나19로 찾아가는 법률지원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 취약계층이 PC·모바일을 통해 주거지 내에서도 쉽게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을 전년도 대비 6배 이상(2,568→16,365건) 전면 확대 시행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빅데이터 기반 AI 법률지원시스템' 및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등 비대면서비스 개발 지속 추진 중



- (법률홈닥터 지원 강화) 법률홈닥터를 활용한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로, 법률 사각지대 최소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

※ 법률홈닥터 법률서비스 제공 건수 : 41,500건('21. 12.기준)

○ **위기상황에 대응한 피해자 지원 확대**

- (군 성폭력피해자 지원) 국방부와의 업무협약(MOU)를 통해 군 내 성폭력 범죄 발생 시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연계한 법률적·경제적·의료적 토털지원 서비스 및 스마일센터와 연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 군 내 양성평등담당관(120명) 및 성고충상담관(50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통합지원서비스 교육 실시('21.12.)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설치하여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관계 구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등이 시행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상황임

- (광주 철거건물 피해자 지원) 피해 현장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지원단을 파견하여 긴급생계비(2,160만원), 법률상담, 심리치료, 법률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 지원

- (채무위기 아동 지원) 법률지식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미성년자 지원을 위해 법률복지팀을 신설,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민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확대를 위한 목포스마일센터 신규 개소**

-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효과가 입증되었고, 범죄피해 유형 중 정신적피해를 경험한 비율(88.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목포스마일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전국 16개 광역단위 심리지원 서비스망 구축('21. 3.)

※ 신규개소 현황 : '17년 의정부→'18년 청주,울산→'19년 창원→'20년 제주→'21년 목포

[스마일센터 치료 전후 효과] (2020년 스마일센터 백서)

	외상후 스트레스 (PDS)	사건충격척도 (IES-R)	우울척도 (K-BDI-II)	불안척도 (K-BAI)
치료전	30.15	51.90	29.88	26.82
치료후	12.59 (58% ↓)	22.43 (57% ↓)	13.09 (56% ↓)	10.11 (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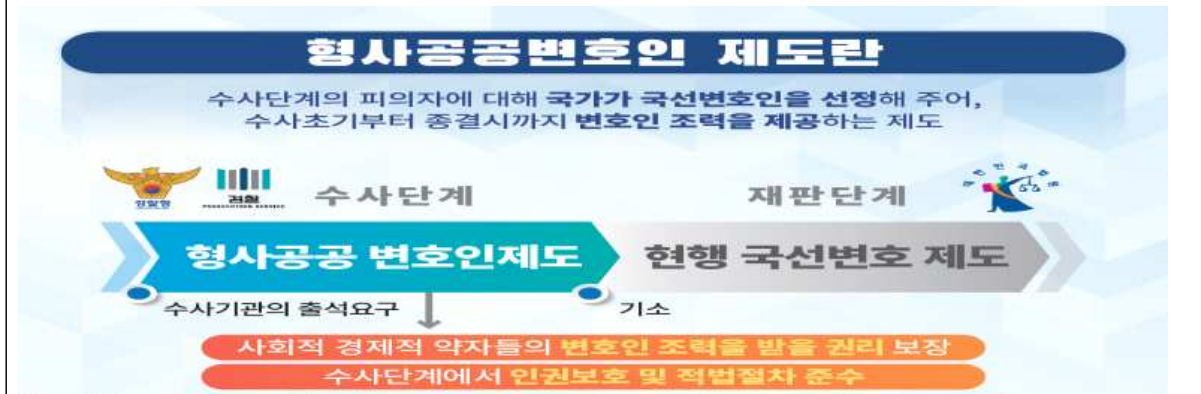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개정(3월), 심리 치료 효과분석을 위한 스마일센터 백서 발간(4월),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 연구용역 수행(12월), 학술 심포지엄 개최(12) 등 심리치료 업무 전문화 및 서비스 개선 노력 지속

○ 사각지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 현 정부 국정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 7.)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

- 수사단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피의자에 대해 수사초기부터 수사가 종결 될 때까지 상담,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
- ※ 미국, 영국 등 OECD에 속한 35개 국가 중 29개국(85.9%)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 운영 중



- 반대의견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방문설명\*, 공청회 개최, 언론브리핑 및 기고문 게재\*\* 등 법안 국회 제출·통과 노력 지속

\* '21년 방문설명 실적 : 국회, 법원, 대한변협, 기재부 등 총 13회

\*\* 언론브리핑 2회(4월, 7월), 언론기고 2회(7월, 8월)

- 제도 도입 시 중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약 49,000명 중 약 40%인 2만여 명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수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경제적 지원 확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속 확대\* 및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 심리적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비,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계비·학자금,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장례비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확대로 범죄피해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21. 12. 기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 9,771백만원

- (스마일공익신탁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직원 및 국민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한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한 추가지원\* 실시(6월,12월)

\* 성폭력피해자, 살인피해자 유족 등 33명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 126백만원 추가지원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법원·검찰·언론·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배포\*\*

\* 이행성과 평가 및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총18회) 및 자문회의 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 확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총 884기관에 1,050부 배포

- (전문성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 114명에 대한 전문가양성 교육을 통해 불특정 상황에서의 종사자 업무처리 능력 개선(11월)

○ **범죄피해자 인식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대국민 홍보 전개**

- (다링캠페인)\* 적극적 홍보 및 워크온 걷기챌린지 도입 효과로 전년도 대비 참가자 약 6배 이상 대폭 증가\*(7,380→50,575명)
  - \* 웹·모바일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워크온 걷기 캠페인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
  - \*\* 참가자 현황 : 비대면 걷기 홍보 5,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2,870명, 워크온 걷기 챌린지 42,705명
-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홍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책자·리플릿 제작 배포(3월), 전국 1,000여개 병·의원 키오스크 광고(5월), 서울역 공익영상 광고(12월), 범죄피해자인권대회, 범죄피해자 작품전시회 및 희망수기 공모전(11월) 개최
  - \*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단위 지방자치단체까지 책자 7,800권, 리플릿 106,400부 배포
- (스마일센터 홍보)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배포(4월), UCC 홍보 동영상 공모전(8월), 온라인 플랫폼에 홍보 배너 게시(11월),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12월)
- (법률홈닥터 홍보)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 배포(4월), 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5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구조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통과노력 지속 추진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 분석</li> <li>■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지도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과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적 지원 강화로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국민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 범죄피해자 종합지원 건수, 스마일센터 만족도,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건수 등을 포함하는 현 성과지표는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이 있음</li> </ul>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li> </ul>
4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본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TF'를 설치하여 법률구조사업을 개시하고, '21. 7. 정식 직제화하여 안정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li> </ul>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 등 4개 지표</li> </ul>
6	정책 효과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부와 협의를 토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21년부터 기금에 대한 벌금 전입비율을 상승(6→8%)시켰고, 전년도 대비 전입금을 약 29%(824→1060억원) 대폭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li> </ul>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법무부 간담회 등 의견수렴 6회 실시</li> </ul>
8	홍보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2회</li> <li>■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생활밀착형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li> </ul>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li> </ul>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4)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li> </ul>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li> </ul>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해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외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특성에 맞는 법률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 진술조력인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사례관리회의 및 상근 진술조력인과 비상근 진술조력인 간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권역별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하였고, 자문단 회의를 통한 신규 진술조력인 선발절차 보완 및 신규 교육 대상자 선발하여 아동·장애인 범죄 피해자 특수성에 맞는 진술조력 지원을 강화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등을 통해 아동인권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함

## □ 주요실적

- 피해자 국선변호사 필요적 선정 및 지원대상 확대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 지원('21. 3.)
  - 기존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였으나,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에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21. 6.)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개선 노력
  - 제도의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연구과제로 의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실시('21. 7.)

-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대면 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 등을 기본 업무로 지정하여 기본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의 국선변호사 보수 기준 개정, 시행('21. 10.)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 및 실태조사 정례화·의무화 추진 ('21. 12.)
-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지원 급증
  - 아동학대 이슈 발생 등으로 진술조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건수 대폭 증가
    - \* '21. 1. ~ '21. 10.까지 총 3,623건 지원으로, 전년동기 2,184건 대비 65.89% 증가
  -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에 상근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21. 3.)
  - 진술조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다양한 지역 기반 및 경력,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풀 운영 도모 ('21. 6. ~ 11., 15명)

구 분	기 간	내 용
(1) 신규양성 기본교육	'21. 7. 5. ~ 7. 9. 4박5일, 합숙교육	형사사법절차, 정신병리, 장애 및 발달 수준별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이론교육
(2) 신규양성 심층실무교육	'21. 8. 16. ~ 8. 20. 비대면 Zoom교육	진술조력 실습 및 역할연기, 보고서작성 연습 등 실제 진술조력 활동에 대비한 실무교육
(3) 신규양성 기본실무교육	'21. 8. 28. ~ 11. 13. 매주 토요일 10회, 비대면 Zoom교육	진술조력 사례 및 특정주제에 대한 토론과 수행한 과제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진행

- 월별·권역별 사례관리회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 도모
  - 매월 상근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성폭력·아동학대범죄 진술조력 사례에 대한 발제 주제를 선정하여 사례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조력방법에 대한 토의를 진행

일 자	회 의 주 제
1. 26.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 사례
2. 26.	폭로를 원하지 않는 장애아동 진술조력 사례
3. 23.	구체적인 설명을 어려워하는 60대 장애인 여성의 진술조력 사례
4. 29.	암시에 취약한 지적장애 아동 진술조력 사례
5. 28.	편집증(의심)이 많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사례
6. 28.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사례
7. 28.	언어능력이 낮고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조력 사례
8. 27.	선택적 항구증이 의심되는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조력 사례
9. 28.	사회성결핍 관련 장애로 몸의 경직이 동반되는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조력 사례
10. 27.	거짓과 진실, 2가지 사건을 진술한 지적장애 아동 진술조력 사례
11. 22.	학대와 교육적 방임으로 정서가 둔화된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조력 사례
12. 21.	이슈화된 진술조력사례 - 사건의 쟁점확인으로 도움을 준 사례

- 상, 하반기 비상근 권역별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하여 해당 권역별 진술조력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을 강화

일 자	지 역	회 의 주 제
6. 25.	강원도	장애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조력 사례
12. 17.	수도권	피해자 진술조력 경찰조사 단계에서 참여한 장애인 피해자 등의 진술조력 사례

- 활동 중인 진술조력인 9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진술조력인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기회 제공 (1차 : '21. 10. 21. ~ 10. 22., 2차 : '21. 11. 18. ~ 11. 19.)

※ 법원에서 진술조력인의 역할, 진술조력인이 알아야 할 학대피해아동 심리, NICHD 프로토콜 심화과정 등 총 6개 과목 15시간 편성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아동학대살해죄 및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1. 3)

-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 → 1,000만 원)에 따른 시행령 정비('21. 5.)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증진 사업 추진

- 전국 59개 지검 및 지청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예산 배정('21. 2.)
- 민법상 징계권 폐지('21. 1.)와 연계하여 일반 국민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과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동영상' 제작·송출('21. 7. 발주, '21. 11. 송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제작>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법무부 2021년도 시행 계획' 수립('21. 3.)
-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방문(10개 지역) 및 간담회 개최('21. 4. ~ 10.)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인력 총 393명 대상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21. 5. ~ 1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연구용역 실시 및 전국 검찰청,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위탁시설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에 매뉴얼 배포('21. 7. ~ 11.)

□ 주요성과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 전년 대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실적 대폭 증가
  - ※ '21년 1월 ~ 11월 지원실적 35,157건(전년 동기 24,184건 대비 45.4% 증가)

-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및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대상 확대, 시행
- 기존 권역별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교육방식을 변경하고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상향하는 한편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실무' 등과 같은 전문강의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강화
  - ※ 기존 회차당 1일 5과목 8시간 → 2일 8과목 12시간으로 교육 강화
- 피해자 법률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국선변호사의 기본업무로 지정하는 보수기준 개정, 시행하여 서비스 수혜자인 피해자 만족도 제고 기대

○ 아동·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에 맞는 진술조력 지원 강화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실시 및 상근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를 통하여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조력 지원의 접근성 향상

○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

- 보수교육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등 역량 강화('21. 10.~11.)
- 상근 진술조력인 매월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 등 토론(12회)
- 비상근 진술조력인 권역별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하여 우수사례 발표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상·하반기 2회)

○ 지역사회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사범절차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 조성

- 검사,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의사 등이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 처벌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의 실질화에 기여

○ 아동학대처벌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지원 강화

- 아동학대범죄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

-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의무나 업무의 이행력 확보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동영상 제작을 통한 아동인권 보호시스템 구축에 기여

- 네이버\*, 유튜브, 서울버스 내부광고, 신세계 센트럴시티 터미널 옥외광고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수준을 개선 및 촘촘한 사회 감시망 구축에 기여

\* '21. 11. 22.부터 2주간 송출

○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교육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육대상에 새로이 추가된 사법경찰관리 및 전담공무원 외에도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감수성·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 피해아동 보호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안전 강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필요

- '17년 4명, '19년 2명, '20년 2명의 국선전담변호사 증원('21년 0명)
-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의 대폭적인 증원 및 전국 배치 필요

○ 아동·장애인 등 피해자 특수성에 맞는 피해자 의사소통 및 법률 지원 강화 필요

-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활동을 양적·질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아동학대사건의 발생부터 재판 종료시까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자의 대응조치가 적절하였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 및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 교육 인원,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 등을 포함하는 현 성과지표는 정책 대표성이 있으나 피해자 지원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아동학대처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국회 의원실, 관계부처 협의 후 입법 추진·완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8.0%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인원 등 4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인 아동·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기존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장애인으로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진술조력인 배치지역 현장점검 등 의견수렴 17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리플릿 제작 등 홍보 실적 16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66-5)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보호

## □ 주요실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지권 조항 신설

## □ 주요성과

- 폐업한 임차인의 차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상가임차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기에 대한 의지를 독려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여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상생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법 개정이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 언론 대응 중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매출액 실태조사 결과 반영</li> <li>■ 교수 등 전문가 자문 진행('21. 3.), 관계부처 의견 조회('21. 5.)</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을 고려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과제로 개정안 마련부터 국회통과까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 지표는 대표성이 있음</li> </ul>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li> </ul>
4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와 개인정보침해요소가 없는지, 성차별 문제가 없는 등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li> </ul>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li> </ul>
6	정책 효과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안정적 영업권 보장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임대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기반 조성</li> </ul>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가임대료 관련 현장 피해사례 청취(맘편히 장사 하고픈 상인모임)</li> </ul>
8	홍보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2회</li> </ul>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li> </ul>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3)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li> </ul>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li> </ul>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20대 국회에서 관련 의원안 6건에 대한 법무부 대안을 마련,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무부(안)을 도출하여 국회제출('20. 12. 31.)
- 국회 법사위 회부('21. 1. 4.), 국회 전체회의 상정('21. 2. 22.) 후 국회 통과를 위해 법사위 위원실을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

## □ 주요실적

- 법사위 전문위원실 방문 및 설명('21. 1.)
- 법사위 백혜련 위원실 (간사실) 방문 및 설명('21. 3.)
-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21. 3.)
-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21. 4.)
- 법사위 박성준 위원실 방문 및 설명('21. 7.)
- 더불어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실 방문 및 설명('21. 8.)
- 더불어 민주당 정기국회 주력법안 선정('21. 9.)
- 법사위 박성준 위원실 방문 및 설명('21. 10.)
- 법사위 박주민 위원실 (간사실) 방문 및 설명('21. 10.)

## □ 주요성과

- 20대 국회와 달리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미관심 법안으로 분류되었으나, 지속적인 대국회 설득을 통해 정기국회 주력법안으로 선정됨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부(안)들이 한정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소멸시효제도 인지도 및 시효완성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조사하고,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채권추심 관련 입법례를 조사하여 채권추심법 개정안 제출 관련 계획 수립에 반영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 동 과제의 목표는 소멸시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보호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음. 이를 위한 국회 설명, 간담회 실적, 홍보 실적 등으로 구성된 현 성과지표는 대표성이 있으나 향후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보완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보호하려는 서민인 ‘소액채무자’가 어느 정도 금액 이하의 채무자인지 여부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실과 논의('21. 3.)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40.0%	■ 채권추심법 개정 및 홍보
6	정책 효과	보통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등을 제한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 채무자들을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무분별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규제대상 채권액의 상한액 설정)
8	홍보 노력도	미흡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21-4)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총 평

- (TF 운영)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사공일가’ (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논의
- (논문 공모)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을 주제로 ‘법조’지 논문 공모를 진행하여 1인가구 관련 법안을 발굴·검토(’21. 3. 2. 완료)
- (자체 검토) TF 운영 및 논문 공모를 통해 제안된 법안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발굴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
- (최우수상) 2021년 하반기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총 38개 과제 중 최우수상(1등) 수상

□ 주요실적

- (개선안 발굴) 사공일가 TF를 통해 상속, 유대, 보호, 주거, 친족 분야 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굴
- (입법추진) 발굴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

[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 ]

**구성** 국내·외에서 1인가구를 경험한 소설가, 배우, 다큐PD, 교사, 교수, 변호사, 검사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 구성

**과제** ① 보호 : 1인가구 안전보호, ② 상속 :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 보장, ③ 유대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④ 주거 :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⑤ 친족 : 가족 형성의 자유 보장

※ 현재까지 4차례 회의[킵오프(’21. 2. 3.), 제1차(2. 17.), 제2차(5. 10.), 제3차(8. 31.)]를 진행하였으며, 언론에 80회 이상 소개되는 등 호평(’21. 3. 11. 동아일보 사설 등)



□ 주요성과

- (보호) 스토킹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스토킹처벌법」 논의 ('21. 10. 21. 시행)
- (상속)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위해, '구하라법' 국회제출('21. 6.)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 추진('21. 11. 입법예고)
- (유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개정안 국회제출 ('21. 10.) 및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등,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한 민사법 개정안 후속입법 추진 (의원입법, '21. 11. 발의 예정)
- (친족) 비혼인 1인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21. 11.)
- (주거)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등, 주거침입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개정 논의예정('21. 하반기)

< 1인가구 5대 분야별 제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

추진현황	사공일가 TF 입법제안	입법추진 및 국회제출	입법완료
#1 보호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속제도 개선 (구하라법 국회제출)	스토킹행위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정 완료)	
#2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입법예고)		
#3 유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국회제출)		
#4 주거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논의 예정)		
#5 친족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입법예고)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소통방식) '동물자유연대', '동물행동 카라' 등, 장관님 현장방문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
  - 이에 실무진 선에서의 대면회의, 언론보도나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의 비대면 소통의 방식을 통해 국민과 소통함
- (대면소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듣고 소통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현장방문 행사를 재개할 예정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물의 민법상 지위에 관한 여론조사, 유류분의 입법론적 연구 및 한국 1인가구 보고서, 1인가구 시대 원인과 과제 등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각종 보고서를 참조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유류분’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동 성과지표는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우수	■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개념과 다른 「민법」상 독자적인 개념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17.5%	■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점수)
6	정책 효과	우수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함으로써 보편적인 가구 형태의 하나가 된 1인가구의 권리를 보호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의 비물건화 개념 신설 과정에서 3회 의견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유튜브 게시 등 홍보 실적 15회 ■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1인가구 지원 관련 법률개정 홍보)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정부안 국회 제출 후 입법 동력 확보를 위한 통일된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 적극 진행에 주력
- 합리적 입법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노력 지속
  - 재계 및 민간단체 면담 및 토론회 참여 등을 통한 적극적 소통
  -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법리적 연구를 통한 입법추진
- 입법예고안에 대한 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부처간의 이견 조정을 위한 노력 지속

## □ 주요실적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효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반영
  -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마련
- ① (집단소송법안) 분야 제한 없이 전면 도입,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및 증거조사 특례 마련, 소송허가요건 개선, 국민참여재판적용 등
- 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유발 시 손해 5배 한도 배상책임 도입
- 입법예고 후 제도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 □ 주요성과

- 정부안을 통해 우리사회에 집단 분쟁 해결 절차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여 향후 국회 입법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20대 국회에서 의원안으로 집단소송법안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지 않는 등 논의 조차 되지 않았음



- 집단소송제는 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정부안을 통해 집단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고 논의의 장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음
- 따라서, 집단소송법안이 올해 입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22년 국회제출시 국회에서는 20대와는 달리 여당과 야당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정부안으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와는 다른 입법환경이 조성된 바, 통일된 정부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 재계 및 경제부처의 우려 해소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기업활동 위축 및 피소 부담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질·필요성 설명
- 소송비용 및 소송허가 등으로 인해 집단소송제의 남용 가능성은 현행 공동소송보다 제한적이고, 소송허가로 법원이 통제 가능하도록 법안을 설계하였다는 사실 설명
- 기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분쟁을 단일의 집단소송 절차로 일시에 해결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시위나 공동소송에 대응하는 것보다 기업에게 더 경제적임을 설득

※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L신용카드사는 5년간 405건의 소송에 피소당함, '19. 9. 최초 대법원 판결(1인당 7만원) 후에도 계속 잔존 소송 대응 중

- 나아가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향상 시켜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 완화의 바탕이 되어 기업 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국회 제출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적극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입법추진 노력을 지속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제20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19. 9. 18. 당정협의 통해 「확대·개선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진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등을 위한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표 세부산식 내 입법절차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 제기건수 및 판결·결정 건수' 등 운영 실적을 포함한 것은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집단소송제 입법 정책 실무협의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4.0%	■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실적
6	정책 효과	우수	■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악의적 위법행위 유인을 제거하여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공정경제 실현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요구 우편 민원 등 현장의견 8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미흡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3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25-4)집단소송제 등 도입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전국 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수사체계를 점검하고, 부장검사 화상회의, 여성·아동분야 검사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처벌 강화
- 여성·아동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강화하여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
- 성 착취 불법영상물 사범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범죄 엄정처벌 등 적극 대처

## □ 주요실적

- 전국 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전담검사 지정 등 전담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및 철저 준수 지시
-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 주요성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처리기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사건처리기준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및 철저 준수 지시('21. 2.)
-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범죄 전담검사 지정 등 수사체계 점검('21. 2., '21. 7.),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21. 3., '21. 10.)을 통하여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아동학대 수사매뉴얼 제정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 및 운영('21. 7.~)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매뉴얼 마련 및 유관 기관과의 활발한 협업 활동을 통한 엄정 대응 지속 추진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최근 5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사범 접수 현황 분석, 전국 여성·아동범죄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등 전문 의견을 반영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및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한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 목표는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 수사부서 확대 및 전문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워크숍 등 개최횟수, 각종 교육 관련 실적 등으로 구성된 현 성과지표 외에 향후 실질적인 대응 성과를 포함하는 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우수	■ 성폭력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과 더불어 유관기관과 상시 협업시스템 가동 및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관련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에 기여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1.1%	■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전문 수사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간 협업 활동 추진실적
6	정책 효과	우수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아동인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범죄 대응체계 강화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전국 청 여성·아동 전담 부장검사 화상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견 4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20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66-5)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전략목표1) 법무·경찰 신뢰도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체계 개선, 전자감독 특별 사법경찰제 도입 및 신속수사팀 신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률을 안정적으로 관리
  - ※ 특정범죄 재범률 : '19년 1.97% → '20년 1.68% → '21년 1.65%
-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지속 확대,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구축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긴급상황 대응력 강화
- 전자감독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1인당 관리인원 급증으로 관리 부실의 우려 제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업무 효율화 및 지속적인 인력충원 추진
  - ※ '21년 말 기준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인원 : 17.7명(주요 선진국의 약 2~4배 수준)

## □ 주요실적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체계 개선
  - 기관별 처우회의를 통해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 전자감독 지식과 경험이 많은 직원이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자 전담제' 시행
    - ※ 관리역량 우수직원 1명이 고위험자 6명 내외를 집중 관리감독
  - 고위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치추적시스템\* 및 관제방식\*\* 개선
    - \* 해당 고위험자의 범죄내용·피해대상·범행시간·장소 등 특이사항 현출
    - \*\* 기존 지역별 관제방식에서 대상자 재범위험성 수준에 따른 관제방식으로 개선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 고위험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확대실시
    - ※ 1:1 전자감독 누적 실시인원 : '20년 33명 → '21년 61명
  - '21년 출소 예정 고위험 성범죄자를 선별, 출소 전부터 선제적 관리
    - ※ 맞춤형 준수사항 사전 신청, 출소 전 1:1 전자감독 지정 등

- '20. 12. 출소한 조두순에 대해 안산시·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의 협업을 통한 밀착 관리감독 실시

※ '21년 말 현재까지 조두순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없음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및 신속수사팀 설치

-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전자감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 시행('21. 6.)

※ '20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1. 6. 9. 시행)

-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365일·24시간 즉각적인 수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21. 10.)

※ 13개 기관(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에 수사 전담요원 66명 전환 배치

○ 지자체 CCTV 연계 확대 및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실시

-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상황 시 현장출동 없이도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및 대응 가능하도록 지자체 CCTV 연계 확대

※ '21년 서울 4개 구(강서구·도봉구·강남구·서대문구), 전남, 충남, 인천, 경북 추가 연계

-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실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강화

-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자에 대한 등록정보 일제점검 강화

※ '21년 총 7회에 걸쳐 12,017명에 대해 점검 실시, 불일치자 723명에 대한 주민등록지, 거주지, 출입국정보, 수용정보 등 현행화 실시

- 전자감독대상자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정확성 제고
  - ※ '21년 10월부터 실시, 총 26차에 걸쳐 145명 직권정정 실시
-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신상 등록대상자 통합 관리체계 강화
  - ※ '21년 유관기관 실무협의체회의 5회 실시(정기 3회, 수시 2회)
  - ※ '21년 말 기준 제출의무 위반자 3,409명에 대해 경찰에 통보 조치

## □ 주요성과

### ○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의 안정적 관리

- 고위험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재범 방지 대책 적극 실시로 재범률을 안정적으로 관리
  - ※ '21년 특정범죄 재범률(1.65%) 및 성폭력 동종 재범률(1.34%) 모두 1.70% 이하로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

### ○ 준수사항 위반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로 강력범죄 사전 차단

-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중요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및 신속수사팀 설치로 준수사항 위반범죄에 즉각 대응,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
  - ※ '21년 전자감독 특사경 도입('21. 6.) 전 수사의뢰 건수 월평균 11.8건 → 신속수사팀 설치('21. 10.) 후 수사 건수 1개월간 50건(약 4배 증가)

### ○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긴급상황 대응력 및 국민 안전망 강화

-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지속 확대로 긴급상황 시 즉각적인 현장 상황 파악 및 대응력 강화
  - ※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 '20년 말 기준 7개 광역지자체 → '21년 말 기준 11개 광역지자체로 확대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실시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 국민 안전망 강화
  - ※ '21년 7월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서비스 실시, '21년 12월 서울·인천 지역 서비스 확대 실시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강화**

-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자에 대한 등록정보 일제점검 강화
  - \* 주민등록 주소지·실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 일제점검 주기 단축(3개월 ▶2개월)
  - \* '21년 총 7회에 걸쳐 12,017명에 대해 점검 실시, 불일치자 723명에 대한 주민등록지, 거주지, 출입국정보, 수용정보 등 현행화 실시
  - \* 소재불명자, 미등록자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해 매월 1회 점검 및 현행화, 경찰과 결과 공유
- 전자감독대상자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신속성·정확성 제고
  - \* '21년 10월부터 실시, 총 26차에 걸쳐 145명 직권정정
-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신상등록대상자 통합 관리체계 강화
  - \* '21년 유관기관 실무협의체회의 5회 실시(정기 3회, 수시 2회)
  - \* '21년 말 기준 제출의무 위반자 3,409명에 대해 경찰에 통보 조치
  - \* 여가부 '21년 하반기 반기고지대상자 고지정보 점검 협조요청에 대한 점검(3,304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전자감독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1인당 관리인원 급증**

- 전자보석 도입 및 일반사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20. 8.) 등 전자감독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직원 1인당 관리인원 급증
  - ※ 직원 1인당 관리인원 : '19년 13.6명 → '20년 19.1명 → '21년 17.7명
- 선택과 집중에 따른 고위험자 집중 관리, 업무 효율화를 통한 자체 인력 재배치 등 관리·감독 공백 방지 및 지속적인 인력확충 추진
  - ※ '22년 소요정원으로 전자감독 전담인력 88명 확보, 관계부처와 신속수사팀 확대에 필요한 추가 인력충원 지속 협의 추진

○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열람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개인정보 처리 주체(개별 지자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지자체 CCTV 영상정보의 원활한 활용 제한
-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열람의 법률적 근거 마련 추진
  - ※ '21. 5.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백혜련 의원) :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위치추적관제센터장이 지자체장에게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 가능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최근 3년간 전자감독대상자 대면 지도감독 현황, 전자감독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현황,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속입력을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전자감독, 신상정보 등록제도 등 강력범죄 대책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심리치료 집행횟수,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속 입력률 등은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우수	■ 위치추적시스템과 지자체 CCTV 연계 확대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활용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0.1%	■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횟수(회)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및 신속 수사팀 설치, 준수 사항 위반 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로 강력범죄 사전 차단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 전자감독과장 간담회 개최 등 현장의견 7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2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에게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14-8)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 분야 역량 강화 ■ (전략목표4) 보호관찰 대상자 중 집중대상자 재범률(%)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단속 활동이 제한되고, 항공편 결항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출국도 제한되어 불법체류 외국인 수 감소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17년 25만 명에서 '19년 말 39만 명까지 급증 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년 ~ '21년 12월 말 현재까지 38만 명 선으로 유지하여 증가세를 차단하였음
- **방역당국과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계도활동을 지속,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 독려,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을 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안전에 기여하였음**
- 한편,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외국인의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 격리 위반 및 격리이탈 행위와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강제퇴거 등 엄정조치 하였음
- '21. 1.월부터 강제퇴거대상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출국명령 시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와 보호시설 과밀 및 집단감염 방지에 기여하였음
- '21. 4. 19.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 학교 재학, 범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장기 불법체류 아동에게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에 기여하였음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19. 12. 11.~)」을 지속 시행하여 단속되거나,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음

## □ 주요실적

-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1. 21. 출  
입국관리법 개정 시행)**
  -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전액 납부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칙금 미납을 사유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사례 방지
  -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시 이행보증금을 부과 도주를  
방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보호시설 과밀화 예방
-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4. 19.)**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  
는 고교 졸업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D-4 또는 G-1) 부여
  - 아동의 부모는 일정 범칙금 납부 후 아동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 체류(G-1 자격부여) 허용
    - ※ 이후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범위  
확대 적극 검토(11. 24. 언론 보도)
-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제도 시행(10. 12.)**
  - '21년 하반기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외국인 집단감염이 만연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등 방역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 국내에서 '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 방역당국 및 관계부처의 공동 노력과 함께 계도활동,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21. 12. 31. 1회 이상 백신 접종률 87.2%, 완료율(2차) 83.4%로 향상
-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수칙 준수 점검·계도 및 홍보(연중)**
  - 외국인 밀집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 독려,  
방역수칙 준수 계도·홍보 실시하여 외국인 방역사각지대 예방
  - 참여 : 16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지자체, 경찰, 고용노동부 등
    - ※ (종합 실적) 외국인 밀집시설 25,812개소 점검·계도, 마스크 40만여 개  
배부('21. 1. 1. - 12. 31.)

- 외국인 보호시설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연중)
  - 9개 주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임시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외부의료기관으로의 이동 및 계호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소로 이송 전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 신규입소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자체 임시공간을 마련, 보호시설 코로나19 확산방지

□ 주요성과

- '17년 25만 명에서 '19년 말 39만 명까지 급증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년 ~ '21년 10월 말 현재까지 39만 명 선을 유지하여 증가세 억제
  - ※ '17년 251,041명, '19년 390,281명 ⇒ '20년 392,196명 '21년 12월 말 388,700명
-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
  - ※ 신용카드 납부 187건, 이행보증금 222건 제도 이용(1. 21. - 12. 31. 누적)
- '21. 10. 12.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제도 시행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률 제고, 국민안전에 기여
  - '21. 8. 28.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접종 완료율이 5.7%에 불과했으나, '21. 12. 31. 1회 이상 백신 접종률 87.2%, 완료율(2차) 83.4%로 향상

[국내체류 외국인 접종 현황]

(11.29. 0시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인구 <sup>1)</sup> (A)	접종자		접종율	
		1차	완료	1차	완료
계	1,955,540	1,547,664	1,461,334	79.1	74.7
등록외국인	1,563,893	1,229,031	1,157,994	78.6	74.0
불법체류외국인	391,647	318,633	303,340	81.4	77.5

1) 21년 9월 법무부 등록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계

2) 해당 통계는 임시관리번호 대상자 접종 통계로 주민등록 말소자 등 일부 내국인 포함

-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4.2%(10. 5.) → 3.5%(12. 25.)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바 방역사각지대 예방에 기여
- '21. 5. 1. ~ 6. 3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하여 396명 적발(브로커22, 외국인 273, 고용주 101)
- 격리 이탈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20. 4. 1. ~ 21. 12. 31.)
  -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45명 출국 조치(강제퇴거 21명, 출국명령 24명)

-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 35명 출국 조치(강제퇴거 16명 출국명령 19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161명
-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업소 등에 대해 5차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취업 외국인 접객원 33명(강제퇴거 32, 범칙금 1) 업주 및 한국인 이용객 62명 적발

※ 한국인 업주 및 이용객 등 62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금지 위반)으로 경찰, 지자체에서 사안별 처분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

			
6. 17. 시흥시 (서울이민특수조사대, 시흥시청, 시화파출소, 시흥소방서 등)	6. 30. 안성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안성시청, 안성경찰서)	10. 5. 대구 수성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경찰청, 대구시청)	10. 20. 대구 수성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경찰청, 대구시청, 수성구청)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19. 12. 11.~)」 관련, 단속되거나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징수(~’21.12.31. 기준, 범칙금 80.7억 원 징수)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단속 활동이 제한되어 단속목표가 미달성되었는바, 상황이 호전되면 정부합동단속 등 집중단속 재개를 통해 실적을 거양하고 체류질서 확립 필요
- 불법체류 외국인 출장소 신병인수 관련 인력의 정규인력화, 단속-사범-보호-강제퇴거 등 원활한 법 집행 절차의 진행을 위해 인력 증원 노력 계속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전년도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 등록외국인현황, 단기체류 외국인현황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분석하여 외국인의 국내 체류 추세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단속, 정부합동단속, 기획조사 강화, 특별단속지역 설정 및 집중단속 등 대응체제 강화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불법체류자 적발 등 실적'과 보호외국인의 반한감정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동감프로그램 만족도' 지표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계도/예고(홍보) 활동 실적 지표는 정책내용에 대한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우수	■ 고용노동부와 '21년 두 차례 합동으로 외국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점검·계도를 실시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1%	■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등 실적(건) 등 3개 지표
6	정책 효과	미흡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19. 12. 11.~)」 관련, 단속되거나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징수(~'21. 10. 31. 기준, 범칙금 72.2억 원 징수)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법무부 장관 현장 간담회 등 현장의견 5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8회 ■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불법체류자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 홍보)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14-8)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 분야 역량 강화 ■ (전략목표3) 인권위 권고 수용률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학교·검찰·법원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교육생 특성에 맞게 신규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운영하여 현장적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인문학 기반 참여형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하는 등 비행예방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왔음
- 한편, 교육생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교육생 개별상담 및 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종료 후 상담전문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멘토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운영 내실화 및 비행 예방 강화를 위해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임

## □ 주요실적

- 대안교육 의뢰기관 및 교육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별 중점 교과·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가정의 보호기능 및 보호자의 자녀 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가족교실’ 등 보호자 교육 운영(연중)
- 초·중·고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등 대상 법·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대상 직무연수 등 실시(연중)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담당 직원의 사이버폭력예방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사이버폭력예방 강의역량 향상 직원연수」 실시('21. 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성교육을 표준화하고 체험형·토론형·문제해결형 등의 교육학습방법을 도입한 「인문학 기반 참여형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21. 4. ~ 9.), 신규 개발·보급한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청소년 절도예방, 법교육)을 교육생 특성에 맞게 재구성·운영하여 현장적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신규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21. 3. ~ 11.)

- 초기 비행단계 청소년 대상 조기 개입을 통해 재비행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전문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초기비행예방 강화 시범운영」 기본계획 수립('21. 11.)

※ 추진 계획 : 9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시범운영('21. 12. ~ '22. 5. ),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등 도출('22. 6.)

## □ 주요성과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176,967명 교육생 대상 비행예방 교육 및 진단 실시( '21. 12. 기준)
- 비행초기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및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실시로, 대안교육 수료생 대상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만족도 93.08점( '21. 12. 기준)으로, 목표 점수(90점) 대비 103.4% 달성

※ 비행예방교육 평가점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만족' 수준의 평가 점수는 80점임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은 구조화된 교육과정 편성표에 따라 수립·운영되고 있어 교육생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다수의 강사가 개별 교육과목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
  - ⇒ 교육생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교육생 개별상담 및 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운영 방식을 소규모 교육 전담팀 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책임운영 방식으로 변경
  - ⇒ 교육프로그램은 통합 형태의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 종료 후 연계기능을 강화한 교육운영 개선안 마련·시행 예정

※ 추진 계획 : 교육과정 개선 시범운영 계획 수립('21. 12.), 인성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22. 1. ~ 6.),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22. 7.)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통계, 2020년도 비행예방교육 평가점수, 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결과 분석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실무자 간담회 개최('21. 1.) 및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할 주요 유관기관 업무협약('21. 1~)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개입 및 법의식 형성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상습 비행자로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지표인 비행예방교육은 '교육효과성, 프로그램 적절성, 교수역량, 교육시설 편의성' 등 4개 항목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청소년수련관에 근무 중인 상담 전문인력 등과 연계하여 상담이 필요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연계 가능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2.8%	■ 비행예방교육 평가 점수(점)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학교·경찰·법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을 강화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도점검 등 현장의견 수렴 6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3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총 평

○ 참여와 체험 중심의 법교육 체계 구축

- 누구나 필요한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제별로 사업을 개편·정비하고 신규 콘텐츠를 개발, 분야별 전문 기관 및 민간 협업을 통해 체험과 참여 중심으로 콘텐츠 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교육 강화

- 법률 접근성이 취약한 이민자·북한이탈주민,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 지역·보육원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 특화된 신규사업 및 콘텐츠 개발과 법교육지원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교육 방향성 제고

□ 주요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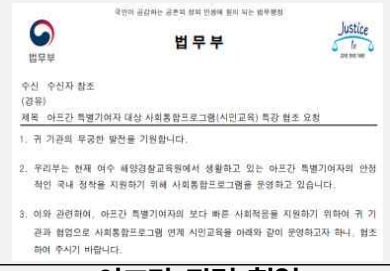
○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배려계층 법교육 추진

- 북한이탈 청소년, 아프간 특별기여 입국자 및 이민자·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민국 기초 생활 법률 법교육 강의를 지원하여 기초 법 질서 준수 이해 증진,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 등 토대 마련
- 통일부 탈북청소년 교육시설 및 민간 대안교육시설(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법무부 출입국본부(이민자법교육 및 아프간특별기여자 법교육) 등과 다양하게 협업하며 업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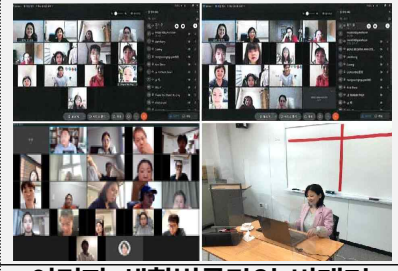
※ (북한이탈청소년법교육) 184회 · 1,594명, (이민자 법교육) 106회 · 2,034명, (아프간특별기여입국자 생활법률특강) 2회 · 156명



아프간특별기여자 생활법률특강



아프간 관련 협업 추진(출입국본부)



이민자 생활법률강연 비대면 강의

-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법과 규칙에 대한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독후 활동(아이가 행복해지는법) 및 쉽고 친근하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무시설 견학 등 체험·활동 중심의 법교육(어린이로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아이가 행복해지는법) 218회 · 3,301명, (어린이로스쿨) 491회 · 990명



- 도서·산간지역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법교육 버스가 전문 강사와 함께 직접 찾아가 솔로몬로파크 콘텐츠, 진로체험, 법교육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로파크) 239개 학교 · 15,825명 참여

< 이야기로(Law)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프로그램 구성 >

대상	선택 주제	동화	체험
5~6세 유아	① 규칙, ② 성범죄예방 ③ 타인과의 관계	룽룽마을의 지하철 보보하기 싫어요 등	활동지 + 올동동요 등 법사랑사이버랜드 콘텐츠 체험
7세 유아	④ 사회관계 · 성인지 ⑤ 생명존중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꽃에서 나온 꼬끼리	

○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교육

- '20년 'n번방', '다크웹' 등 디지털 성범죄 이슈 당시 개발한 디지털 범죄예방 교재를 개정하며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형 사례로 구성하고 이를 E-Book, 강의용 PPT, 교육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접근성 향상

※ 전국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시설, 시도교육청 및 법 문화진흥센터, 기타 법무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총 2,280부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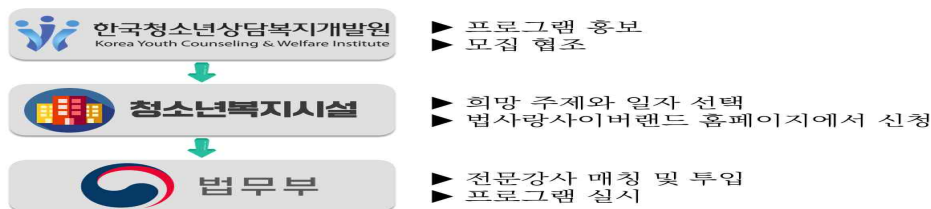
< 디지털 범죄예방 교재 '디지털소통로2' 배포 >

기관		기관 수	부수	총배포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191	1	191
	청소년문화의집	294	1	29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2	1	262
시·도교육청		17	10	170
법문화진흥센터		10	10~50 (한국법교육센터 200)	560
소속기관	보호관찰소	57	2~9	255
	소년원(분류심사원 포함)	11	5	5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	5~100 (솔로몬로파크 각 100)	493
총		860		2,280



- ※ 2021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사전이벤트 신청자 대상 500부 선착순 배포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위기청소년 대상 필요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대상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로티즌아카데미)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법적 사고력 및 이해력 향상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
- ※ (청소년복지시설법교육) 청소년 쉼터 등 23개 기관 · 157명 참여  
(로티즌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수련관 등 13개 기관 · 1,113명 참여

< 청소년복지시설(위기청소년)법교육 추진 >



○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체험·생활 중심의 법교육 실시

-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공동 개발하고 교육부의 우수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과한 7종(주제: 학교폭력예방·인성교육·법교육 등) 프로그램을 초·중등 학교 교과 과정, 창의적 체험학습 등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21년 신규 개발 법교육 프로그램까지 총 7종 모두 교육부 우수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통과

※ (모두가행복한교실) 총 175개교, 1,392학급 • 3,500명 참여



교육부 우수인성교육 인증 완료

모두가 행복한 교실 현장

모두가 행복한 교실 현장

-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인권친화적·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자치규약 제·개정, 자치법정 구성, 자치토론 활동을 지원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방법을 전수하는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 본 프로그램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연계, 콘텐츠 개발 및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안을 신규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시범 실시 추진

※ (학생자치법교육) 총 870개교 • 6,960명 참여, (자유학기제 시범) 총 10개교 참여

- '20년 신규 개발하여 추진한 법과 인권 체험 동아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법과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주시민성 함양 기반 마련

※ (꿈꾸는디케) 학교밖청소년팀 포함 총 90팀 • 1,193명 참여

- 시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주제로 변호사를 파견하거나 영상 강연, 온라인 강연 등을 실시하여 생활법률강연을 실시

※ (시민생활법률강연) 지자체 등 19개 • 9,500명, (시민로스쿨) 대면강연 1,211명

## ○ 법체험교육 시설(솔로몬로파크)의 교육·행사 기반 조성 노력

- 2021년 코로나 감염증 장기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법체험 기관인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감소하여 디지털을 활용한 각종 비대면 교육, 비대면 행사 및 홍보 활성화 추진
- (대전) '21.2. 기관 내 유튜브 방송 제작 및 ZOOM 수업이 가능한 자체 방송국을 개설하고 지역 방송 등에 기관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손쉽게 솔로몬로파크의 소식을 접하고 다양한 행사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 (해돋이방송국 활용) 온라인 진로체험 특강, 어린이·중학생 온라인 법캠프 등
- (부산) 유튜브 방송 계정 '로파크 부산TV'를 개설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을 연계하여 다양한 디지털 법체험 및 행사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산 북구청과 연계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방식의 소통 강화 및 지역사회 친화 노력 지속
  - ※ (로파크부산TV) '우리 가족을 지키는법' 공모전, 인스타그램 법퀴즈 이벤트 및 '대한민국 독서대전' 관련 영상 등 콘텐츠 20편 게시
-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5·18 단체, 기재부 및 법무부 시설담당관실과의 지속적인 소통·협업으로 무연고분묘터 이슈 및 부지 용도폐지 등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사업비 약 5.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다목적홀, 법역사관 등 마감재 개선 공사 추진
  - ※ 2022. 3. 완공 및 동년 하반기 개청 예정, 12월 현재 공정율 83% 정상추진

## ○ 법교육포털과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법교육 접근성 강화

- 분산되어 있던 법교육 콘텐츠를 법교육포털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로 통합하고 드라마, 게임 등 각종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대국민 법교육 접근성 강화
- '20년 법교육·캠페인영상 등 18종, 게임 5종 등 총 24종의 콘텐츠 개발을 마치고 '21년 매월 2~3편씩 법교육포털 및 법사랑사이버랜드 유튜브 등을 통해 서비스 실시 ('22년 서비스 목표로 신규 17종 개발 중)

□ 주요성과

○ 체험과 참여 중심의 다양한 계층 대상 법교육 체계 정립

- 법교육 시행 초기 대규모 행사·대회형 사업 체계가 구성되어 실시되어 왔으나 경쟁심화, 과도한 스펙쌓기 등 법교육에 대한 지적 지속
- '20년부터 체험과 참여 중심으로 법교육 체계 개편 추진, 기존 대규모 행사·대회형 사업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법교육 사각지대에 필요한 법교육으로 방향 전환

\*('19년 이후 폐지 사업)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교생 헌법토론 대회, 연말 청소년 법사랑 시상식 등 총 7개 대회 및 행사

< 대회형 법교육과 체험·참여형 법교육 비교표 >

	대회형 법교육(과거)		참여형 법교육(현재)
목적	· 시민성확립·헌법가치 확산 · 법 지식 전달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실현 · 사회규범과 가치 체득을 통한 범죄예방
형태	· 대회형 프로그램 위주	⇒	· 지속적인 참여형·토론형 프로그램
대상	· 학교 학생 위주 대상	⇒	· 법교육이 실제로 필요한 범죄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 계층 중심
정책 효과	· 법교육 조기 정착 · 상위권 학생 중심 법교육 확산	⇒	· 법교육 수요 확대 · 배려계층 등 법교육 수혜대상 다양화

- 법과 인권 체험 동아리 '꿈꾸는 디케', 학생 스스로 규칙을 제정하고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학생자치법교육', 학교 교과 과정에 맞춘 '모두가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방과후 돌봄 청소년을 위한 '로티즌 아카데미' 등 다양한 체험·참여형 사업을 구성, 새로운 법교육 체계를 정립함

○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장벽 없는 협업 추진

- 북한 이탈 청소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입국자, 보육원 아동, 도서 지역 청소년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 취약계층이 사회적 편견 없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범복지 서비스 지원
-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출입국본부, 아동복지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법교육 안정적 보급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법교육 및 주요 협업처 >

사업명	협업처	대상	내용	실적
북한이탈 청소년법교육	통일부	한겨레, 여명 등 7개 학교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우리법 바로 알기 프로그램	10개교 2,058명
이민자법교육	법무부 출입국본부	합법 체류 외국인	기초 생활법률 및 범죄예방 등 법교육	117회 2,290명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시도교육청	학교별청소년, 농산벽지학생 등	법, 인권을 주제로한 자율 동아리활동 지원, 캠프 개최 등	90팀 1,193명
로티즌 아카데미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 돌봄 필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모듈형 법교육 프로그램	13개기관 1,113명
찾아가는로파크	교육부 및 자녀안심재단	농산어촌 청소년	법교육 이동식 버스를 활용해 진로체험 실시, 법체험 격차 해소	239개교 15,825명
유아법교육	아동복지협회	아동양육시설 유아 등	유아(5~7세)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법교육, 독후활동	218회 3,301명
어린이로스쿨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체험·활동 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	491회 990명

### ○ 일반범죄예방의 수단으로서 법교육 사업 추진

- 법교육을 통해 사회 규범 체계와 가치를 체득함으로써 사법체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여 범죄동기 억제 효과 창출을 위한 법교육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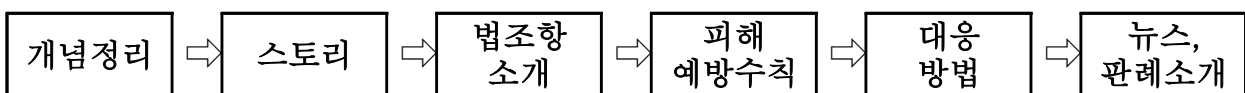
\*(사회통제이론) 범죄동기를 통제할 수 있는 애착, 헌신, 참여, 신념 등의 통제기제에 따라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범죄동기를 억제한다는 범죄이론

-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기존 법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밖 청소년 등을 주 수요층으로 하는 신규 법교육 사업 추진, 청소년·시민의 준법의식 개선

※ 로티즌아카데미 사업(2020~), 청소년복지시설(위기청소년) 법교육 사업(2021~)

- 2020년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출판한 '디지털 소통로'를 대폭 개선하여 다양한 디지털 범죄의 피해사례와 구제절차 등을 제시하고 이를 E-Book, 강의용 PPT, 교육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청소년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

#### < 디지털범죄예방교재 '디지털소통로2' 구성 체계 >





## ○ 코로나 시대, 법교육 사업의 디지털 전환

- '20년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법교육 및 각종 행사의 추진방향에 대한 디지털·비대면화 필요 직면
- 학생자치법교육, 모두가행복한교실 등 전국 단위 교사 워크숍과 각종 발대식, 강연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총 20회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행사 실시 등 적극행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 및 행사 등에 안정적인 디지털·비대면 환경 정착

\*2021년도 상반기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코로나 이전보다 법교육·법질서 사업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법교육·법질서 총 11개 프로그램 중 9개 프로그램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행사를 함께 추진(약 81%)하였음에도 법의식 향상도 및 참가자 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효과성 내실화

\*법교육·법질서 사업 참여자 수

- (2019년) 22,640명 → (2020년) 25,810명 → (2021년 12월 현재) 32,298명

\*\* (조사개요) 코로나 이전 '19년 대비 법의식 수준 및 만족도 조사('22.1. 최종결과)

- 법의식 향상도 : 63.4점 → 80.48점 / 참가자 만족도 : 88.3점 → 89.8점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 법교육 사각지대 발굴 방안 모색

- (현황) 보육원 아동, 이민자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다양한 상황·여건 등으로 인해 교육이 필요함에도 공공서비스로서의 법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상존

\* '21년 중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북한이탈청소년, 아프간특별기여자 법교육 등 7개 사업 추진

- (보완방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위기청소년 등 법교육이 필요한 대상 및 계층을 추가 발굴하며 관련 부처·기관과 소통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법교육을 강화, 법교육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제고

### ○ 상시적 비대면·디지털 법교육 콘텐츠 구축

- (현황)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존 대면강연 외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영상, 게임·드라마 등 콘텐츠를 강화하였으나, 지속적인 비대면 콘텐츠 수요 증가 대응 및 법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법교육 강화 필요

- (개선방향) 법교육 포털에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를 추천하도록 개편·개선하고, 콘텐츠를 다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자동분석 시스템'을 도입, 법준수 의식 향상도 및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li> <li>■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2020)를 통해 교육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그간의 법교육 성과를 진단</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과제는 체계적·유기적 범죄예방정책 시행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문화 확산과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도, 법교육 참여 인원은 정책 대표성이 있음</li> </ul>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li> </ul>
4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와 협업하여 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2종의 교육부 후원 및 교육부 장관상(총 18점)을 연계하여 일선 학교의 참여 확대 및 효과성 제고</li> </ul>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 준법의식 수준 등 2개 지표</li> </ul>
6	정책 효과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경쟁, 스펙 쌓기 등이 내재되었던 과거 지식경쟁 위주의 대회 및 대형 행사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체험 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참여형 법교육 사업 체계 정립</li> </ul>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현장 점검 등 현장의견 수렴 6회 실시</li> </ul>
8	홍보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9회</li> </ul>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li> </ul>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li> </ul>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li> </ul>

## □ 총 평

- 화상가족접견, 엄마의목소리 등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용자의 수용생활 안정과 출소 후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나아가 미성년 자녀 현황 조사, 수용자 자녀지원팀 운영 등 다양한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소년수형자 맞춤형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 문화예술과 연계한 제로 캠프, 소년수형자 인성교육, 취업프로그램인 희망커피 운영을 통해 소년수형자의 사회적응력 제고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지원 도모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집중인성교육 운영, 현재 시행 중인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교육을 통해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범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수용자의 심성순화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 교화방송 생방송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 주요실적

-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대상 미성년 자녀 현황 조사 시행('21.4.)
  - 수용자 자녀 지원의 체계화, 일원화를 위해 「수용자 자녀 지원팀」 시범 운영('21.9)
  -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협력하여 불우수형자 자녀 장학사업 추진('21.2.),('21.6.),('21.9.)
  - 「천사공익신탁」을 통해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 생계비 등 지원('21.3.)('21.8.)
  - 취약계층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서울대와 협력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21.4.)

- 소년수형자를 위한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
  - 소년수형자를 위해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한 ‘제로캠프’ 프로그램 실시(연중)
  - 소년수형자의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소년수형자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연중)
  - 김천소년교도소 바리스타 훈련과정을 이수한 출소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희망커피’ 운영
- 수형자와 가족간의 관계 유지·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수형자와 가족간의 비대면 만남, 화상가족접견 도입('21.4)
  - 여성수형자(母)와 미취학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연중)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증설을 통해 가족간 유대감 제고(연중)
- 수형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전국 교정기관 대상 집중인성교육의 효과성 측정('21. 3.)
  - 비대면 교육 영상강의 콘텐츠 추가 제작 및 배포('21. 5.)
  - 교정기관 자체 내부강사 강사 양성을 위해 「교정직 공무원의 강사 및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안)」 제정('21.5)
  -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수용자와-전문강사와의 양방향, 실시간 비대면 인성교육 계획안 수립('21.7.)
- 수형자 맞춤형 교정·교화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 실시(연중)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독서치료프로그램 시행(연중)
- 교화방송 정책 기능 강화를 통해 수용자의 정서안정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습득 도모
  - 교화방송 운영시간 연장, 생방송 시간 확대 등 수용자의 안정 유도 및 최신 정보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한 교화방송 개편('21.8)
  - 교화방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교화방송 자문단 회의 개최('21.6)
  - 교정정책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및 유튜브 등 SNS 게시(연중)
  - 교화방송 콘텐츠 개발 및 정책수립 자료 활용을 위해 교화방송 만족도 조사 시행('21.3), ('21.9)

- 교정시설 정책 현장,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협력기관 등과의 협업 및 소통 강화
  - 천안개방교도소 활성화를 위해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천안개방교도소 전 직원 대상 의견 조회 시행('21. 2)
  - 수용자 도서업무 개선을 위한 업무 담당자와 영상회의 개최('21.3)
  - 집중인성교육 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강사와 영상회의 개최('21.3.)
  - 교화방송 자문단 회의를 통한 교화방송의 내실화('21.6.)
  - 수용자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교정위원의 역할 제고 및 교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정위원 정기총회 개최('21.8)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협력기관과 업무 협의('21.11.)
  - 유관기관 등과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관련 업무 협의(상시)

## □ 주요성과

-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조사\*** 시행('21.4),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팀('21.9)\*\***을 구성하여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 \* 미성년 자녀의 수 12,167명('21.4),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자녀 80명 파악,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자녀에게 (사) 세움과 연계하여 긴급 생계비 등 지원
  - \*\* 서울지방교정청에서 교정위원 및 아동 전문기관 등과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 운영(15가구 27명에게 상담, 생계비, 장학금 등 지원)
- 김천소년교도소 바리스타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소년수형자 중 출소 후 커피 관련 분야에서 직업체험 및 취업을 희망하는 **소년수형자를 고용하여 창업하는 '희망커피' 운영**
- **화상가족접견을 도입하여 가족관계 회복·증진을 도모하며, 수용자 가족 교정기관 방문 시간 및 비용 절감**
  - ※ (연간 5,256시간, 사회적 비용 2,628만원 절감 예상 - 연평균 2,628명 방문, 이동시간 평균 2시간 소요, 교통비 10,000원으로 측정)
- 집중인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시행,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범인성 요인인 친사회성, 대인관계, 가족관계, 준법정신, 자기통제별 프로그램(17개 주제, 55시간)으로 구성된 비대면 영상 교육 시행

- 국민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정 정책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여, 법무 정책 호응도 제고 및 대국민 공감 유도  
※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등 160건의 홍보 영상 게시, 누적 조회 수 2,324,195건(21년 11월 9일 기준)
- 교정기관에 아동 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증설하여,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교정시설에서 느낄 수 있는 위축감을 최소화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접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코로나19로 중단될 수 있는 집중인성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독서치료프로그램 등 교육·교화프로그램을 비대면 콘텐츠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에게 교육, 문화, 독서 등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수용자 가족관계 회복·유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다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개별 가족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화상가족접견, 엄마의목소리, 가족 만남의 집)의 만족도 및 효과성이 높아 개별 가족간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필요
- 수용자와 가족간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회의를 활용한 화상가족접견 도입, 영상회의 시스템 환경문제로 등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며, 내년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민원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핸드폰(모바일) 등을 통해 화상가족접견 운영 방안 마련
-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방식의 교육·교화프로그램의 운영 제한에 따라 수용자에게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교화 프로그램의 영상 자체 제작, 협력 기관의 영상자료 협조 등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강구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20년 상반기 집중인성교육 이수인원과 비대면 영상자료 제작 및 배포 이후 이수인원의 통계자료 분석, 집중인성교육 효과성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집중인성교육 이수인원, 비치도서 대여 권수 등을 포함하는 성과지표는 코로나19로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재범위험성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의 추가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가정에서의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지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게는 입양, 단기 쉼터,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연계 지원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0.4%	■ 집중인성교육 이수인원(명) 외 2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의 효과적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전국 교정기관 대상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 수행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집중인성교육 개선 관련 영상회의 등 의견수렴 8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유튜브 게시 등 홍보 실적 19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충족	■ 전년도 미흡 원인을 충실히 분석하여 개선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작업장 신축, 교도작업 신제품 개발 및 개선, 취업 유망 직종 관련 직업훈련 개편 등을 시행함
- 특히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특허출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존 단순 취·창업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복귀 기반 마련을 지원함
- 이에 더해 「작업장려금 활용, 국민연금 가입추진」을 실시하여 교도작업이 실질적으로 출소 후 경제적 사회복귀 터전 마련에 기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 □ 주요실적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및 기능자격 취득
- 전국·지방 기능경기대회 참가하여 입상 총 78명(금21, 은21, 동18, 우수3, 장려15)
- 채용면접 등 수형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행
- 수형자 교도작업 취업률 향상을 위한 강원북부(교) 등 3개 기관 신규작업장 신축
- 작업장려금 활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제도를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 확보를 통한 실질적 재범방지에 기여

## □ 주요성과

- 전주(교) 한식조리+떡제조, 군산(교) 보석가공 등 6개 기관 6개 과정의 취·창업 유망한 기술교육을 신설·확대하여 출소 후 취·창업 까지 연계될 수 있는 토대 마련



- 신설 과정

과정명	훈련기관	훈련인원	훈련기간	취득자격증	비고
한식조리+떡제조 (복합과정)	전주(교)	연12명	1년	한식조리기능사	조리→한식조리+떡제조
	순천(교)	연25명		떡제조기능사	한식조리→한식조리+떡제조
지게차운전	강원북부(교)	연50명	6월	지게차운전기능사	신설
보석가공	군산(교)	연15명	1년	보석가공기능사	신설, 장애인 우선선발
애견미용	화성(직)	연24명	6월	애견미용사	점역교정→애견미용

- 개편 과정

과정명	훈련기관	훈련인원	훈련기간	취득자격증	비고
공조냉동기계	대구(교)	연15명	1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용접→공조냉동기계
건축도장		연20명	6월	건축도장기능사	타일→건축도장

- 강원북부(교) 등 4개 기관의 작업장을 신축·준공하여 교도작업 취업률 향상을 통한 수형자 근로의식 함양 기회를 확대

기관명	작업장 종류	면적	취업인원	비고
강릉교도소	개방지역	680㎡(2층)	20명	'20년 착공 후 준공
강원북부교도소	구내위탁	2,013㎡(3층)	120명	'21년 설계, '22년 준공 예정
천안개방교도소	개방지역	990㎡(1층)	20명	
여주교도소	개방지역	180㎡(1층)	10명	

- 특허청 협업을 통한 수형자 특허 기본·심화교육 및 특허 출원 지원 실시
  - 취업 알선을 넘어서 주관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출소자 취·창업 능력 배양
  - 상반기 중 기본교육(2개 기관·60명) 후 하반기 심화교육(2개 기관·22명) 실시
  - 교육우수자를 선정하여 특허 출원 지원
- **작업장려금 활용, 국민연금 가입 추진**을 통한 출소자 사회복지자금 마련
  - 단순 계산고로 존재하던 작업장려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국민연금 등으로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정착금 마련을 유도하여 재범방지 기여
  - 위 제도는 2021년 하반기 법무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효과성을 입증받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단순 취업알선으로는  
출소예정자 취업연계 활동에 한계 발생
- 기존 취업 프로그램을 넘어선 새로운 프로그램 적극 발굴
  - 특허청 협업, 수형자 특허 기본·심화교육 및 특허 출원 지원 프로그램
  - 취업매칭반 확대를 통한 취업 유망 기술 등 훈련 및 관련업체  
취업 구조 마련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최근 3년간 정역집행률(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율)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수형자 정역집행률의 성과분석, 정역 집행률 향상을 위한 교도작업 운영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형자 직업훈련, 교도작업 내실화를 통하여 수형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출소예정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역집행률(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율) 및 직업훈련수형자만족도 등을 포함하는 현 성과지표는 정책 내용을 대표하고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보통	■ 수익창출과 가치 제고의 핵심원천이 되는 무형의 지식재산(IP)에 대한 수형자 이해도 증진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허 심사 등 사무를 관장하는 특허청과 협업을 통한 기본·심화 교육 실시 및 특허 출원 지원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7%	■ 정역집행률(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율)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하도록 작업장려금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에 가입 추진, 경제적 자산 형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재범방지에 기여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교도작업제품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간담회 등 의견수렴 8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2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교정기관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및 환자, 노약자 등 면역력 취약자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 가석방 확대를 추진함
-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강력범에 대해 심층면접관 제도를 도입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가석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적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 출소 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범죄예방정책국과 협업체계 구축함

## □ 주요실적

-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환자 등 면역력 취약자 가석방 확대
  -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11회 개최
  - 가석방 실시 인원 9,390명, 가석방 출소율 34.4% ('21.12.31. 기준)
  - 「2021년 1월 및 11월 정기 가석방 추가신청 지시」
-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및 필요적 신청 대상자 확대
  -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및 ‘필요적 신청 대상자’ 등을 각 유형별 형집행률 5% 하향 조정하여 가석방 심사기회 확대
  - ※ 필요적 심사제도 : 교정기관의 신청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
- 심층면접관 제도 도입(' 21. 5.)하여 전문인력이 수형자를 대면면접, 심리검사,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지원
  - ※ 심층면접관 제도 :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수형자 대면면접, 심리검사, 건강상태, 보호자 및 보호시설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지원하는 제도

- 수형자 출석제도 활성화(' 21. 5.)를 통해 교정기관에서 필요시 수형자를 가석방예비회의에 출석시켜 개선의지, 사회복귀 준비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출석면담 자료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활용
  - ※ 수형자 출석제도 : 심사대상자가 가석방 예비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제도
- 정신질환자(마약투약자 등) 및 음주운전 등 재범 위험이 높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치료 등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감독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을 취소토록 개선

## □ 주요성과

-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장애인 등)에 대한 선별적 가석방 확대
  - 가석방 실시 인원 9,390명, 가석방 출소율 34.4% ('21.12.31. 기준)
    - ※ 전년대비 가석방 출소율 5.7% 증가(28.7%→34.4%)
    - ※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 완화적용 대상자 전년 대비 월평균 119.9% 증가 (272명→327명)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군(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
  - 「2021년 1월 정기 가석방 추가신청 지시」 ('21.1.14.)
  - 「2020년 11월 정기 가석방 추가신청 지시」 ('21.10.22.)
    - ※ 환자·노인 등 : 기존 신청 수준에서 형집행률 10% 완화하여 전월 대비 평균 허가인원 264% 증가('21년 1월 기준)
- 강력사범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수형자 출석제도 및 심층면접관 제도 도입
  - ※ '21. 심층면접 실시 현황 : 252명 (21. 5. 이후)
  - ※ '21. 가석방 예비회의 수형자 출석제도 실시 현황 : 106명 (21. 5. 이후)
- 마약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음주운전사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부과 등을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과, 전자감독과 등과 유관기관과 협업관계 구축

※ 마약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 10명 (21. 8. 이후)

※ 음주운전사범 특별조건부 가석방 : 125명 (21. 8. 이후)

○ 일선 업무담당자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소통

- 가석방 심사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 등을 위해 가석방 심사 실무 교육, 심층면접관 교육 및 비대면 워크숍 등 실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가석방 심사 시 재범위험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평가 및 개선 노력 필요

- ' 21. 5. ‘한국형사범무정책연구원’ 에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연구를 의뢰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해 노력

※ 교정재범예측지표 : 재범상관 요인 항목을 선정, 문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재범위험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단계화한 지표

※ 근거자료

(증1) 분류지표 타당성 연구계획(안)(210304)

(증2) 교정심리검사 도구개선 연구용역 계획(안)(210511)

○ 가석방 제도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및 오보에 대해 설명자료 배포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긍정적인 면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요청에 적극적 설명으로 지속적인 이해도 향상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전년도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자 인원 등 통계자료 및 제도개선, 법령·지침 개정 등의 자체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가석방 업무의 성과를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장애인·고령자),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여 수용인원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수용자 인권 향상 및 내실 있는 교정교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가석방 인원 증가율 및 가석방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정책내용을 대표하나,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보통	■ 마약 및 음주운전 사범 등 재범우려가 있는 가석방자에 대한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위험성 완화를 통한 사회안전에 기여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9.8%	■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자 인원 증가율(%)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모범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환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및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지속 추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달성하고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으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가석방 업무담당자 비대면 워크숍 등 의견수렴 5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3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14-8)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 분야 역량 강화 ■ (전략목표3) 인권위 권고 수용률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정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으로 인해 심리치료 업무가 원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 마약류사범 비대면 워크북 매뉴얼 개발 등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심리치료 시책을 발굴 운영하여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범인성 개선과 재범방지에 노력하였으며,
- 재범위험성 평가 및 이수명령 시간 등을 고려하여, 참여율 제고와 고위험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개선 하였음
- 또한, 전문적이고 중단없는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지원 및 비대면 자격취득(생애위기상담사, 중독심리사) 과정을 신설하는 등 자체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였고,
- 국회 및 언론에서 교정기관내 심리치료 전담부서 추가 신설 및 예산 증액, 전문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을 요구함

## □ 주요실적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유지과정 확대 및 특별과정 운영
  - 가학적·변태적 특정 성폭력사범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 지속적 관리를 위해 특성화된 추가적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심리 치료 효과 유지 및 범인성 개선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체계 개선
  -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정되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출소하는 인원이 없도록하기 위하여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및 운영시간 등 운영체계 개편
-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개편 및 이수명령 집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2.4. 시행)에 따른 마약류 투약사범 이수명령 법제화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이수명령 집행
- 효율적 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투약사범 대상 맞춤형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마약류사범 비대면 심리치료 워크북 개발

- 코로나19 확산 및 포스트(Post) 코로나에 대비하여 비대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단 없는 심리치료 시행 및 이수명령 집행 방안 마련

○ 핵심(CORE)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효율적 이수명령 집행

- 개별법상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제도 도입 확대 추세에 대응한 교정기관의 선제적인 이수명령 집행 체계 마련 필요

○ 생애위기상담사 / 중독심리사 양성과정 비대면 과정 신설

- 집합교육으로 시행해 왔던 전문자격 취득 과정을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 주요성과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심화과정 운영 기관 직원회의 개최(1. 8.)

- 심리치료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관리, 취소 대상자 관리 등 심화과정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직원회의 개최

○ 20년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사전-사후평가 결과 보고(1. 8.)

- 실시대상 : 20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심화과정 수료 194명
- 왜곡된 성인식 평가인 ‘강간통념’ 사전-사후 평가 결과 30.1% 감소 수치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나타냄

○ 우울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직원 교육용 영상 제작 완료(1. 22.)

- 우울특화 프로그램 매뉴얼 영상 교육으로 심리치료 담당 직원의 전문성 향상 등 우울증 환자의 증상 관리 능력 강화

○ 핵심(core)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2. 10.)

- 다양한 이수명령 집행에 활용하고, 추가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 고위험 성폭력사범 비대면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2. 23.)
  - 코로나19 확산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중단 없는 심리치료 방안 필요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유지과정」 확대 운영(3. 10.)
  - 특성화된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및 출소 후 재범 예방 도모
- 생애위기상담사(2급) 비대면 교육과정 운영 계획(3. 11.)
  - 자살 위기자를 인식하고 자살 전 징후에 대한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상담 능력 배양
-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임상심리사(2급) 취득 지원 계획(3. 24.)
  - 수용자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지속 양성 필요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특별과정 대상자 선정 자문회의(4. 19.)
  - 회의개요 : 4 13(화), 서울지방교정청, 특별과정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논의
- 심리치료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수련감독자 훈련 계획(5. 11.)
  - 내부 수련감독자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실질적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생애위기상담사(2급) 비대면 교육과정 결과 보고(5. 25.)
  - 자살예방 상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성 증대
- 중독심리사 양성과정 운영 계획(6. 1.)
  - 중독심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치료능력 배양
-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및 비대면 워크북 매뉴얼 개발(6. 15.)
  - 안정적인 이수명령 집행 추진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마련
-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계획(6. 15.)
  - 마약류 투약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담당 직원 실무능력 배양 및 전문성 향상

- 고위험 성폭력사범 비대면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6. 23.)
  -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등 비대면 상황에서 심리치료 실효성 제고
- 알코올관련 노역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계획(6. 29.)
  -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권고에 따라 알코올 중독 노역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적극 실시 등 출소전 치료·재활 방안 마련
-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기본과정 및 비대면 워크북 매뉴얼」 직원교육 개최(7. 2.)
  - 개발 완료된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교육을 통해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 도모
  - 직원 교육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수명령 집행 도모
-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비대면 워크북」 시범운영 계획(7. 8.)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비대면 치료프로그램 마련
- 수용자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공개사례발표회’ 개최(9. 8.)
  - 수용자 상담사례 공유, 업무 담당자 피드백 및 내·외부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해 수용자 상담·심리치료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편 방안(8. 20.)
  -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재범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관심이 고조되어,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필요
  - 재범위험성 평가 및 이수명령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참여율 제고 및 고위험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편 추진
- 심리치료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운영 계획 (8. 25.)
  -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수용자 전문상담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상담기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일선기관 심리치료 업무 담당직원 전문성 향상
- 자살예방 전문상담 인력 양성을 위한 ‘생애위기상담사(2급) 비대면 교육 과정’ 운영 계획(9. 2.)

- 자살예방 상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의 필요성 증대
- 자살 위기자를 인식하고 자살 전 징후에 대해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상담 능력 배양
- 여성 성폭력사범 개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9. 9.)
  - 여성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담 운영기관(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이송이 어려운 상황
  - 과밀상황 해소 전까지 이수명령이 병과된 여성 성폭력사범 중 출소 임박한 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적극 운영 방안(9. 16.)
  - 성폭력사범의 지속적 증가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성폭력사범 출소자 프로그램 수요율 매년 감소 추세
  - 최근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사범이 출소 후 3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 및 불안 증대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적극 운영 방안 마련
- 핵심(CORE)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10. 1.)
  - 범인성 개선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CORE)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적용 매뉴얼이 없는 소수 이수명령 및 규율위반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운영
- 「디지털 성범죄자 특성연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초매뉴얼 개발」 중간점검 회의 결과 보고(10. 8.)
  - 디지털 성범죄자가 접촉성범죄자에 비해 고학력, 소득수준이 높고, 일용직 및 단순노동 비율 낮음
  - 디지털 성범죄자가 접촉성범죄자에 비해 피해자의 수가 많고, 청소년 비율이 높고, 부부·연인 등의 이전의 친밀한 대인관계였던 경우가 많음
  - 디지털 성범죄자가 접촉성범죄자에 비해 재범위험성 정적 점수는 높고, 동적 점수는 낮음
- 2021년도 생애위기상담사(2급) 양성과정 자격시험 및 집합교육 일정 계획(10. 25.)
  - 자살예방 상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의 필요성 증대

- 수용자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자살예방 상담프로그램' 강화 방안(10. 26.)
  - (자살징후 포착)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스크리닝 강화
  - (자살위기 극복) '생명의전화' 위기상담 강화, 상담능력 제고
  - (수용자 변화 도모) 전문상담 체계 개편
- 직원정신건강 및 우울특화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워크숍 개최 계획(11. 10.)
  - 21년 신규 운영 중인 우울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담당직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CBT) 이해 및 프로그램 진행 역량 강화
  -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활성화 유도
- 21년도 제2차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계획(11. 17.)
  - 마약류 투약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담당직원 실무능력 배양 및 전문성 향상
- 고위험 성폭력사범 담당직원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11. 23.)
  - 국민적 불안 대상인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고위험 성폭력사범 비대면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정 / 보완사항 검토 및 활용 방안 논의

#### □ 미흡한 점 및 개선 · 보완사항

- 최근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건', 'N번방 사건' 등 계속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출소 전 교정기관 내에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 심리치료과 업무 및 기능에 대한 대내·외 인식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정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심리치료 전담부서를 추가 신설 및 정식 기구화 필요
-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을 발간하는 등 언론, 국민, 유관기관 홍보 활동 강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선 및 효과 분석을 위한 의견 수렴('20. 12.),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자 사전·사후 결과 분석 실시('21.1.)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보장하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사범 심화교육 수료자의 왜곡된 성의식 점수 감소율, 심리치료프로그램 전문화 실적을 내용으로 하는 현 성과지표는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미흡	■ 교정기관 치료공동체 도입을 위한 치료대상자 선발,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전담인력 확보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T/F 회의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4.3%	■ 성폭력사범 심화교육 수료자의 왜곡된 성의식 점수 감소율(%)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총 11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통한 특정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인성 개선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심화과정 운영기관 직원회의 개최 등 의견수렴 6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유튜브 게시 등 홍보 실적 11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에게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전략목표4) 보호관찰 대상자 중 집중대상자 재범률(%)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코로나19 유입 및 차단을 위해 교정시설 입·출입이 통제되는 등 범정부적인 코로나19 대응 및 차단으로 수용자 의료처우에 있어서 내·외부적 변수 요소에도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정책의 추진
- 고령화에 따른 성인병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 추세, 전문치료 요구 증대 등 수용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정책 확대 시행

## □ 주요실적

- 교정공무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감염병 유입 차단 총력 대응
- IT 기술을 활용한 교정시설 비대면 의료체계(원격진료) 구축
- 민간 의료기관 원격진료 유치·확대를 통한 의료처우 다양화
-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수용자 의료인권 향상
- 의료장비 현대화 및 의료환경 개선
- 인권 친화적 의료행정을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 □ 주요성과

-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 노력
  - 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 진단 검사 강화
    - ※ 신입 수용자 입소 시 PCR 검사 → 격리해제 전 PCR 검사로 무증상감염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직원 및 수용동 청소부 등 주기적 코로나19 주기적 PCR 검사 강화
  -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 훈련 시행(월 1회 이상)
  -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용자 코로나19 예방백신 우선 접종
    - ※ 수용자 접종 현황 : 수용자 53,136명 중 42,024명 접종 완료(접종률 79.1%, '21. 11. 19.기준)
    - ※ 직원 접종 현황 : 직원 16,802명 중 16,396명 접종 완료(접종률 97.6% 21. 11. 19.기준)

- 전국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 수원구치소 등 6개 교정기관 구축으로 전국 교정기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완료
    - ※ 기존 47개 → 전국 53개 교정기관 구축
- 민간 의료기관 원격진료 유치·확대를 통한 의료처우 다양화
  - '21. 6. 질병관리청에서 운영중인 원격진료 장비 9대를 인수, 지역 의료기관 내에 설치
    - ※ 음성현대병원 등 9개 지역병원 추가 유치(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강원북부교도소 등 18개 교정기관 대상 원격진료 개시
  -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한 전문의 진료 확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진료 대기기간 단축
- 2021년도 의무관 등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의무관 5명 충원, 공중보건 의사 94명 확보·배치
    - ※ 최근 3년간 공중보건 의사 현황, 71명 → 91명 → 94명
- 의료장비 현대화 및 의료환경 개선
  -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 컴퓨터 영상시스템(PACS·DR) 2, 치과파노라마 촬영기 2, 치과유니트 체어 2, X-ray 촬영기 4대 등 노후 장비 현대화
    - ※ 전국 53개 교정기관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냉장고 보급(백신 접종률 제고)
- 인권 친화적 의료행정을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 의무관 설명의무 신설, 교부허가의약품 반입절차 개선 등 수용자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권 친화적 의료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 ※ 시행 예정일 : 2022. 1. 1.(토)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지속적인 의무관 결원률 등 의료인력의 만성적 부족상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 확대, 의무관 인센티브 부여, 다각적인 홍보 및 채용 방안 등 중장기적 보완 필요
-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등 의무관 인력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전년도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 외부의사 교정시설 방문진료 건수 등 보건의료 통계 및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보고사례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수형자 의료처우 개선으로 건강한 수용생활을 보장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여 교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격의료시스템은 Post-코로나 시대에도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격의료 이용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 현 성과지표는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우수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중인 원격진료시스템 9대를 인수, 지역 의료기관 내에 비대면 원격진료시스템 유치 및 설치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7.7%	■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코로나19 집단감염 대비, 교정시설 내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및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에 따라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강화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국가지급의약품, 혈액투석 및 자비구매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회의 등 의견수렴 5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6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소년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신규 입원소년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실시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소년원 직원 백신 우선 접종, 방역단계별 자체 매뉴얼 마련, 주기적인 대응훈련 실시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염병 확산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
-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및 전국 소년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혁신 T/F', '교육계획 개편 T/F' 운영을 통해 소년보호정책 대전환의 계기 마련
- 대구소년원에 교과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개인 특성별, 비행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년원생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생활실 소규모화, 색채디자인 도입 등 소년원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친인권적 환경조성을 통한 교정교육의 실효성 제고
- 다만, 유급강사·시험감독관 등 외부인 출입 제한 및 보호소년 등의 외부활동 차단에 따른 시험응시 기회 감소 등으로 인해 지표상(교육과정수료자 1인당 교육목표달성도) 교육성과가 다소 하락

## □ 주요실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활동 강화 및 소년보호기관 직원, 학생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병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
- 위탁소년 전담 시설 개관, 과학적인 비행원인진단, 전문적인 인성 교육 등 비행 초기단계 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위탁기능 강화

-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계속 추진하여 기존 혼거형 집단 생활실을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
- 소년원 학생의 전인적 인격 형성, 민주시민 자질 함양, 기초학습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강화
-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전담 수용하고 개별 특성을 반영한 의료처우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 등 시스템 구축

#### □ 주요성과

-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내실 있는 교정교육 실시
- 인권적 수용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한 시설 개선
-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우하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인권 중심의 생활지도 기반 마련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초기 비행단계 위탁소년의 실질적 비행성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분류심사관의 보임기준 개정, 분류심사 적정 업무량을 제시하여 분류심사 전문성 제고 추진
-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하였으나, 보호소년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위탁소년 생활관 등은 상대적으로 낙후, ‘제주·광주·대전·대구소년원’ 위탁수용 시설 개선공사 필요
-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유급강사 출입금지, 보호소년 개방처우 중지, 소년보호위원·자원봉사자 교육활동 불가, 외부경시대회 참가 및 외부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제한 등으로 교육훈련에 한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계·법조계·종교계 및 인권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 4. ~ '21. 4. 까지 정례회의를 11회 개최</li> <li>■ 최근 10년간 소년보호기관 교육·수용 통계 및 소년범죄관련 주요 통계 분석</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과제는 소년원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처우를 제공하여 교정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자립역량을 마련하여 출원 후 재비행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교육목표 달성도만으로는 안정적 사회 정착 실현이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워 교육 만족도 등 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ul>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li> </ul>
4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액의 30% 감면으로 코로나19 대응 장기화 등 교정공무원 건강 향상 증진</li> </ul>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수료자 1인당 교육목표 달성도(건)</li> </ul>
6	정책 효과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소년 및 직원, 외부 출입인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모의 훈련 실시 계획' 수립</li> </ul>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원 학사업무 개선 협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10회 실시</li> </ul>
8	홍보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1회</li> </ul>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li> </ul>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li> </ul>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의료인력 및 병동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의무직 급여 인상, 관사 리모델링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성과를 나타냄
-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생계 곤란 수용자의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보관금 지원, 중증환자 간병 및 교육보조 확충을 위한 대체복무역 도입을 추진하는 등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과밀 병상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방역시설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수용안정을 도모함
-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강사 교육의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재활치료 및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하여 치료·재활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출소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및 재입소율을 낮추는 성과를 나타내는 등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해 노력함

## □ 주요실적

- 의료인력 충원을 통한 치료환경 개선(의료인력 총 20명 충원)
- 의무직 처우개선(기준연봉액 인상, 관사리모델링)
-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특수의료장비 도입, 보관금 지원,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대체복무역 도입 추진)
- 치료감호 내실화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직업훈련 확대실시, 정신재활치료 강화,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 발주 등)
- 출소자 사후관리 강화(무상외래 진료 1,483회 실시)

## □ 주요성과

- 의료인력 충원을 통한 치료환경 개선(의사, 간호사)
  - '21.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19명 채용

- '21. 전공의 1년차 2명 배치 및 '22. 전공의 1년차 정원 2명 확보
- 의무직 처우개선
  - '21. 4. ~ 10. 임기제 의사 기준 연봉액 180~200% 인상·지급
    - ※ 민간병원 대비 낮은 처우, 격오지 근무, 범법정신질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의사 보수인상이 시급하여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인상 추진
-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범죄의 규명과 치료기법 고도화를 위한 '21. MRI·CT 도입
  - 생계 곤란 수용자의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보관금 지원(12백만원)
  - '21. 중증환자 간병, 교육 및 급식보조 인력 확충을 위해 대체복무역 도입 추진
  - 중증환자 집중치료 병동 신축 진행(지상4층 지하1층, 400병상 규모)
    - ※ '21. 11. 현재 공정률 15%, '23. 10. 완공예정
- 치료감호 내실화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 피치료감호자 선호도가 높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 '21년 PC정비, 제과·제빵, 바리스타, 건축도장, 정보기기, 바리스타&데코레이션 등 직업훈련 1,184명 교육(11월 기준)
  -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정신재활치료 강화
    - ※ 심리극, 천연재료 공방, 퓨전민화와 문양, 도자기, 수족관 치료, 영화치료, 원예치료, 레크레이션 등 1,754명 수료
  - 대한법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의료인력 전문성 강화 및 홍보('21. 12. 3.)
  - 치료감호 집행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발주('21. 4. ~ '21. 11.)
- 출소자 사후관리 강화
  - 치료감호소 및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을 통해 출소자 무상외래 진료 지원, 총 1,483회 실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을 충원하였으나, 신규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여 여전히 의사 1인당 환자수는 「정신건강복지법」 기준대비 150% 수준으로, 의사확충을 위해 지속적 노력 필요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병상 수 축소 및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등으로 유희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 단계적 추가 증원 필요
  - ※ 현재는 8인실이하로 축소하였고, '23. 1. 1.이후에는 6인실 이하로 개선하고 유희병동을 활용하여 수용 예정
- 코로나-19 방역 관련 교육활동 중단에 따라 교육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나, 과정별 교육휴지기를 줄이고, 보강을 통해 치료재활교육 진행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및 20년 의무직 채용공고 및 채용 결과 비교 분석</li> <li>■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업무협약의견수렴('21. 2.~3.)</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과제는 내실 있는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재범률 감소의 기반을 조성하고 피치로 간호자에 대한 작업치료 등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으므로 재활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지표는 정책 대표성이 있는 지표로 판단됨</li> </ul>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li> </ul>
4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병원 대비 낮은 급여, 격오지 근무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임기제 의사 4명 기준연봉액 180~200% 인상)</li> </ul>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재활프로그램 만족도(점수) 등 2개 지표</li> </ul>
6	정책 효과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 곤란 수용자 대상 보관금 지원(12백만원) 및 중증환자 간병, 교육 및 급식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대체복무역 도입 추진</li> </ul>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감호소 간담회 등 의견수렴 8회 실시</li> </ul>
8	홍보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9회</li> </ul>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li> </ul>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li> </ul>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다양한 지역사회자원 활용,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실시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긍정적 행동변화를 유도하였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 및 직무교육 실시,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 대책 수립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추진

## □ 주요실적

- 정부 부처, 민간단체 자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업무협약 강화
-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학습권 무료 지원, 미혼모·조혼가정 생활비 지원 등 실질적인 원호 지원 실시
- 성폭력·강력범죄 및 정신질환자 등 재범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전문처우 프로그램 집행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 □ 주요성과

-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범위 확대
  - (주)에듀윌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원('21. 3.)
  -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등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간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21. 4.~12.)
    - ※ 399개교 재학중인 대상자 732명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찰지원 조례 제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복귀를 위한 경제지원 확대 : 총 58개(제주, 대전, 광주, 정읍 등)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특별 보호관찰위원 등 사회자원을 연계하여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와 학업 지원('21. 6.)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처우 프로그램 등 확대
  -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관계회복을 중시하는 회복적사범 매뉴얼 개발 및 운영('21. 3.)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가해자와 패널회의 참여를 희망한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사법 패널회의 진행 등 ‘마음이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진행(‘21. 4.~12.)
-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대면상담 등 콜코칭 프로그램 운영(‘21. 1.~12.)
  - ※ 대상자 754명, 심층상담 2,092회, 콜코칭(야간전화상담) 14,460회 실시
- 성폭력·마약사범 및 정신질환자 대상자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프로그램 실시(‘21. 1.~12.)
  - ※ 연계 상담 1,858회 실시
- 심리상담전문가·보호관찰위원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21. 1.~12.)
  - ※ 대상자 3,293명, 멘토링 29,037회 실시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학대 방지 및 건강한 가정기능 회복 지원(‘21. 5.)
-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정신질환 치료지원(‘마음보듬’) 및 심리상담(‘마음톡톡’) 프로그램 진행(‘21. 6.~12.)
- 보호관찰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직무교육 실시
  - 성인보호관찰 지침 개편 대면회의 실시(‘21. 6.)
  - 보호관찰 기관장 영상회의 실시(‘21.2.~11.)
  - 성인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담당 과장 영상회의(‘21. 10.)
  - 소년 보호관찰 전담직원 간담회 실시(‘21. 11.)
- 법령·시행령 등 제·개정을 통한 대상자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 보호관찰법 개정(‘21. 6.) 및 보호관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 9.)
  - 보호관찰 인권보호 지침 제정(‘21. 8.)
  - 온라인 수강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한 민간 영상회의 플랫폼(BODA) 도입(‘21. 9.)
  -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집행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21. 10.)
- 소속기관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실태점검 실시
  - 보호관찰 16개기관 업무현황 점검 지도방문 실시(‘21. 3. ~ 11.)
- 정책고객 의견을 반영한 보호관찰제도 발전방향 모색
  - 보호관찰 정책연구과제 심의소위원회 실시(‘21. 3.), 보호관찰 학회 개최(‘21. 4., 11.)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법무행정 구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개선·보완사항

- 보호관찰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담당직원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및 보호관찰위원 등 민간자원 활용 확대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매월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및 통계 분석, 반기별 전국 보호관찰기관에 대한 업무실적 성과평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내실화 등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및 강력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처우프로그램 실시 인원은 정책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교육부와 협력,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중단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사·보호관찰 학생 1:1 멘토링 프로그램 전국 실시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2.3%	■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보호관찰 인권보호 지침」 마련으로 고위험 사범에 대한 강화된 지도 감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 사전 방지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실무자 회의 등 현장의견 5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21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사회경력 단절, 직업능력 부족 등으로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출소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확대 추진을 통해 출소자가 재범의 악순환에서 취업의 선순환으로 전환하여 따뜻한 사회 구현에 기여
-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출소자 채용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 및 지역사회 내 출소자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체의 지속 발굴, 고용우수기업 대외 공신력 강화를 통해 출소자 일자리 기반 확충 노력 추진
- 자발적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실효성 있는 출소자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기반 마련 보완 필요

## □ 주요실적

- 취업지원사업 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및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여건 마련
  -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계획인원 '20년(6,500명) 대비 500명(7,000명) 증가
  - ※ 수행기관(공단) 소속 19개 지부에 '취업지원과' 신설 및 인력 재배치
- 취업지원사업 참여 취업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로 사후관리 체계화 추진
  - ※ 보건복지부 행복e음 전산 활용 및 알림 팝업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
- 직업훈련 성과 제고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여성 특화 종합 기술교육원 이전 운영으로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
  - ※ 서울동부기술교육원(조리,이미용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개시('21.2.)
- 출소자 고용기반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공신력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위한 자원봉사자 정부포상 실시
  - ※ 고용우수기업 인증 주체 '공단 이사장' → '법무부 장관'으로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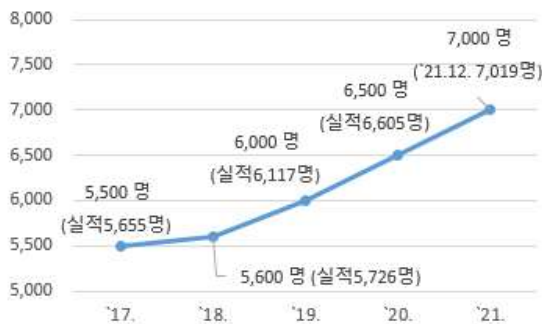
- ※ '21.11.3.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통해 정부포상(6건) 유공 자원봉사자 수여
- 유관기관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출소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참여 확대
  - ※ 교정·보호관찰·공단 본부 실무자 간담회 분기별 개최(연 4회)
  - ※ 취업지원사업 계획인원 교정(3,700명), 보호관찰(1,000명) 배정 및 연계 협조

□ 주요성과

**1. 취업지원사업 수행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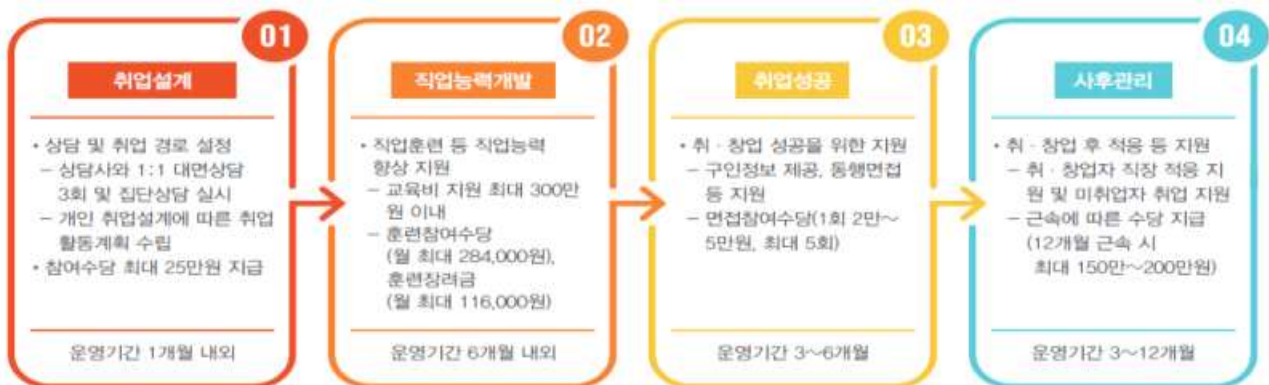
**【양적·질적 취업지원사업 확대】**

- 사업계획인원 '20년(6,500명) 대비 7.7%증가한 7,000명 지원 추진
- 직업훈련,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20년(82억 원) 대비 3.5% 증가(85억 원)



- 전체 예산 중 57.5%를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출소자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으로 집행하여 참여자의 자립을 유도

**【취업지원사업 단계별 지원 내역】**



## 【취업지원 인력 사업수행 역량 강화】

- 수행기관(공단) 소속 19개 지부에 취업전담 조직인 '취업지원과' 신설을 통한 업무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
  - ※ 취업지원과 신설을 통해 출소자 취(창)업, 직업훈련 등을 전담('21.8.30.직제개편완료)

### < 취업지원전담 조직 개편 내용 >

- 보호사업과, 행정지원과 ⇨ (통합) 법무보호과(보호사업팀, 행정지원팀)  
⇨ (신설) 취업지원과(취업전담팀, 직업훈련팀)
- (기존) 1개 지부 2개(보호, 행정)과 운영 ⇨ (변경) 19개 지부로 확대 운영

- 취업지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전문교육 실시 추진
  - ※ 업무매뉴얼, 26개 공단 지부소, 유관기관(55개 교정기관, 57개 보호관찰소) 580부 배부
  - ※ 한국직업상담협회 업무협약 체결(3. 9.), 상담사 76명 교육 실시(3. 30. ~ 4. 9.)
- 공단 본부·일선기관 소통 강화를 위해 Q&A게시판 신설 및 운영으로 실시간 건의사항 수렴, 실적점검, 추진상황 공유
  - ※ 매뉴얼 게시판 운영(181개 질의 및 답변 지원), 매월 화상회의를 통한 실적 점검, 건의사항 수렴, 중점추진사항 공유 추진(12회)
- 학술대회를 통한 취업지원사업 등 법무보호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는 등 발전방안 모색으로 이론적 토대 강화
  - ※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사업 개선방안 모색

###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

- (주제)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원현황과 발전방안
- (일시) '2021. 05. 28.(금) 14:20~17:00
- (장소) 비대면 - 화상회의 시스템(Webex)
- (주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주요내용) 취업지원 등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방안 토론
  - ※ 출소자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고용주에 대한 우대제도 법제화 필요
  - ※ 취업지원 수혜인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등

## 【취업성공수당 지급 개편을 통해 출소자 취업의지 고취】

-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에 대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시, 구비서류를 재직증명서 하나로 간소화(근로계약서 등 4개→재직증명서 1개)
- 숙박업 등 창업성공자에 대해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 ※ '21년, 창업성공수당 15명 지급

## **【취업지원 성과관리 등을 통한 업무개선 및 동기부여】**

- 상반기 취업지원사업 추진현황점검을 통한 취업지원사업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하반기 사업 개선방안 마련
  - ※ 실적 점검 및 개선 대책 수립(취업박람회(20회, 122개 기업체 참여, 62명 현장채용) 동행면접 등을 통해 미취업 종료자에 대한 집중적인 취업 지원 추진
- 취업전담 인력 55명(관리자 제외)에 대하여 월 3명 이상 취업알선 실적 달성 시 포상휴가 부여를 통한 실적 독려
  - ※ 실적휴가 : '21년 350명에게 191일 지급

## **2.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

### **【참여자 취업 지원 상담 시태 점검 등 업무 전문화 추진】**

- 취업지원 전담직원의 상담 실태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취업지원 활동 내실화가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추진
  - ※ '21년 진행자 6,160명에 대한 구직인증번호 등록, 상담입력 등 멘토링 및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 미흡사항 635건 보완 조치

### **【취업자 장기근속 기반 마련을 위한 초기정착금 등 지원】**

- 취업자가 첫 급여 및 취업성공수당을 수령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비·식비 등을 보조하여 장기근속 유도

#### **< 초기정착금 개요 >**

- (지급대상)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기업체에 취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여, 취업근속한 자에게 지급
- (지원인원 및 금액) 총 60명, 1,800만원
  - ※ 1인당 30만원
- (대상자 선정) 전국취업위원연합회 임원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

### 3. 직업훈련 성과 제고 기반 강화

#### 【취업직종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출소자가 강점을 보이는 다수 취업직종 분석을 통해 해당분야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지원
  - ※ 주요취업직종 : 미용·조리·청소 17.8%, 운전·운송 28.5%, 건설 11.5%, 생산 17.6% 등
- 전국 7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여 맞춤·특화형 직업훈련 실시
  - ※ '17.~'21. 기술교육원 운영 실적 : 입교 1,793건, 수료 1,353건, 취업 642명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운영중단 상황 극복】

-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4단계 지속에 따른 기술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중단 상황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직업훈련 실시 여건 마련으로 대상자 지원 정상화 추진
  - ※ 코로나에 따른 교육 중지 시 교육 참여 가능 횟수 차감에서 제외(최대 3회 교육과정 참여 가능)
  - ※ 실기형 직업훈련 시 교육생 상호간 1.5m 거리두기 유지 또는 독립공간 활용을 준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 4. 출소자 고용기반 확대 및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

#### 【지역사회 고용협력기업 발굴 및 출소자 고용 장려】

- 출소자 고용우수기업 우대조치 등 법제화 추진
  - ※ '21. 4. 23.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김남국 의원), 6. 18. 전체회의 상정
  - ※ '21.05. 백상준 입법조사관 설명
  - ※ '21.06.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 설명
  - ※ '21.08. 더불어민주당 장기홍 전문위원 설명
  - ※ '21.09., 11.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 업무협의



**<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입법취지) 출소자 등의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회적 관심 및 국민 참여 유도 등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분리입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주요내용
  - (지원확대) 기존 법무보호의 방법에 중독자 재활, 사회적응 교육 등 추가
  - (출소자 고용사업주 우대) 고용협력 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 근거 마련
  - (범죄경력 등 정보조회) 출소자 등의 재범방지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부부처 정보 열람 근거 마련

**【법률 제정 추진 경과】**

발의		회부		관계부처 의견조회		전체회의 상정
- (발의일) '21. 4. 23	⇒	- (회부) '21. 4. 26 · 법제사법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21. 5. 1.~ 5. 18.	⇒	- '21. 6. 18.

- 출소자의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고용협력기업 발굴 추진
  - ※ '21년 300개 기업체 발굴 및 MOU체결
- 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인증식 개최
  - ※ '21년 총 10개 인증

**<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황 >**

- (정의)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 고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기업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인증한 기업
- (연혁) '09년 1출소자 1기업 고용 캠페인 추진, 관련 연계를 위하여 '09년 제1호 고용우수기업(우신택스) 인증을 시작으로 '21년 12월까지 총 60개 기업체 인증
- (목적) 출소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고용기반 확충
- (인증시기) 매년 분기별 1개 기업체(연 4개) 인증 ⇒ '20년 6개, '21년 10개 기업 인증으로 기업체 수 확대
- (인증조건) 출소자 전체 고용인원, 고용인원의 근속기간, 현재근속인원, 고용 활성화 및 근속 유도 실적,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60점 이상 획득 기업체 인증

- 수행기관에 대한 기업확보 실적 가점 부여 등 기관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성과지향적 업무 추진 여건 마련
  - ※ '21년 2월 성과관리지침 내용 반영 시행, 상반기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기업 대상 출소자 채용 희망 고용주 확보 추진
  - ※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홍보용 안내문 제작('21. 5.), '21년 12월 기준 744명 기업주에 홍보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출소자 지원 여건 마련
  - ※ 서울특별시 등 243개 시·도,시군구 중 72개 지역 제정 완료('13. 9. ~ '21. 12.)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 (목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 지역사회에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 기여
- (지원내용)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직업교육, 자자체 내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우수사례 >**

해당 조례명	세부 내용
제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조금 지급(5천만원) ⇨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 심리치료, 치료명령 대상자 집중상담,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서산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 법무보호위원협의회 보조금 지급(520만원) ⇨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 저소득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책가방, 미술치료, 영화티켓 전달 등 지원

**【출소자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협력기업 발굴】**

-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대상 홍보 및 출소자 채용 희망 고용주 확보를 위해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 강화 추진
- ※ 자원봉사자 821명 확보(누적인원, '21년 87명 확보, '21.12월말 기준)
- ※ (고용노동부)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으로 2021년 1,222개 기업 선정

 <p>↑ 강소기업 설명 인터넷 사이트</p>	<p align="center"><b>2021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명단</b></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비밀번호</th> <th>사명명</th> <th>소재지명</th> <th>업종명</th> <th>업종코드</th> <th>기업명</th> <th>주소</th> </tr> </thead> <tbody> <tr><td>1</td><td>123456789</td><td>ABC기업</td><td>서울</td><td>제조업</td><td>27100</td><td>ABC기업</td><td>서울시 강남구</td></tr> <tr><td>2</td><td>987654321</td><td>DEF기업</td><td>부산</td><td>서비스업</td><td>71100</td><td>DEF기업</td><td>부산시 중구</td></tr> <tr><td>3</td><td>567890123</td><td>GHI기업</td><td>대구</td><td>제조업</td><td>27100</td><td>GHI기업</td><td>대구시 서구</td></tr> <tr><td>4</td><td>345678901</td><td>JKL기업</td><td>인천</td><td>제조업</td><td>27100</td><td>JKL기업</td><td>인천시 남동구</td></tr> <tr><td>5</td><td>234567890</td><td>MNO기업</td><td>대전</td><td>제조업</td><td>27100</td><td>MNO기업</td><td>대전시 유성구</td></tr> <tr><td>6</td><td>123456789</td><td>PQR기업</td><td>광주</td><td>제조업</td><td>27100</td><td>PQR기업</td><td>광주시 서구</td></tr> <tr><td>7</td><td>987654321</td><td>STU기업</td><td>울산</td><td>제조업</td><td>27100</td><td>STU기업</td><td>울산시 중구</td></tr> <tr><td>8</td><td>567890123</td><td>VWX기업</td><td>경남</td><td>제조업</td><td>27100</td><td>VWX기업</td><td>경남 창원시</td></tr> <tr><td>9</td><td>345678901</td><td>YZA기업</td><td>충청</td><td>제조업</td><td>27100</td><td>YZA기업</td><td>충청남도 천안시</td></tr> <tr><td>10</td><td>234567890</td><td>BCD기업</td><td>경북</td><td>제조업</td><td>27100</td><td>BCD기업</td><td>경북 대구시</td></tr> <tr><td>11</td><td>123456789</td><td>EFG기업</td><td>전남</td><td>제조업</td><td>27100</td><td>EFG기업</td><td>전남 목포시</td></tr> <tr><td>12</td><td>987654321</td><td>HJK기업</td><td>전북</td><td>제조업</td><td>27100</td><td>HJK기업</td><td>전북 익산시</td></tr> <tr><td>13</td><td>567890123</td><td>LMO기업</td><td>경상</td><td>제조업</td><td>27100</td><td>LMO기업</td><td>경상북도 김천시</td></tr> <tr><td>14</td><td>345678901</td><td>NOP기업</td><td>충청</td><td>제조업</td><td>27100</td><td>NOP기업</td><td>충청북도 청주시</td></tr> <tr><td>15</td><td>234567890</td><td>QRS기업</td><td>경북</td><td>제조업</td><td>27100</td><td>QRS기업</td><td>경북 포항시</td></tr> <tr><td>16</td><td>123456789</td><td>TUV기업</td><td>경남</td><td>제조업</td><td>27100</td><td>TUV기업</td><td>경남 창원시</td></tr> <tr><td>17</td><td>987654321</td><td>WXY기업</td><td>충청</td><td>제조업</td><td>27100</td><td>WXY기업</td><td>충청남도 당진시</td></tr> <tr><td>18</td><td>567890123</td><td>ZAB기업</td><td>경북</td><td>제조업</td><td>27100</td><td>ZAB기업</td><td>경북 안동시</td></tr> <tr><td>19</td><td>345678901</td><td>BCD기업</td><td>전남</td><td>제조업</td><td>27100</td><td>BCD기업</td><td>전남 목포시</td></tr> <tr><td>20</td><td>234567890</td><td>EFG기업</td><td>전북</td><td>제조업</td><td>27100</td><td>EFG기업</td><td>전북 익산시</td></tr> <tr><td>21</td><td>123456789</td><td>HJK기업</td><td>경상</td><td>제조업</td><td>27100</td><td>HJK기업</td><td>경상북도 김천시</td></tr> <tr><td>22</td><td>987654321</td><td>LMO기업</td><td>충청</td><td>제조업</td><td>27100</td><td>LMO기업</td><td>충청북도 청주시</td></tr> <tr><td>23</td><td>567890123</td><td>NOP기업</td><td>경북</td><td>제조업</td><td>27100</td><td>NOP기업</td><td>경북 포항시</td></tr> <tr><td>24</td><td>345678901</td><td>QRS기업</td><td>경남</td><td>제조업</td><td>27100</td><td>QRS기업</td><td>경남 창원시</td></tr> <tr><td>25</td><td>234567890</td><td>TUV기업</td><td>충청</td><td>제조업</td><td>27100</td><td>TUV기업</td><td>충청남도 당진시</td></tr> <tr><td>26</td><td>123456789</td><td>WXY기업</td><td>경북</td><td>제조업</td><td>27100</td><td>WXY기업</td><td>경북 안동시</td></tr> <tr><td>27</td><td>987654321</td><td>ZAB기업</td><td>전남</td><td>제조업</td><td>27100</td><td>ZAB기업</td><td>전남 목포시</td></tr> <tr><td>28</td><td>567890123</td><td>BCD기업</td><td>전북</td><td>제조업</td><td>27100</td><td>BCD기업</td><td>전북 익산시</td></tr> <tr><td>29</td><td>345678901</td><td>EFG기업</td><td>경상</td><td>제조업</td><td>27100</td><td>EFG기업</td><td>경상북도 김천시</td></tr> <tr><td>30</td><td>234567890</td><td>HJK기업</td><td>충청</td><td>제조업</td><td>27100</td><td>HJK기업</td><td>충청북도 청주시</td></tr> </tbody> </table> <p>↑ 2021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명단</p>	번호	비밀번호	사명명	소재지명	업종명	업종코드	기업명	주소	1	123456789	ABC기업	서울	제조업	27100	ABC기업	서울시 강남구	2	987654321	DEF기업	부산	서비스업	71100	DEF기업	부산시 중구	3	567890123	GHI기업	대구	제조업	27100	GHI기업	대구시 서구	4	345678901	JKL기업	인천	제조업	27100	JKL기업	인천시 남동구	5	234567890	MNO기업	대전	제조업	27100	MNO기업	대전시 유성구	6	123456789	PQR기업	광주	제조업	27100	PQR기업	광주시 서구	7	987654321	STU기업	울산	제조업	27100	STU기업	울산시 중구	8	567890123	VWX기업	경남	제조업	27100	VWX기업	경남 창원시	9	345678901	YZA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YZA기업	충청남도 천안시	10	234567890	BCD기업	경북	제조업	27100	BCD기업	경북 대구시	11	123456789	EFG기업	전남	제조업	27100	EFG기업	전남 목포시	12	987654321	HJK기업	전북	제조업	27100	HJK기업	전북 익산시	13	567890123	LMO기업	경상	제조업	27100	LMO기업	경상북도 김천시	14	345678901	NOP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NOP기업	충청북도 청주시	15	234567890	QRS기업	경북	제조업	27100	QRS기업	경북 포항시	16	123456789	TUV기업	경남	제조업	27100	TUV기업	경남 창원시	17	987654321	WXY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WXY기업	충청남도 당진시	18	567890123	ZAB기업	경북	제조업	27100	ZAB기업	경북 안동시	19	345678901	BCD기업	전남	제조업	27100	BCD기업	전남 목포시	20	234567890	EFG기업	전북	제조업	27100	EFG기업	전북 익산시	21	123456789	HJK기업	경상	제조업	27100	HJK기업	경상북도 김천시	22	987654321	LMO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LMO기업	충청북도 청주시	23	567890123	NOP기업	경북	제조업	27100	NOP기업	경북 포항시	24	345678901	QRS기업	경남	제조업	27100	QRS기업	경남 창원시	25	234567890	TUV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TUV기업	충청남도 당진시	26	123456789	WXY기업	경북	제조업	27100	WXY기업	경북 안동시	27	987654321	ZAB기업	전남	제조업	27100	ZAB기업	전남 목포시	28	567890123	BCD기업	전북	제조업	27100	BCD기업	전북 익산시	29	345678901	EFG기업	경상	제조업	27100	EFG기업	경상북도 김천시	30	234567890	HJK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HJK기업	충청북도 청주시
번호	비밀번호	사명명	소재지명	업종명	업종코드	기업명	주소																																																																																																																																																																																																																																																		
1	123456789	ABC기업	서울	제조업	27100	ABC기업	서울시 강남구																																																																																																																																																																																																																																																		
2	987654321	DEF기업	부산	서비스업	71100	DEF기업	부산시 중구																																																																																																																																																																																																																																																		
3	567890123	GHI기업	대구	제조업	27100	GHI기업	대구시 서구																																																																																																																																																																																																																																																		
4	345678901	JKL기업	인천	제조업	27100	JKL기업	인천시 남동구																																																																																																																																																																																																																																																		
5	234567890	MNO기업	대전	제조업	27100	MNO기업	대전시 유성구																																																																																																																																																																																																																																																		
6	123456789	PQR기업	광주	제조업	27100	PQR기업	광주시 서구																																																																																																																																																																																																																																																		
7	987654321	STU기업	울산	제조업	27100	STU기업	울산시 중구																																																																																																																																																																																																																																																		
8	567890123	VWX기업	경남	제조업	27100	VWX기업	경남 창원시																																																																																																																																																																																																																																																		
9	345678901	YZA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YZA기업	충청남도 천안시																																																																																																																																																																																																																																																		
10	234567890	BCD기업	경북	제조업	27100	BCD기업	경북 대구시																																																																																																																																																																																																																																																		
11	123456789	EFG기업	전남	제조업	27100	EFG기업	전남 목포시																																																																																																																																																																																																																																																		
12	987654321	HJK기업	전북	제조업	27100	HJK기업	전북 익산시																																																																																																																																																																																																																																																		
13	567890123	LMO기업	경상	제조업	27100	LMO기업	경상북도 김천시																																																																																																																																																																																																																																																		
14	345678901	NOP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NOP기업	충청북도 청주시																																																																																																																																																																																																																																																		
15	234567890	QRS기업	경북	제조업	27100	QRS기업	경북 포항시																																																																																																																																																																																																																																																		
16	123456789	TUV기업	경남	제조업	27100	TUV기업	경남 창원시																																																																																																																																																																																																																																																		
17	987654321	WXY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WXY기업	충청남도 당진시																																																																																																																																																																																																																																																		
18	567890123	ZAB기업	경북	제조업	27100	ZAB기업	경북 안동시																																																																																																																																																																																																																																																		
19	345678901	BCD기업	전남	제조업	27100	BCD기업	전남 목포시																																																																																																																																																																																																																																																		
20	234567890	EFG기업	전북	제조업	27100	EFG기업	전북 익산시																																																																																																																																																																																																																																																		
21	123456789	HJK기업	경상	제조업	27100	HJK기업	경상북도 김천시																																																																																																																																																																																																																																																		
22	987654321	LMO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LMO기업	충청북도 청주시																																																																																																																																																																																																																																																		
23	567890123	NOP기업	경북	제조업	27100	NOP기업	경북 포항시																																																																																																																																																																																																																																																		
24	345678901	QRS기업	경남	제조업	27100	QRS기업	경남 창원시																																																																																																																																																																																																																																																		
25	234567890	TUV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TUV기업	충청남도 당진시																																																																																																																																																																																																																																																		
26	123456789	WXY기업	경북	제조업	27100	WXY기업	경북 안동시																																																																																																																																																																																																																																																		
27	987654321	ZAB기업	전남	제조업	27100	ZAB기업	전남 목포시																																																																																																																																																																																																																																																		
28	567890123	BCD기업	전북	제조업	27100	BCD기업	전북 익산시																																																																																																																																																																																																																																																		
29	345678901	EFG기업	경상	제조업	27100	EFG기업	경상북도 김천시																																																																																																																																																																																																																																																		
30	234567890	HJK기업	충청	제조업	27100	HJK기업	충청북도 청주시																																																																																																																																																																																																																																																		

- 출소자 취업처 확대 등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유망 기업체 중심으로 고용협력기업 확보 및 출소자 맞춤형 일자리 갭(Gap) 창출 ⇨ 업무협약(MOU) 체결

※ 일반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업종(폐기물처리, 생산직 등)  
 ※ '21. 12. 300개 기업체와 MOU 체결, 267명 취업(취업률 89.0%)

**【출소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활동 전개】**

- 취업지원사업 등 법무보호사업 홍보영상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에 송출, 유튜브 채널 운영, 출소자 지원사례 언론보도, 언론기고 등 인식개선활동 실시

※ 유튜브 구독 인원 265명 확대(누적 423명), 영상 55개 게시(누적 140개)

**【고용우수기업 우대조치를 위한 법제화 추진】**

-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을 통해 출소자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21. 4. 23.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김남국 의원), 6. 18. 전체회의 상정  
 ※ '21. 5. 백상준 입법조사관, '21. 8. 더불어민주당 장기홍 전문위원에게 법안 설명

**< 현재 출소자 고용우수기업 혜택 >**

- 공항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 신용보증기금 우대 혜택  
 ※ 보증 금액 비율 우대(기존 80% → 90%), 발급 보증서 보증료율 0.2% 차감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간소화(첨부 서류 간소화 및 업체 방문 실태조사 면제)
- 인증마크 사용(유효기간 내 업체 생산 제품 등에 인증마크 부착 가능)

- 법률 입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이견 접수에 따라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하여 기재부 대면 협의, 수정안 마련

**< 입법(안) 관련 기획재정부 의견에 대한 대응 >**

- (기재부 의견) 법률안 제43조에 대하여 공공조달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 공정한 계약 추진 등 국가계약법 목적 저해 우려 전체 삭제 요청

제43조(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법무부 장관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선정 및 우대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무부 설명) 우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출소자의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대조치 필요성에 대한 건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주체 상향을 통한 공신력 제고】

- 인증 주체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 법무부 장관으로 승격, 관련 지침을 상위 규정으로 정비하여 제정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고용우수기업) 인증 관련 규정』

###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고용우수기업) 인증 관련 규정 >

- 제정이유
    - 공단이 심사·선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증하는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우수기업의 선정 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인증주체 변경) 공단 이사장 ⇨ 법무부 장관
    -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구성(외부위원 포함)
    - 심사기준 변경 및 강화
      - (정량평가) 전체 고용 인원, 근속기간, 현재원, 고용률 등 70% 비중
      - (정성평가) 고용활성화 및 근속유도,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30% 비중
    - 인증취소 사유 명확화
      - 거짓 서류 제출, 휴·폐업, 사회적 물의 등
    - 사후관리
      -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연 2회 사후관리(고용률 등) 점검
- ※ 규정 제정에 따른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관리 지침」은 폐지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출소자 지원 정책 홍보】

- 영상매체를 통한 대국민 친화적 출소자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홍보 활성화 추진

※ '21년 12월 기준 구독자 423명('21.4월 158명 대비 267.7% 증가)

※ '21년 55개의 신규영상을 업로드(누적 140개), 구독자 265명 증가

- 출소자 채용에 따른 혜택 등이 수록된 기업체 전용 안내물을 제작·배포하여 출소자 고용 장려

※ 60,000부 제작, 기업체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홍보

## 【취업지원정책 확산을 통한 국민인식도 제고】

- 법무보호연감을 제작, 배포하고 공단 취업지원 사업의 현황, 필요성, 정책성과 등을 공유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발판 마련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에 350부 배포

## 【고용협력기업 발굴 촉진을 위한 적극행정 실시】

- 수행기관별 상·하반기 목표치 설정 및 실적 성과평가 반영을 위해 고용협력기업 운용 개선 방안 마련·시행
  - ※ 협력기업 발굴시 기관 성과평가, 성과급, 근무성적평가 등에 반영
- 법무보호위원 중 기업인대표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출소자 고용협력 기업 발굴 추진

## 【출소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개선】

- 출소자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산하 지부(소) 홍보 담당직원 지정 및 직원 대상 보도자료 공모전 실시
  - ※ 17개 공모작 중 수상작 4개 선정, 대상 수상작은 언론을 통해 홍보

### 【공모전 주요 결과】

구 분	주요 내용	언론 보도(대상)
대상	- 다 내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지요	
최우수상	- 출소자 지역사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단 기술교육원 확대	
우수상	- 지난 10년간 여성 범죄 꾸준히 증가... 해결책은...?	
우수상	- 똑똑! 취업의 문을 열어 재범을 방지하다.	

-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다방면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이 되도록 노력, 부정적 인식을 개선

### < 홍보 매체 다변화 현황 >

- (유튜브 구독자 확대) 158명 ⇨ 423명으로 증가
- (유튜브 게시 영상 증가) 85개 ⇨ 140개로 증가
- (간행물 제작·배부) 홍보용 브로슈어 4,000부
- (전광판 홍보)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에 공단 홍보 영상 송출
- (청년계층 홍보)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영상 제작 및 홍보로 기존 성인층 ⇨ 젊은 청년층으로 홍보 연령층 다변화

		
<p>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8. 1. ~ 9. 30.)</p>	<p>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유튜브 채널</p>	<p>출소자 고립되면 '될 대로 되라'식 재범... "지원은 사회안전비용" (한국일보, '21. 3.) 등</p>

○ 공단 소속 지부(소)의 홍보 업무 표준화 및 직업 역량 강화  
 위해 홍보 업무 편람 제작 및 배포

※ 홍보 업무 편람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주요언론사 상시대응 체계구축 및  
 일관성 있는 홍보 업무 추진

**【고용우수기업 우대제도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실시】**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우대조치 마련을 위해 국세청  
 업무협의 실시 등 적극 노력

※ '21. 5. 31. 고용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제도 협의를 위해 국세청 방문(최종의견:  
 거절, 취지는 공감하나 관련 법적근거 필요)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통한 영상홍보 활동 전개】**

○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개성을 살린 홍보 영상 제작 ⇨  
 대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홍보 추진

※ 격월 단위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학생 자원봉사자 현황 >**

- (호칭)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 (연혁) 2019년부터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정,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으로 개편,  
 '21년 12월 기준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총 1,160명 활동 중
- (활동분야) 홍보 분야 활동, 유튜브 영상 TF팀 발족,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출소자 지원정책 홍보를 위한 인터뷰 및 언론기고 실시】**

○ 범죄예방정책국장과의 언론기고 및 공단 이사장의 인터뷰,  
 언론기고를 통해 출소자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단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

##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

- 출소자 지원 정책 홍보 및 자원봉사자 역할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 자원봉사자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추진

### < 2021년 법무보호복지의날 행사 개요 >

- (목적) 법무보호복지사업에 헌신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주제) '당신 덕분에, 다시 한걸음!'
- (장소) 법무부 청사 7층 회의실
- 주요 내용
  - ※ 홍보영상 상영
  - ※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훈장 1·포장 1·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2) 및 법무보호사업 대국민 캠페인

## 【출소자 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 KT&G 재원 및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를 연계, 사회봉사 대상자(도배, 장판, 타일 등)와 함께 출소자 주거 및 자녀 공부방 개·보수 추진
  - ※ `2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자 10명 참여, 주택 75호 지원
  - ※ `20년부터 시행(`20년 62호 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6명 투입)
  - \*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

## 5. 취업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부가 연계서비스 강화

### 【안정적 취업활동을 위한 자립 지원】

항목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계획대비
생활지원	숙식제공	2,412	1,494	61.9%
	긴급지원	6,858	8,450	123.2%
	기타지원	15,915	19,610	123.2%
가족지원	주거지원	156	169	108.3%
	학업지원	1,585	2,287	144.3%
	가족희망	686	974	142.0%
	결혼지원	112	112	100.0%
상담지원	심리상담	12,653	13,815	109.2%
	사후관리	18,005	22,795	126.6%
	사회성향상	3,792	4,202	110.8%
	사전상담	32,493	29,446	90.6%
합 계		<b>94,667</b>	<b>103,354</b>	<b>112.7%</b>

- (숙식제공) 무의탁 출소자 등에게 숙소, 음식, 의복 등을 제공과 함께 생활지도, 취업알선 등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 ※ 숙식제공 실적 : ('20년) 1,634명 → ('21년 12월) 1,494명
  - ※ 연간 출소자 약 5만 8천명 중 연평균 2.9%가 자가 주택 또는 보호가족이 없어 숙식제공을 희망
- (긴급지원) 생계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 중에 심사를 거쳐 생계비 등을 지원
  - ※ 긴급지원 실적 : ('20년) 7,619건 → ('21년 12월) 8,450건
- (주거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임차 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여 가정회복 및 사회복귀 추진
  - ※ 주거지원 실적 : ('20년) 235건 → ('21년 12월) 169건
  - ※ '06.~'21. 12. 누적 2,534호 주택 지원, 수혜인원 3,472명
- (심리상담) 출소 후 겪게 되는 사회부적응, 대인관계 갈등이나 가족간의 갈등, 개인 심리적 문제(우울증, 대인기피증 등)를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전문 의료기관 상담 연계 및 의약품 지원 등)
  - ※ 전국 27개 기관에 임상심리사, 범죄심리사 등 상담전문가 27명 배치.운영
  - ※ 심리상담 실적 : ('20년) 12,669건 → ('21년 12월) 13,815건



## **【기초생계 지원을 위한 원호지원금 지급 확대】**

- 출소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일회성 지원에서 최대 4회로 지원금 지급 대폭 강화
  - ※ 1인 1회 10만원 ⇨ 1인 1회 10만원, 최대 4회
  - ※ 원호지원금 용도 : 생계비, 교통비, 주거비 등 기초생계비 활용

##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생활관 시설 개선】**

- 코로나-19 감염증 심화에 따른 숙식제공 대상자 감염병 확산 예방, 인권보호, 사생활 보장 등을 위하여 공단 생활관 개선 추진
  - ※ 1인 1실 생활관 개선으로 숙식제공 대상자 개인별 생활공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최소2.5평에서 최대 3.2평, TV, 에어컨, 냉장고, 침대, 수납장, 책상 등 비치)
  - ※ 자율형 생활관 운영을 통해 인권경영 체제 도입('18. 8. 국가인권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매뉴얼 실행 권고)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취업지원사업 수혜인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
  - 연간 출소인원이 약 5만 8천명 가량이나 '21년 사업계획인원은 7,000명인 11.7%에 불과, 보다 많은 출소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양적 확대 필요
    - 기획재정부에 확대 필요성 설명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혜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 국고보조금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출소자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 향상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확대 지속 추진
      - ※ 사업계획 인원 7,000명('21년)에서 '24년까지 1만명(42.9%↑)까지 확대
- 재범억제 효과성 분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조회 근거 마련
  - 현행 재범사실에 대한 조회 권한 부재로 보건복지부 행복e음 전산 연계를 통해 수신된 참여자의 '교정기관 입소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범을 파악 중
  -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법률 근거 마련으로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재범률 산출로 내실있는 법무보호사업 추진 기대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출소자의 근속유지 향상을 위하여 '20년 공단 전산시스템 자체 심사분석 결과 통계를 활용, 취업근속기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출소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갱생보호서비스 이용자 수 및 취업자일자리 품질수준 등 제시된 현 성과지표는 정책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보통	■ 교정·보호관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자 협의회 운영을 통해 대상자 연계 방안 협력 추진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5.5%	■ 법무보호서비스 이용 건수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취업 성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거지원사업 우선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반 제공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고용대책위원회 실무추진단 부단장 회의 등 현장의견 15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23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으로 출발국 탑승 전 K-ETA 신청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감염병 보유, 법 위반자 등 고위험군 외국인 탑승객을 미리 차단하여 안전한 국경관리를 실현하고,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정보축적을 통해 빅데이터 구축
-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탑승자 사전 확인 등으로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여 방역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면서도, EU 28개 국가 및 싱가포르에 대한 무사증입국 재개를 통해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선별적 국경방역 실현
- 전자여행허가제(K-ETA)·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 등 시스템을 기반한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인 국경관리 기반 마련
- 자동출입국심사대 확충, 온라인상륙허가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출입국서비스 확대

## □ 주요실적

-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사전 정보를 분석하여 탑승 전 여행을 허가 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 운영 및 외국인선원 온라인 상륙허가 시범 시행 등 시스템을 통한 국경관리 실현
-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자동출도 검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심사 방식 도입
- 민간에서 운영하던 입국불허 외국인의 송환대기 장소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출국대기실 관리의 효율화 및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 가능

## □ 주요성과

-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감염병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필수 인적교류 보장을 위해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21. 9. 1. EU 28개 국가에 대한 무사증 입국 재개

###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재개

#### □ 대상국가 : 28개국(EU 24개국 + 쉥겐협약국 4개국)

- (EU 24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셥겐협약국 4개국)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 시행일 : '21. 9. 1.(수), 0시(한국시간 기준)

- 고위험군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승객을 위험도에 따라 사전에 분류하여 맞춤형 입국심사 제공
  -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사전 정보 수집 및 분석과정을 통해 테러 등 위험 외국인 및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을 현지에서 차단
  -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신고서 작성을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심사 지원
  - 중요 외국 기업인 등이 비자 발급 대신 K-ETA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
- 종전에 민간이 운영하던 입국불허외국인이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2. 8. 18. 시행 예정
  - 법 개정을 통해 출국대기실 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식사제공·생활 관리 등을 권한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운영으로 그간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 해소 예상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상륙허가서 신청절차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하여 항만분야에 비대면 심사 도입 및 민원편의 제공
  - 항만 초소 근무자가 여권 스캔 및 안면 정보 취득하여 상륙허가서 소지자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타인 여권·상륙허가서 소지나 신원불일치자 등 상륙 통제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간 교류가 제한되고,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이 제한되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추후 국가 간 교류 활성화 시 비대면 심사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증설·교체 실시

구분	합계	인천항	김해항	김포항	제주항	청주항	대구항	인천항	부산항	양양항	무안항	평택항	군산항
'20	202	148	15	6	4	4	4	7	5	3	3	3	0
'21	238	159 (+11)	21 (+6)	8 (+2)	8 (+4)	4	8 (+4)	9 (+2)	5	3	4 (+1)	5 (+2)	4 (+4)

- 국내에서도 테러연계활동 혐의 외국인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테러 관련 형사범에 대한 별도 입국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범법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기준을 강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출입국자 수가 회복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입국 외국인에 대한 선제적·선별적 심사 등 스마트한 출입국심사 기법 필요성 증대
  -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감염병, 범죄전력 등 국익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행정 서비스 제공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범 시행 전,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 관련 사항 안내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한 항공사 운영위원회(AOC) 및 항공사 관계자 간담회 실시('21. 2.)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국민의 국경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출입국심사 제도 개선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국제행사 참가자 입국 시 출입국편의 제공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과제의 성과지표인 '출입국심사 고객 만족도', '제도개선 실적'은 정책 내용을 대표하고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무착륙 관광비행'에 대한 적극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시행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4.6%	■ 출입국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점수)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으로 사전 검증 없이 도착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증가, 정밀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시스템을 통한 국경관리 확보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불개항장(마리나항) 보안강화 관련 회의 등 현장의견 6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0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어촌 및 산업현장에 외국인력을 지원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신청센터 확대 등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비자·체류정책을 추진
- 체류외국인 지역사회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온라인 민원처리 업무 확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품질 체류민원 환경 조성
- 자국 정세불안으로 귀국이 어려운 미얀마인,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허가 조치 시행 및 학령기 재외동포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등 포용적 체류정책 추진

## □ 주요실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촌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지원 방안 마련**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근로사업 제도 도입('21.1) 및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여 농어촌에 인력 공급 지원('21.4.)
  - '21.4.13. ~ 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1년 일괄 연장 조치('21.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으로 재입국 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21.6.)
  - 수산업계 어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증발급이 제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방역강화국가)의 외국인선원(E-10) 사증발급 허용('21. 10.)

- 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신청센터 확대 및 비자제도 개선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비자신청 수요 급증에 따른 비자업무 적체를 방지하고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랑스(파리) 비자신청센터 개소('21.3.), 중국(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추가 지정('21.6.) 및 유럽지역(독일, 프랑스, 영국) 비자신청센터 점검('21. 11.)
  -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시행에 따라 양국을 여행하는 거주자(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격리 부담 없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사증발급안 마련('21.11.)
  
- 미래를 준비하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
  -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국내에서만 재외동포(F-4-27) 자격을 부여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재외공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21.4.)
  - 초·중·고교 학령기 재외동포의 인권보호 및 공교육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재외동포의 사회통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재학여부 신고 지시 및 고시 개정('21.7.)
  - 동포의 미성년자녀가 국내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여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포용하는 정책 추진('21.8.)
  - 코로나19 이후 아포스티유 인증기관의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서류 유효기간이 도과하는 등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을 3개월→6개월로 연장('21.9.)
  
- 코로나19 확산 및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확대
  - 비대면 민원처리 확대를 위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 및 대행업무 처리 지침' 제정('21.1.)
  - 불필요한 방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관리업체의 선원취업재입국허가 등 온라인 대상 민원 확대 및 시스템 구축('21. 3.)
  - 민원실 혼잡 완화를 위한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15개 기관→전국 34개 기관, '21. 4.)



- 합법 등록외국인(약 9만 명)에 대한 '일괄 직권연장'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 이동 최소화 유도('21. 7.)
-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전자민원 업무 확대('21. 10.)

○ 포용적 체류정책 추진

- 자국 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체류허가 조치 시행('21. 3., '21. 8.)

□ 주요성과

○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 및 농어촌에 인력 공급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 「외국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여 산업현장 및 농어촌에 외국인력 지원(약 6만 명)
-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신규 도입이 어려운 상황 속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9월말 기준 총 1,612명(국내 체류 외국인 1,104명, 신규 도입 508명)의 계절근로자를 농어촌에 지원

○ 비대면 민원업무 처리 확대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고품질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

- 전국 34개 출입국기관에서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4.1.)으로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하여 집단감염 예방 및 민원인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21.4.~10. 방문예약제 이용자 462,173명)

※ 2021년 하반기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 불필요한 방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국허가 등 온라인 대상 업무의 확대 및 시스템 구축

구 분	2019년 (1~9월)	2020년 (1~9월)	2021년 (1~9월)
전자민원 처리건수	358,714	422,562 (▲ 17.8%)	523,322 (▲ 23.8%)

- 합법 등록외국인에 대한 일괄 직권연장('21.7., 약 9만 명)으로 지역 사회 이동 최소화

-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비자발급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및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 프랑스(파리) 비자신청센터 개소, 중국(광저우·칭다오) 지역 비자신청센터 추가 선정 및 유럽지역(독일, 프랑스, 영국) 운영 점검 실시
- 세금 체납 등 공적의무 불이행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로 세수 증대 및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
  - '21.9월까지 세금(국세·지방세·관세) 체납액 약 2,945억 원 및 건강보험 체납액 약 585억 원 징수 효과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단기간의 인력이 필요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세 농가를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파견하는 ‘파견근로사업’ 제도를 시범도입하여 성과분석 후 다음 연도에 정식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신규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실제 거의 운영 되지 못하여 영향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다음 연도에 추진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행정사 등 이해관계가 4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프로그램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20. 12.)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하여 유학생, 투자자, 전문인력 등에게 더 나은 정주환경을 제공,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여 관광 산업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개선 실적, 이용자 만족도는 정책의 내용을 대표하고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보통	■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인력 도입의 어려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는 ‘한시적 계절 근로 허가 제도’ 시행을 위한 허용 대상자 및 참여혜택 등 협의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2%	■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노력(건)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예약제를 전면 실시하여 비예약자의 방문을 억제하고, 민원인 방문을 분산하여 민원인의 집단감염 방지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계절근로 현장 간담회 등 현장의견 8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6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및 위드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정보연계 및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안보·국민 안전 차원의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함.
- 국내외 감염병 및 테러 환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단기 체류외국인숙박신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각종 정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에 기여함

## □ 주요실적

## &lt;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gt;

- 자가격리 대상 해외입국 외국인 중 상당수가 자가격리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숙박시설(짬짬방, 화장실 공용 게스트하우스)을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전국의 자가격리부적합 주소지 정보 취합 및 DB 구축을 통해 출입국심사에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공유

※ 2021년 법무부 혁신·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장려 사례로 선정

##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 <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유출방지 교육 >

-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유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및 증명발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코로나19에 따라 집합교육을 지양, 영상회의를 통한 교육 실시
- \* 2021. 6. 18(금)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 개인정보교육 실시

## □ 주요성과

###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정보연계>

-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일 전일 기준 외국인 출국자 명단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유함으로써 출국외국인의 휴대폰 즉시 정지 등 차단 조치 시행 (2021. 4. 1.부터 시행)

※ 2021년 법무부 국민생활밀접 우수사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확대 등 개선 필요
  - 출입국자 및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민 관련 통계와 이에 근거한 정책수립·평가는 매우 부족한 현실임
  - 이민정책은 경제·사회·복지·문화 등 사회 다방면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기 위한 통계품질 제고 및 확대 등 개선 필요
- 조치계획
  - '이민행정통계 발전방향'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시행 중으로 '21. 12월 경 연구용역 결과 도출 예정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국적, 난민, 조사 등 매월 약 90여 개의 항목을 국가승인통계 통계월보(매월 20일 전후로 연 12회 발간) 및 통계연보(매년 7월경 발간)를 작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우범자 입국 차단을 통한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 확보와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한 이민행정 업무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함. 이민행정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보완 및 개선실적’ 지표와 이민행정 정보를 유관기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실적’ 지표로 구성된 현 지표는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법무부 간 외국인 출국정보 연계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매일 제공으로 개선하여 출국자 휴대전화 즉시 차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7.6%	■ 시스템 보완 및 개선실적(건)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강제퇴거자 등 출국외국인의 휴대폰이 대포폰 등으로 이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담당 부처 간 정보공유 강화 시행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거주불명 등록외국인 업무처리 절차 의견조회 등 현장의견 6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미흡	■ 유튜브 게시, 리플릿 배포 등 홍보 실적 4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에게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사회통합교육 비대면 운영 등을 통해 이민자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행사(세계인의 날)와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 분야와 협업\* 등 추진
- \*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적십자사, 바그람프렌즈 등) 협업

## □ 주요실적

- 사회통합프로그램·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화상교육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유학생 화상교육 운영
- 공직사회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인사처,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플랫폼에 강의 개설·운영
-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민간과 협업하여 초기 사회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

## □ 주요성과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참여자 수가 전년 대비 37.7% 증가, 55,234명 참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이해 강의 영상콘텐츠를 53개 차시로 새로이 제작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 및 참여자의 자기 학습 기반 마련
-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업하여 3개 추가 외국어 자막 제공
- 아프간 내전 등 사태로 긴급히 입국한 특별기여자들에 대해 관계부처·민간과 협업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사회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발표

-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세계인의 날’ 기념식(5.20.) 개최,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상호문화이해 교육에 '21년도 6,831명 수강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업무 정상화
  - 교육 참여를 위한 사전평가와 영주·귀화 적격 수준 종합평가 등이 대면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가방식 다변화의 필요성이 있음(예; 컴퓨터기반평가)
-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대상 확대
  - 농번기 등 수요에 따라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무단이탈 방지 등을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대상에 계절근로자 추가 검토 필요
  - ※ 농어촌 고용주의 부담이 없도록 업무 투입 전 계절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3시간 분량의 조기적응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내·외국인 인구전망'(통계청),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법무부), '외국인주민 현황'(행안부) 등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배경 인구 등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대상 현황(통계) 및 '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실적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장기체류 재한외국인에게 사회통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입국 초기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경제·사회적 자립심을 제고하며, 국민과의 갈등을 예방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실적'으로 구성된 현 성과지표는 단순 산출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보통	■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외에도, 공교육 진입 및 정서지원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미디어 교육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원활한 정착·자립에 기여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7%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신설(F-2)을 통해 포용적 외국인정책으로서 우리부 성과를 대외에 알리고, 동 정책을 통해 9명의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법무부-다도협 외국인정책협의회 등 현장의견 6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4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에게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 인구정책 보완,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국가기간정책,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사회적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통합정책 등 신(新)외국인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

## □ 주요실적

-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이민정책 국가계획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21. 3월)
  -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 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과제를 추진
    - ※ 제조업·농축산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체류 외국인력 활용 확대,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 취업비자 확대 등
-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개최('21. 11월)
  -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의 이민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 등 청취
    - ※ 우수인재 유치, 농어촌 인력 확충 등 국익에 부합하고 민생에 힘이되는 맞춤형 이민정책 추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 표방 등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21. 12월), 변화에 안정적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 법령 정비(연중)

## □ 주요성과

-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동반자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총리주재 목요대화 개최('21. 3월)
  -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외국인·이민정책을 구현해나가는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구축
-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 '인구정책TF' 외국인 정책반의 주무부처로 참여('21. 2월 ~ 7월)
  - '인구감소시대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가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발표('21. 7월)
- 미래 외국인정책 준비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완료('21. 12월)
  - 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만료에 따른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②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외국인 정책의 방향, 외국인(이민)수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외국인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③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 사회보장 기준 연구」: 외국인 유형(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서비스 적용범위 해외 사례 연구 및 체류자격별 수급자 지원기준 마련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 법령 정비(연중)
  - △ 출국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 범칙금 신용 카드 납부, △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 대한민국 특별기여자에 대한 체류자격 세부항목 추가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향후 추진계획 등 마련시 모든 준비 여건을 갖추고도 단순 일정 지연으로 미달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결재 등으로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경우를 시행시기로 계획하는 등 계획 수립 및 추진 일정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방안, 외국인의 유입 및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미국 이민정책 조사 등 해외 동향 자료 수집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 등 외국인정책 활용 방안 검토('21. 1.)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 영주, 국적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한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민자 유입이 국민의 일자리, 사회 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선순환적 이민환경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성과'은 정책 내용의 연관성은 있으나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추후 정책성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미흡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필요인력 보충, 우수 외국인재 적극 유치, 특성별 비자 신설 등)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2.6%	■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건)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미흡	■ 저출산·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등의 대안으로 외국인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외국인정책반으로 참여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 간담회 등 현장의견 3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6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제도 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관리과제 추진을 위해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일정을 체계적으로 이행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 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국적증서수여식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적증서수여식을 기획하여 개최함
- 또한, 여러 차례의 온·오프 방식의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적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힘쓰는 등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대처함
-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적취득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국적증서수여식을 실시하고 국적 업무의 전자민원 창구 운영방안을 마련함
- 「귀화 면접심사 제도 연구 및 심사 문항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 시대에 적합한 기본소양 심사 요건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국민의 해외출생자녀에 대한 국적부여 제도 연구」 연구용역을 실시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적합한 해외출생 자녀의 국적부여제도 모델을 연구함
- 8·15 광복절 주간(8.9.~8.15.)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을 발굴하여 지방사무소와 연계한 릴레이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독립유공자 후손 알리기 홍보 실시
-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과 귀화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 우수인재·지자체 연계형 국적증서수여식 등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 주요실적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21. 5.)
- 200번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국적증서수여식 개최('21. 4.), 법무부-시흥시 지자체 연계형 국적증서수여식 개최('21. 5.),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개최('21. 8.)
- 국적 업무의 전자민원 창구 운영방안 마련('21. 6.)
- 「국민의 해외출생자녀에 대한 국적부여 제도 연구」 연구용역 실시('21. 10.), 「귀화 면접심사 제도 연구 및 심사문항 개발」 연구용역 실시('21. 12.)
-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설명회 개최('21. 3.),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 개최('21. 10.)
- 국적심의위원회 개최('21. 3./'21. 6./'21. 9./'21. 12.)

## □ 주요성과

- 다양한 방식의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200번째 우수인재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기위하여 국적증서수여식 개최('21. 4.) 함으로써 귀화자의 인식개선에 기여
  -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시흥시와 공동으로 최초 개최('21. 5.)함으로써 귀화자가 외국인에서 국민으로, 국민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
  - 8·15 광복절 주간(8.9.~8.15.)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을 발굴하여 지방사무소와 연계한 릴레이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21. 8.)
- 국적법 개정 및 국적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 및 반영 노력
  - 국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유튜브를 통한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21. 5.),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21. 6.), 반대단체 면담 2회('21. 6., '21. 8.) 및 언론

브리핑('21. 5.)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함

- 「귀화 면접심사 제도 연구 및 심사 문항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 시대에 적합한 기본소양 심사 요건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국민의 해외출생자녀에 대한 국적부여 제도 연구」 연구용역을 실시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적합한 해외출생자녀의 국적부여제도 모델을 연구함
-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설명회를 2회 개최('21. 3. , '21. 10.)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할린동포 연합회와도 간담회를 통해 사할린 국적판정 절차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함('21. 6.)

#### ○ 국적업무 제도 개선

- 거동불편자 등의 편의제공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국적신청 시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하이코리아를 위한 온라인 귀화신청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21. 1.)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심사 적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별 귀화 면접심사 운영 방안을 개선('21. 1.)하고 방문예약 관련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개선('21. 3.)하는 등 다양한 국적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재외공관 방문 등을 통한 해외 사례 연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차후 재외공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온·오프 방식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사례 수집을 해나갈 예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사할린동포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적판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외교부·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의를 진행('21. 3.)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국적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국민 확보·우수 인재 유치 등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귀화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부적응 문제 해소와 국민과의 조화로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 성과지표는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자 수,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 홍보 실적 등 단순 지표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 정체성 함양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우수	■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시흥시와 공동으로 최초 개최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2.6%	■ 국민 정체성 함양 실적(점수)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200번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국적증서수여식('21. 4.), 법무부-시흥시 지자체 연계형 국적증서수여식('21. 5.),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21. 8.) 개최를 통하여 귀화자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사할린연합회 관계자 면담 등 현장의견 6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1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에게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난민법 개정 추진) 난민제도 남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 (심사전문성 강화) 난민전담공무원 교육·평가 및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을 통해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강화
- (처우 개선 등) 난민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사회적응 지원 교육 지속 추진,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등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분담 및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 주요실적

- 「난민법」 개정 추진
  -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시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검토·분석(‘21. 2. ~ 4.),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추진(‘21. 4. ~ 6.)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내용의 수정안 마련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1. 7.) 및 「난민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21. 7. ~ 11.) 등의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난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21. 12.)
    - \* 난민심사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도입, 임의적인 해외출국자에 대한 난민신청의 철회 간주 등 규제신설 조문 2건 원안 의결
-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문통역인 역량 강화
  - 난민심사관 및 난민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난민법」·난민편람, 국제협약 이론 강의 및 면접 기법, 국가정황의 이해 등 수준별·주제별 교육 실시(연 7회) 및 난민법·제도, 심사 관련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연중)

- 난민전담공무원 특정직위 평가 기준 강화 등 「난민전담공무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21. 6.),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21. 11.) 및 '난민전담공무원 전문성 향상방안' 정책연구용역 실시('21. 6. ~ 11.)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도모
-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평가 체계로 이루어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추진('21. 5. ~ 11.) 및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평가 4회 실시('21. 5., '21. 8., '21. 11., '21. 12.) 등 난민통역인 체계적 관리

\* 난민통역 기법, 통역기술 등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 과정 포함

#### ○ 난민제도 개선 모색

- 시민사회단체·난민업무 담당자 등 내외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추진 ('21. 4. ~ 6.) 및 '난민 체류정책 해외사례 등 연구' 정책연구용역 실시 ('21. 6. ~ 11.) 등을 통한 난민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 모색

#### ○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 및 정착 지원

-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아프간인 입국 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아프간 특별기여자 6주 초기 정착 지원 계획 수립 및 임시생활시설 소재 지역 주민간담회 참석, 2차 임시생활 시설 이전 추진('21. 10.)

### □ 주요성과

- 지역·언어전문가 활용, 심사절차 개선, 난민전담공무원 및 난민전문 통역인 대상 교육 실시,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효율적 난민심사 기반 구축을 통한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 일반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 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난민제도 남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18년 제주 예멘인 대규모 난민신청 사례, 다년간의 재정착난민 수용 등의 경험을 토대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 및 정착을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난민 등의 정착 지원 방식 다변화 등 노하우 축적
- 난민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5. 12.), IGC·ATCR 등 국제회의(4. 28., 5. 10., 6. 11., 6. 23., 10. 28., 12. 15.)에 참여함으로써 난민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난민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 노력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인정심사 절차 수립과 개선에 집중되어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이후의 국내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 수립 보완 필요
- (보완) 난민인정자 등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상담 및 취업지원 등 처우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20년 난민신청 관련 국적·유형별 증감 추이 등 통계자료 작성·활용하여 국내 난민신청 현황을 분석하고, 차년도 심사관 교육 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효율적인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보호 체제마련 및 난민제도 악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선진 심사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현 성과지표는 난민심사관 교육, 관련 법령 개정 등 과정지표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 난민제도 운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세 악화에 따라 과거 우리 정부에 협조했던 아프간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용 결정 이후, 입국·임시생활·정착 단계 등 범부처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립·정착 지원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5.1%	■ 난민 심사 역량 강화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미흡	■ 「난민법」 개정을 통해 난민제도 남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난민제도 보완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난민법 개정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등 현장의견 5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7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 훈령) 개정 등을 통해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보충 자료 제출권 보장 등 특별행정심판기능을 강화하여 선진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이의신청 심의 공정성 강화) UNHCR 등 민간 난민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입증서류 진위여부 및 국가정황 확인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인류학 및 국제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 자문 의뢰 등을 통해 심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난민조사관 등 역량 강화) 국가정황정보 조사팀 구성 및 운영, 주제별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및 국가정황보고서 발간, 난민조사관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난민위원 연수과정 운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난민위원회 개최) 난민위원회 7회 개최, 대면 및 서면 분과위원회 45회 개최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이의신청 심의 실적 23% 증가 및 평균 심의 소요기간 1개월 단축
- 진정한 난민에게 신속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난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난민 보호의 국제적 책무 이행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분담 및 우리나라 국제 신인도 제고

## □ 주요실적

-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난민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민간 난민전문가 및 행안부·외교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21. 1. ~ '21. 4.)
  -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21. 3.)
  - 난민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부내심사 및 법제처 심사 의뢰 요청 ('21. 5. ~ '21. 6.)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21. 7.)
-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21. 7.)
- 국가정황정보 조사팀 구성 및 운영
  -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5명) 채용 계획('21. 4.)
  - 국가정황정보 조사팀 운영 관련 UNHCR 간담회 개최('21. 6.)
  -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채용 공고 및 면접 실시('21. 4. ~ '21. 7.)
  - 신규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교육('21. 7.)
  - 국가정황정보 조사팀 운영 계획('21. 7.)
  - 아프가니스탄 국가보고서 발간('21. 8.)
  - 국가정황정보 조사의뢰·회신제도 시행('21. 11.)
-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 난민위원회 7회 개최('21년 1월, 3월, 4월, 6월, 7월, 10월, 12월)
  - '21. 2. ~ 12. 4개 분과\*에서 총 45회 분과위원회 개최
    - \* 1분과(아시아,11회) 2분과(중동,11회) 3분과(아프리카,12회) 4분과(중앙아시아, 11회)
- 난민지위심사안내서-성소수자편 발간
  - 난민지위 심사 안내서 발간팀 구성('21. 1.)
  - 성소수자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번역 작업('21. 2.)
  - 유엔난민기구,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난민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21. 2.)
  - 난민조사관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21. 3.)
  - 성소수자 관련 민간 전문가에게 안내서 내용 감수 확인('21. 3.)
  - 난민지위심사 안내서-성소수자편 발간 및 배포('21. 5.)
- 난민지위심사안내서-가족결합편 발간
  - 난민지위 심사 안내서 발간팀 구성('21. 3.)
  -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번역 작업('21. 5.)

- 난민조사관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21. 6.)
- 1차 난민심사 기관 초청 워크숍 개최('21. 6.)
- 민간 난민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21. 7.)
- 민간 전문가에게 안내서 내용 감수 확인('21. 7.)
- 난민지위심사 안내서-가족결합편 발간 및 배포('21. 9.)

○ 이집트 난민 판례 분석집 발간

- 판례 분석 발간팀 구성('21. 6.)
- 1차 난민심사 기관 소송 실무자 자문회의('21. 6.)
- UNHCR 등으로부터 회신받은 해외 판례 자료 번역 및 사료 수집 ('21 .6. ~'21. 11.)
- 난민 및 법학 전문가 자문 의뢰('21. 11.)
- 난민 판례 분석집 발간('21. 11.)

□ 주요성과

○ 주제별 난민지위 심사 안내서 발간, 판례 분석 세미나 및 난민 조사관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특히 난민 이의신청 신속처리 방안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이의신청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난민 이의신청 심의 실적률 제고

- '21. 12월말 기준 이의신청 4,998건을 심사하여 전년 대비 3,792건 대비 이의신청 조사 실적 32% 증가
- '21. 10월말 기준 이의신청 심의 평균 소요기간은 9.7개월로 전년 10.7개월 대비 이의신청 심의 평균 소요기간 1개월 단축

○ 민간 난민전문가 초청 워크숍, 인류학 및 국제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 자문 의뢰 등을 통해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21. 12월말 기준 이의신청 심의 결과 난민인정 24명, 인도적체류 허가 17명 결정, 특히 난민인정은 전년 동기 6명 대비 400% 증가

- 국가정황정보 조사팀 구성 및 국가정황보고서 발간
  - 지역학, 국제정치학 등 관련 학문 분야를 전공(학사 이상)하고, 영어 등 원어민 수준의 어학 능력을 보유한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국가정황정보 조사팀 운영
  - 난민신청 다발 국가, 난민 보호율 상위 국가, 최근 정세 변화가 있는 국가에 대한 정황보고서 발간 및 주간·월간 「난민 동향」 13건 배포 등을 통해 난민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주제별 난민 지위 심사 안내서 발간
  - 사례가 다양하고 심사가 어려운 '특정집단' 사유 및 5대 박해 사유 외 사례를 선정하여 국내·외 난민 판례, 해외 난민 심사 기준 등 다양한 자료 수집·분석
  - 유엔난민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 1차 난민심사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된 난민 지위 심사 안내서 2권(성소수자, 가족결합) 발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난민 이의신청 절차 신설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통지 절차를 이의신청인이 정보통신망(온라인)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포스트코로나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 '21. 7. 「난민법 시행령」 개정
- 이의신청서 서식 개정('22. 1. 1. 시행 예정)
  - 이의신청인의 의견 진술 및 입증자료 제출 희망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서 기재 항목을 보완(1장 → '개정' 11장)
  - 추가 입증자료 제출 희망자 등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적극 부여하여 특별행정심판 기능 강화
    - ※ '21. 7.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등의 안내를 위한 '이의신청인 안내서' 발간 등을 통해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 특이 난민 이의신청 신속 처리 방안 마련
  - 긴급한 보호(난민 인정 등)가 필요한 이의신청인 및 국익위해자 등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난민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호 등 제공
    - ※ '21. 2.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 훈령)」 개정

- 이의신청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이의신청 접수 단계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신청인, 중대 범위반자 등 신속 심의 필요 대상자\*를 분류하여 접수 순서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내 관련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3회 이상 신청인, 보호 중 또는 보호 일시해제자 등

- 난민위원 및 난민조사관 연수과정 운영 근거 마련
  - 난민위원 및 난민조사관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 연수 과정(6시간) 운영 근거 마련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 ※ '21. 3.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 훈령)」 개정

- UNHCR 한국대표부 및 난민인권네트워크 등과 난민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난민 이의신청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협업 체계 구축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난민심사의 정확성) 복잡·다변화 추세인 난민신청자 출신국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난민심사 담당자가 국가정황 조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심사 소요기간 장기화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에 대한 신속한 심사에 한계
- (난민심사의 공정성) 난민의 열악한 지위로 증거자료 수집·제출에 한계가 있고, 국가정황정보 조사시 난민심사기관에만 유리하고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조사 및 활용한다는 공정성 논란 지속
- (보완사항) 1차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소송과 관련한 국가정황을 독립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별도 운영하고, 학계·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및 대내외 공유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20. 2. 25.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 전담 부서인 '난민심의과'가 법무부 내 신설되어 통계현황(난민신청 처리·심사대기·심사결과 등) 및 사례조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규정 및 심의 안건 직권상정 등)를 실시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통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현 성과지표는 난민위원회 개최, 민간 전문가 자문의뢰, 직원 교육 등 등 과정지표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운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민신청자의 출신국 또는 상주국의 인권, 안보 상황 및 법체계, 주요 사건 등 최신 정보를 UNHCR 한국대표부에 의뢰하여 회신받는 등 국가정황정보 공유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	■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점수)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난민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 긴급한 보호(난민 인정 등)가 필요한 난민을 신속 보호함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난민전문가 상호소통 워크숍 등 현장의견 7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1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국제교류의 증대로 민·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민·상사 관련 국제 통일규범 성안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법제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진 법제를 도입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 사업을 통해 우리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법률과 제도를 여러 나라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 해외 진출시 제도적 난관과 법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데 기여

## □ 주요실적

-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해사기구(IMO) 등 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국제 민·상사규범 성안에 기여
- 국제적으로 성안된 규범 및 선진 제도를 국내 도입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해사기구(IMO) 등 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국제 민상사규범 성안에 기여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및 각국 중앙당국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21년 기준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지원 신청 누계 60건 이상)
- 법률시장 개방 대응 관련 활동
  - 외국법자문사 8명 자격승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1건
- 제7기 O.K. 아카데미를 온라인 강의로 운영하여 청년법조인들에게 국제법무교육을 제공(수강생 36명)
- FTA 등 통상협상에 참여(5건)하여 법률자문 제공

####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 캄보디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21. 1.)
- 동남아 개도국 조정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21. 1. ~ 3.)
- ASEAN 개도국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도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21. 10. ~ 12.)
- UNCITRAL 및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제10회 ADR 컨퍼런스」 및 「UNCITRAL ADR 스페셜 세션」 개최('21. 11. 2 ~ 5.)
-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RCAP)와 공동으로 동남아 조정법제 개선 세미나 개최('21. 12.)
- 개도국 법제 정비 연구 결과 자료집 발간('21. 12.)

#### □ 주요성과

-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과정에 정부대표로 참여하여 우리 법률제도와 국제규범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진 법제를 수용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 법률서비스 분야 통상 협상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청년법조인의 해외법무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법률과 제도를 여러 나라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시 제도적 난관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
  - 국제기구(UNCITRAL 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제정비 사업 수행
  - 단순한 모델 텍스트 및 개선 방안 제시에서 더 나아가 역량 강화 지원 및 실무 경험 전달 등을 통해 해당 규범의 실질적인 적용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과정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결과물을 토대로 국내법규 제·개정 작업에 참가하여 의견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 결과 도출 위해 적극 노력 필요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사업의 경우 코로나 등 팬데믹에 대응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일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바, 초청·방문과 비교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추가 모색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설명회 등 일정 수립,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관계기관 예비회의 통해 ODA사업 조정절차 및 방향을 설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 동 과제의 목표는 국제거래 관련 법률지원 및 국제협력강화, 법률시장 개방 대비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임. 법령 제·개정건수, 법조인 해외진출 지원건수 등으로 구성된 현 성과지표는 정책 내용을 대표하고 있으나 향후 과제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UNCITRAL 등과의 협업으로 세계 각국 공무원, 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제행사를 개최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5.9%	■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점수) 등 3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선진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헤이그아동말취협약 관련 아동반환청구의 이행 문제 논의 등 현장의견 3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8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한법제 및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법제 연구를 심화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남북가족특례법,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 등 남북관계 발전 단계별 주요 법적 쟁점 연구 심화
  - 통일법제 전문 계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 등재학술지 추진, 선정
  -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추가 개설·운영,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정규 과정 운영
  -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사가 한국일보 1면, 8면(전면)에 보도되는 등 대국민 홍보 추진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남북관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검토 및 지원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및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을 통해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제공
  - 전국 2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34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경제적 곤란, 질병, 법률문제 등으로 복합적 위기를 겪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1:1 맞춤형 ‘지원변호인’ 제도 정식 도입 및 확대 시행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수시 방문하여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실시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전화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

## □ 주요실적

### ○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분단국의 재산관리 사례와 쟁점」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통일 전 동·서독 상속관계 규율 사례, 북한주민 재산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 이산가족 상속재산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발제·토론('21. 9.)

###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연구 소위원회',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연구 소위원회', '통일법무 자문 연구 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 구성, 총 14회 회의 진행('21. 4. ~ 11.)

### ○ 지원변호인 제도 출범 등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 2명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무료 온라인·전화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21. 1. ~ 11., 상시)
- 총 27명의 지원대상자를 지원변호인과 매칭하고('21. 9. ~ 11.),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전국 23개 하나센터에 총 37명의 변호사로 확대 시행 중 (11월 기준)

###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실시

- 서기관, 사무관 등(변호사)이 하나원에 방문하여 '민사관계의 기본 유형과 조심해야 하는 범죄유형, 자주 묻는 법률문제' 교육 및 법률상담 실시('21. 3. ~ 10. 총 5회, 45명 이수)

###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등 연구자료 발간

-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등 연구논문 3편을 게재한 통권 제45호(봄호) 발간('21. 2.)
-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등 연구논문 4편을 게재한 통권 제46호(여름호) 발간('21. 5.)
-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하천부분을 중심으로-' 등 연구논문 5편을 게재한 통권 제47호(가을호) 발간('21. 8.)
-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등 연구논문 5편을  
게재한 통권 제48호(겨울호) 발간('21. 11.)

-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21. 8.)

## □ 주요성과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미국 조지 워싱턴대 법무부 장관 특강, 법무부 장관과 맨스필드재단 대표의 통일 대담, 법무부 장관과 코리아 소사이어티 대표 및 관계자들 간의 대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색하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법제 연구·추진에 대한 미국 조야 등의 국제적 관심을 환기
- 남북가족특례법, 북한 형사소송법, 통일법무 자문 연구 등 남북관계 발전 단계별 주요 법적 쟁점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과 법제통합을 위한 토대 마련
-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정규과정 운영을 통해 변호사 및 예비 법률가들의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지식을 함양
- 「분단국의 재산관리 사례와 쟁점」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통일 전 동·서독 상속관계 규율 사례와 북한주민 재산관리 실효성 확보 및 이산가족 상속재산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한 법제 연구 심화
- 위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관심을 표명하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내·외신 기자가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화된 기사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가족특례법의 제정 취지, 북한주민의 상속권 인정을 위한 절차, 대규모 금융재산 관리 등을 위한 법무부의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추진 내용 등이 지면 전체를 할애하여 상세히 소개된 기획기사가 보도되는 등 북한주민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무부의 노력과 역할을 홍보하고, 관련 정책 인지도를 제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1:1 지원변호인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의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성과지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실적' 측정산식(방법) 중 하나인 '소모임 개최 점수' 관련 실적 전무
  - 코로나19 지속 상황으로 인해 대면·집합이 곤란한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한 결과이나, 향후 성과관리 목표설정 시 고려할 반성적 요소로서 추후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측정방법을 고려·발굴할 계획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20. 12.)를 실시하여 향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의 목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대안 연구 및 법제 준비를 통해 남북 협력관계의 안정적 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생활 밀착형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및 북한법령 연구, 통일 대비 법적쟁점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과지표는 대표성이 있으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보통	■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변호인' 제도 정식 도입 및 확대 시행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실적(점수) 등 4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연구 및 법제의 준비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준비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설문조사 등 현장의견 수렴 5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4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현행 법률의 입법적 공백·미비점을 개선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형사사법체제를 구축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

## □ 주요실적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0.20.)·시행('21.1.21.)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0.20.)·시행('21.1.2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4.20.)·시행('21.10.2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1.7.6.)·시행('21.10.21.)
  -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21.9.24.)·시행('21.10.21.) 등
-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진형 형사사법제도 도입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디오 등 증거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논의 지원 및 공포·시행('21.12.9.)
  -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1.7.13.)
- 알기 쉬운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20.12.8.)·시행('21.12.9.)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통과 추진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정책간담회 참석,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논의 지원, 정기국회 통과 주력법안 요청 등
-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 형사법 자문회의(고유법, 성범죄, 가정폭력, 디지털 압수수색절차, 간이공판절차 개선 분야 등), 정책연구과제 관련 회의 등 개최
- 리얼돌 관계부처 실무회의, 잠입수사 도입 관련 당정회의·경찰청 협의, 직권남용죄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법무부 중점추진 법안 설명회, 군사법개혁TF 실무회의 등 참석
- '20. 선고된 불법사찰 관련 판례 등 검토, '20.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등 불법사찰 관련 개별 특별법 검토

## □ 주요성과

- 새롭게 대두된 폭력 범죄에 대한 법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
- 학계·관계부처 등과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현장불편 및 입법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 증진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경과를 추적·관찰한 후 전문가 의견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형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 해외 입법례 분석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해외 입법례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의 목표는 형법체계의 합리적 재정립을 통한 범죄 구성요건 신설·폐지 및 적정 양형 구현을 통한 국민 사법신뢰 제고로, 형사관계 법령·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및 성과로 구성된 현재 성과지표는 정책연관성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을 포괄하는 결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신분위장수사 도입에 앞서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 위장수사 도입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수사 실효성과 적법성 확보 간 균형을 도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1.5%	■ 형사관계 법령·제도의 정비를 위한 연구 및 성과(건)
6	정책 효과	보통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1.2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10.21.) 등의 시행을 통하여 각종 젠더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 구축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위장수사 도입 관련 경찰청 협의 등 현장의견 수렴 4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7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6-2)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화상공증 제도의 안전성·편리성 등을 적극 홍보했고, 이로 인해 화상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접근성이 제고되고, 화상공증 이용건수 역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함

※ '20년 1,785건 → '21년 2,486건

- 공증관계법령 개정, 온라인 공증인 직무교육 실시, 공증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연구용역 등 통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제도 개선안 발굴·추진함
- 공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증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검열을 실시하고, 공증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적정 공증사무소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림

## □ 주요실적

- 코로나19로 공증사무소·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주민, 재외국민 모두 집에서 쉽게 공증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여 국민편익 크게 증대되고,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크게 절감
-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지속적 도모
- 전국 공증사무소 대상 엄정한 감사하여 부적정 공증사무 적발하고 공증인 징계함으로써 공증사무 정상화 및 공증 신뢰도 제고

## □ 주요성과

- 공증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 화상공증제도 활용사례 만화, 이용매뉴얼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국 공증사무소에 배포('21. 1.)
  - ※ 적극적인 홍보 결과 화상공증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1월~10월) 대비 60% 이상 증가(1,382건 → '21년 2,235건)

- 아포스티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21. 9.)
  - 공증제도 홍보포스터 및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전국 법원·지원·시군법원 등에 배포('21. 10.)
  - 공증제도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21. 11.)
  - 공증제도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3부작으로 제작('21. 11.~12.)
- ※ 22년 1월 중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 예정

○ 공증인법 및 관련법령 제·개정

- 공증서류 보관창고의 문으로 적합한 구조체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증사무소 설치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개정('21. 2)
- 법제처의 신고제 합리화 사업 추진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관련규정 정비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21. 4.)
- 아포스티유 협약 이행을 위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해 기존 법무부령, 외교부령 등을 폐지하고, 대통령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및 외교부·법무부 공동부령 제정·시행('21. 4)
-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증인법」 일부개정 추진 중('21. 6. 입안보고, '21. 7. 입법예고, '21. 10. 법제처 심사, '21. 12. 차관회의 통과, '22. 1. 국무회의 통과 및 국회 제출)

○ 공증제도 개선 노력

- 집행증서 시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공증인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체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발주('21. 4.)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하여 실무쟁점 사항에 대한 법원, 학계, 실무계의 의견 수렴하고 공증제도의 개선방향 논의('21. 6.)
- 공증인 온라인 직무교육 실시('21. 11.)



- 공증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여론조사 시행('21. 11.)

○ 비위 공증인에 대한 징계

- '21. 1.~11. 총 235곳의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시정조치
- '21. 2. 3.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총 38명의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 38명(임명공증인 4, 인가공증인 11, 공증담당변호사 23)의 징계대상자에게 과태료 15, 견책 23 의결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화상공증 시 본인확인 수단 확대 개선

- 재외국민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여권을 통해서도 화상공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이 불가하여 재외국민의 불편이 야기되었음
- '21. 11. 여권을 통해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였고, 차후 재외국민의 화상공증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공증 실적, '20년 공증감사 결과, 최근 공증인 징계 내역 등을 분석</li> <li>■ 교수, 임명·인가공증인, 대한공증인협회 관계자, 법원, 변협 등으로 구성된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공증제도 개선방안 논의('20. 8.)</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과제는 화상공증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공증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증 관련 하위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증영역을 확대하여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 성과지표는 정책연관성 및 효과성이 있음</li> </ul>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li> </ul>
4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관련 법령개정 등 실무상 문제되는 공증현안 및 공증제도 개선 방향 논의</li> </ul>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증 제도개선 및 신뢰도 제고(점수) 등 2개 지표</li> </ul>
6	정책 효과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상공증제도의 안정성·편리성을 적극 홍보한 결과 화상공증 건수(1월~10월 기준)가 '20년 1,382건에서 '21년 2,235건으로 60%가량 대폭 증가</li> </ul>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증 촉탁인, 공증인 등 전자공증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전자공증시스템 만족도 조사 등 현장의견 수렴 6회 실시</li> </ul>
8	홍보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1회</li> <li>■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화상 공증제도 홍보)</li> </ul>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li> </ul>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li> </ul>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li> </ul>

## □ 총 평

- 제10회 변호사시험은 '21. 1. 5. ~ 1. 9.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기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전국 25개 법전원 소재 대학에서 단 1명의 확진자 없이 안전하게 시험 집행을 완료하였음
  - 특히 금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수험생의 편의 증진과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9개 시험장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모든 시험장으로 전면 확대하였고, 그동안 국한문 혼용이었던 법전을 한글 전용으로 바꾸는 한편, 법전의 크기 또한 수험생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A5→B5크기)
  - 4. 21.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1,706명)를 결정하였고,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발족한 변호사시험 개선 TF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중 출제 과목별 총괄위원장 제도는 내년 시험부터 적용하고 CBT 제도 도입 등은 금년부터 준비 과정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역시 계속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1. 8. 7.(토) 안전하게 실시하여 9. 15.(수) 합격자를 발표하였음
  - 시험의 안정적 관리와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등 시험출제 관리에 노력하여 2018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이후부터 4년 연속 90% 이상대의 안정적인 합격률을 유지하였음
- 변호사시험제도와 관련하여 기본 3법(헌법·형법·민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력 측정과 수험생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마련한 선택형 시험과목을 기본 3법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헌법상 가치인 모성의 보호를 위해 출산·임신의 경우 응시 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하는 방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 되어 함께 국회에 계류 중임

- 또한 '20. 9. 국민권익위원회의 응시수수료 반환 불합리(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 개선 권고 및 '20. 10. 대법원 판결 이후 응시자들의 석차를 공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에 있음('21. 11.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한편, 변호사시험 실시 10주년을 즈음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수험생의 지속된 요구사항 등 외부의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고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지난 2월에 구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수립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음

- TF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대한변협 추천위원 각 3명, 법무부 2명 총 8명으로 구성하여 발족함
- TF에서는 총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 출제, 집행, 채점 등 전 과정에 걸쳐 가감 없이 변호사시험 제도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목별 출제위원장 위촉,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법전 사용방식 개선, 필기시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CBT(컴퓨터 기반시험) 도입 등 시험의 모든 과정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의미 있는 과제를 다수 도출하였음
- 나아가 상기 과제가 내부 보고에만 그칠 경우 추진에 탄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과 책임감을 한층 부여하였음
- 우선, CBT(컴퓨터 기반시험)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수험생용 및 관리관용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

- 결원보충제 연장, 온라인·야간로스쿨 도입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대한변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의 장관님 예방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였음
-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당장 제11회 변호사 시험('22. 1. 11. ~ 1. 15. 예정)의 집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응시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각자의 실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문제 출제, 시행집행 전 과정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음

## □ 주요실적

### ○ 제10회 변호사시험 정상 시행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험생 감염 우려로 시험일정 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철저한 방역관리로 '21. 1. 5. ~ 1. 9. 전국 25개 시험장에 총 4,781명(연인원)의 시험관리 인원을 투입, 단 1건의 감염 사고 발생 없이 시험 집행을 완료함
-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철저한 검증절차에 의한 문제 오류 방지 등을 통해 오류 없고 변별력 있는 우수한 문제 출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무난한 시험 문제를 출제함
- 장애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음성지원 컴퓨터, 답안작성 대행 및 전자파일 법전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보장함
- '21. 4. 21.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 합격자 1,706명을 결정함  
 ※ 전회 합격인원,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 종합적 고려

○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정상 시행

- '21. 7. 31. ~ 8. 7. 출제위원, 검토위원, 출제관리요원 등 총 40명이 합숙하여 출제를 진행함
- 충실한 문제은행 구축, 철저한 문제검토시스템을 통해 복수정답 등의 오류 없는 문제를 출제함
- '21. 8. 7. 전국 9개 시험장에 총 844명(연인원)의 시험관리 인원을 투입하여 사고 발생 없이 시험 집행을 완료함

<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개요 >

- ▶ 시험일시 : 2021. 8. 7.
- ▶ 시험장소 : 서울지역 5곳, 대전·대구·부산·광주·제주 각 1곳
- ▶ 응시현황 : 총 2,299명 출원 / 2,256명 응시(응시율 98.1%)

- 기출문제 난이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실제 문제 또한 예측 가능한 문제로 출제하여 적정 난이도를 유지함(합격률 96.50%, 전년대비 3.45% 상승)

○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추진 등 시험제도 내실화

-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험석차를 공개하고 아울러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까지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 '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편의를 위해 기존 9개 시험장에서 로스쿨 소재 전국 25개 시험장으로 장소를 확대함

○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관련 정책현장방문, 의견 수렴

- 여당 정책위 대상 변호사시험 운영사항을 설명하였으며, 법전원 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함

-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및 대한변협 회장의 법무부장관 방문을 추진함

## □ 주요성과

-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험출제, 집행 및 문제지 인쇄 등 시험 전 영역에 걸친 철저한 방역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제10회 변호사시험 및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하였음
- 매년 유관기관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한 갈등상황 속에서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합격인원 결정, 적정 합격률 유지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였음
-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시험 주관기관인 법무부가 시험개선 TF 발족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CBT 도입, 과목별 출제 위원장 위촉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적극 행정을 구현하였음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매시간 법전 회수 및 무작위 배포 방식을 변경하여 응시자가 4일간 전용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법전 밀줄 허용 관련 지침이 전 시험장에 일관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현장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였음
- 내년도 시험부터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법전 전용 사용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법전 배부 시 비닐팩을 함께 배부하고 시험 전, 후 이를 회수 및 재배부함으로써 전 응시자가 동일한 조건(논술형 시험시간 중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밀줄긋기만 허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할 예정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국내외 법조인 수급현황·법전문 학사관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이를 반영한 합격자 결정안 마련(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안건 작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시험문제의 신뢰도 확보, 공정한 시험 관리, 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 시험」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으로 성과지표 중 복수 정답 인정률 2%이하 달성 등 대표성은 인정되지만, 장기적으로 결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부산 등 4개 시험장 운영 및 경비를 위한 인력 지원 및 시험장 설치 관련 협조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2.4%	■ 변호사시험 시행 및 법조인 선발·양성 연구실적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을 통한 정책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 구현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법전문협의회 주관 심포지엄 참관 등 현장의견 수렴 6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4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 □ 총 평

-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

### □ 주요실적

- 「변호사법」 개정안 정부입법절차 진행
  -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21. 1.)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21. 2. 5.)
  - 부내심사('21. 3. 4.) 및 법제처 심사 완료('21. 5. 25.)
  - 제24회 차관회의('21. 6. 24.) 및 제27회 국무회의 의안 상정의뢰('21. 6. 29.)
  - 국회 제출('21. 6. 30.)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시행령 세부사항 마련 예정

## 나.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

### □ 총 평

- 법률사무종사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통합 선발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신규 변호사의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익법무관의 업무상 공백 대체 및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치행정 강화

## □ 주요성과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을 통해, 신규 변호사에게 국가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한 실무역량 증진 기회를 부여하고, 법률 전문가 인력을 통한 국가기관의 법치행정의 토대를 마련하며, 나아가 법률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도모

## □ 주요실적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1차·2차 선발 실시
  - (1차 선발) 13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72명 통합 선발공고 게재('21. 4. 26.) 및 선발절차 진행('21. 5.)
  - (2차 선발) 4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49명 추가 선발공고 게재 및 선발절차 진행('21. 6.)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정례화
  - '22년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국가기관 수요조사('21. 4.) 및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진행('21. 6.)
-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한변협 연수 지원('21. 2. ~ 5.)
  -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대한변협 연수 강의 '법무검찰 및 행정의 이해' 강사 및 강의안 지원
-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한변협 연수 지원
  - 대한변협 연수 운영백서 출간 참여 및 지원('21. 1.~2.)
  - 대한변협 연수 강의 '법무검찰 및 행정' 강사 및 강의안 지원('21. 5., 11.)
  - 대한변협 연수운영위원회 참여('21. 2.~11. 총 7차례 참여)

## ○ 법률사무중사기관 관리·감독

- 법률사무중사기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서면 조사 진행('21. 4.~5.) 및 추가 조사 위탁(대한변호사협회, '21.6.~9.)
- 법률사무중사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위탁(대한변호사협회, '21. 9.),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반영('21. 11.~12.)
- 법률사무중사 변호사의 업무범위 관련 연구용역 진행('21. 9.~12.)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법률사무중사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기관별 담당자와의 소통 부재로 선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즉시 대응 어려움
  - 수요조사 및 예산 협의 단계에서부터 기관별 담당자 지정 및 지속적 안내 실시하고, 실제 선발과정에서 주기적 현황 파악 실시('22. 4. ~ 6.)
-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만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의 유일한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 기회 보장 위해 연수기관 다양화 등 추진

## 다.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강화 등

### □ 총 평

-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한 비위변호사 엄중 징계 정상 추진
  - 지속적인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비위 변호사를 엄중 징계하여 법률시장의 투명성 제고
- 대한변협 연수 인원 제한 문제 해결 및 연수제도 개선 추진
  - 대한변협 연수 인원 제한 문제 해결 및 연수기관 다양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내실화 도모
- 리걸테크 산업 전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 추진
  - 「법무부 리걸테크 TF」 구성하여,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립 도모

## □ 주요성과

### ○ 법조비리근절을 위한 변호사 징계

- 비위 변호사에 대한 제재 강화한 결과, 변호사의 비위 행위 점진적 감소

※ 대한변협 징계결정 건수 '19년 126건, '20년 87건, '21년 53건

###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문제 해결 및 연수기관 다양화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

- 대한변협 연수인원 200명으로 제한하여 약 3~400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일시적으로 실무연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였는데, 대한변협 적극 설득하여 연수인원 제한조치 해제
-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기관 다양화 등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

### ○ 대한변협-로톡 갈등 해결 및 리걸테크 TF 구성·운영

- 리걸테크 관련 전문가(학계·실무계)로 구성된 「법무부 리걸테크 TF」 운영('21. 9.~)

## □ 주요실적

###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21. 2. 23.)

- 변협징계위원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총 14건 심의

###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21. 4. 14.)

- 변협징계위원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총 10건 심의

###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21. 9. 3.)

- 변협징계위원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총 10건 심의

###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21. 11. 30.)

- 변협징계위원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총 12건 심의

- 변호사징계처분취소소송 승소 3건, 패소 1건('21. 1. ~ '21. 11.)
- 집행정지 인용결정 1건('21. 1. ~ '21. 11.)
- 변호사 등록취소명령 8건('21. 1. ~ '21. 11.)
-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참석('21. 3. 12.)
  - 변호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 청취
- 법조단체 등 기관장 업무협의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장관님 예방('21. 3. 11.)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장관님 예방('21. 3. 17.)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장관님 예방('21. 3. 24.)
  - 한국법학원장, 장관님 예방('21. 4. 5.)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장관님 예방('21. 4. 26.)
  -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장관님 예방('21. 6. 14.)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다양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정부입법절차 진행
  -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21. 5.~6.)
  - 「변호사법」 개정안 부내 의견조회('21. 7.)
  -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21. 8.~9.)
    - ※ 관계부처 의견 반영하여 일부 조문 수정
  - 「변호사법」 개정안 사전영향평가('21. 8.~9.)
  - 「변호사법」 개정안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및 규제 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21. 11.)
  - 「변호사법」 개정안 부내심사('21. 11.)
- 「법무부 리걸테크 TF」 구성·운영('21. 9.~, 총 2차례 회의)
  - ※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지속추진
- 법무부 리걸테크 TF 논의 주제 다양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포함한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 정착 및 신산업성장동력 확보 방안 모색

## 라.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

### □ 총 평

- 비대면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 구축
  - 경기 광주시와 협업하여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을 진행, 제도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비대면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함
-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 마을변호사 포스터, 버스광고 및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 전통적인 홍보방법과 함께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캐릭터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새로운 홍보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마을변호사제도의 브랜딩에 주력함

### □ 주요성과

-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개설 시범사업 개시('21. 7.)
  - 경기도 광주시와 협의하여 비대면사회에 부합하는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개설 시범사업 개시, 광주시청 내에 화상상담이 가능한 태블릿 PC와 거치대, 헤드셋 등을 제공
- 마을변호사 정보 현행화 및 상담 실적 취합('21. 10.)
  - 제5기 마을변호사 정보 현행화 및 2021년 10월까지의 상담실적

취합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21년 10월까지의 마을변호사 상담실적을 취합한 결과 동일기간 (1월~10월) 기준 역대 최고 상담건수 달성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담건수 (1월~10월)	1,102건	1,339건	1,767건	1,991건

- '21년 10월까지의 마을변호사 상담실적을 취합한 결과 동일기간 (1월~10월) 기준 역대 최고 상담건수 달성

○ 마을변호사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21. 10.)

- 마을변호사 제도 유관기관(대한변협, 행안부, 각 지자체 등) 담당자 및 5기 마을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홍보물품(멀티포트 충전기) 제작 및 배포

○ 마을변호사 오프라인 홍보컨텐츠 제작 및 배포('21. 10.)

-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캐릭터를 활용, 마을변호사제도 홍보 포스터 및 화상상담창구 홍보 버스광고 제작
- 제작한 홍보컨텐츠는 마을변호사

○ 마을변호사 홍보영상 제작('21. 11.)

-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기타 제도 관계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중심으로 10분 가량의 마을변호사 홍보 영상 제작,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에 활용

○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 개선('21. 11.)

- 경기도 화성시청을 방문하여 화상상담창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마을법률담당공무원 등 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
- 대외 홍보 부족과 시청 방문의 번거로움을 화상상담창구 이용률 저조의 이유로 파악, 마을주민도 시청 방문 없이 화상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ZOOM 회의 개설용 유료 아이디 제공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에 대한 마을변호사 참여
  -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범지역인 경기 광주시 담당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바, 해당 변호사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화상회의 이용에 필요한 영상장치 등 물리적 지원 요망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발굴을 위하여 ① 전관특혜 존재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20.1.), ② 20대 국회 발의 법안 조사('19.10.), ③ 전관특혜 및 법조비리 관련 논문 조사, ④ 해외 입법례 조사 진행 ('20.1.)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동 과제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법률사무증사 제도 개선, 비위변호사 제재 강화, 마을변호사 제도 접근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어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우수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협업기관 의견조회 및 검토를 통해 수정안 마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7.6%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등 4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조계 전관특혜를 실효적으로 근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대한변협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 조회 등 현장의견 수렴 4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유튜브 게시 등 홍보 실적 11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20. 8월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 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이후, 기존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외 '21년 중재제기된 부산 투자자 및 다야니 2차 ISDS 사건 등에 적극 대응하고 국익 보호
- \*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쉐들러, 중국투자자 사건
- 투자분쟁 사건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법적지원 등 활동을 실시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 및 법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공 노력
-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분쟁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정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투자보장협정(BIT) 회담에 적극 참여하고, 관계부처에 ISDS 조항을 비롯한 투자 협정문 관련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외국인 투자자 보호 및 증대와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투자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

## □ 주요실적

-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 활동
  - 총 7건의 ISDS 사건(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쉐들러, 중국투자자, 부산 투자자, 다야니 2차) 대응 및 관련 관계부처 회의 진행
  - 중국투자자 ISDS 사건 선결적 항변 심리기일(5. 26.), 엘리엇 ISDS 사건 심리기일(11. 12.~28.) 참석
  - 중국투자자 ISDS 사건 청구인 문서제출신청 기각 결정(9. 3.)

- 현재 외부 대리인 선임 없이 자체수행 중인 사건은 부산 투자자 사건 및 다야니 2차 사건 두 건으로, 청구인 측 중재신청서에 대한 정부 측 답변서 제출(부산 투자자 사건 6. 4., 다야니 2차 사건 11. 15. 각 제출)

-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 18회 실시

○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및 법적지원 실시

- 한국수자원공사(5. 11.), 대한무역진흥공사(6. 1.), 외교부 및 외국인 투자옴부즈만(6. 17.)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3회 실시
- 국제투자분쟁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법무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21. 4.)
-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대비 사례집」 발간·배포('21. 4.)
- ISDS 제소가능성 법률검토 11건

○ 국제투자분쟁절차 제도 개선 활동 및 관련 규정 개정

- ISDS 제도 개선 등 논의를 위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및 제40차·제41차 회의 등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정부 의견서 4차례 제출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규칙 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9. 9.)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마련 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 추진('21. 10.)

○ FTA, BIT 등 투자협정 참여 및 자문 제공

- 한-오만, 한-UAE, 한-멕시코 BIT 개정 회담 및 한-조지아, 한-투르크메니스탄, 한-바레인 BIT 제정 회담 참석(총 7회), 관련 자문 제공

□ 주요성과

- UNCITRAL, ICSID 등 국제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여하고, 정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ISDS 제도 및 절차 개선에 기여

- 한국수자원공사(5.11., 대면), 대한무역진흥공사(6.1., 비대면), 외교부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6. 17., 대면)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실시, 외국인 투자 관련 기관에 국제투자법 일반 원칙 및 관련 투자 협정의 위반가능성 자문,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대비 사례집」을 발간·배포를 통해 외국인 투자 담당자 대상 맞춤형 예방 활동 실행
- 법무부-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개정을 통해 필요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장이 법적 조언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분쟁대응단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투자협정 관련 자문 제공, 투자보장협정 회담 참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이익을 대변하고, 국내·외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증대 등 국제투자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ISDS 제도 개선 관련 국제협약체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결과물을 토대로 국내법규 재개정 작업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 결과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 필요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진행률이 저조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 우려되는 바, 향후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진행에 대한 홍보를 늘리고 이에 대한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필요
- 국제투자분쟁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사건의 직접 수행 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 세미나 외 연구활동, 해외 파견, 단기 해외연수 등을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회의, 투자협정(FTA·BIT) 협상 및 기타 국제회의 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li> <li>■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 담당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교육 수요조사를 실시('20.11.)</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과제는 효율적 ISDS 대응,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 예방활동 토대 마련 등을 위해 신설된 과제로서 사전적(예방교육, 제도개선), 사후적(분쟁대응, 법률지원)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대표성이 높음</li> </ul>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li> </ul>
4	협업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옹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li> </ul>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투자분쟁대응 등 4개 지표</li> </ul>
6	정책 효과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투자분쟁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검토 등 적극 지원활동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li> </ul>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실시</li> </ul>
8	홍보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회</li> </ul>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li> </ul>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li> </ul>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li> </ul>

## □ 총 평

- 법무부 온라인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 소재 발굴로 2021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온라인 홍보 실적 증가
  - 법무부 페이스북 및 트위터 노출수 증대, 상반기 대비 증가했으며 '21년 내부 목표치도 초과 달성
  - 법무 정책 소통 영상 콘텐츠 제작건수 목표치 초과 달성
  - 법무부 페이스북 및 트위터 팔로워 수의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목표치 초과 달성, 법무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 상승
  - 유튜브 및 페이스북, 트위터별 콘텐츠 생산량 증가

## □ 주요실적('21.12.31.기준)

- 법무부 공식 SNS 채널 콘텐츠 조회수 증대로 페이스북 및 트위터 목표치 초과 달성
  - 페이스북 콘텐츠 도달수 11,301,282회 달성
    - '21년 목표치 7,000,000회 대비 145% 이상 초과 달성
  - 트위터 콘텐츠 노출수 5,353,354회 달성
    - '21년 목표치 5,096,145회 대비 초과 달성
  -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 2,613,601회 달성
    - '21년 목표치 8,506,547회 미달성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양질의 콘텐츠 확대를 목표로 홍보활동 추진 (증1)
- 법무부 공식 SNS 채널 팔로워 수 대폭 증가
  - 페이스북 팔로워 수 132,680명('20.12.31 기준) → 157,529명
    - ※ '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목표치 139,480 상회
  - 트위터 팔로워 수 77,077명('20.12.31 기준) → 93,765명
    - ※ '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85,577 상회
  - 유튜브 구독자 수 52,800('20.12.31 기준) → 59,865명 (증2)

- 법무정책 콘텐츠(SNS 게시물) 생산량 증가
  - 2021년 유튜브 게시물(영상) 총 실적은 **128건**으로 '21년 목표치 93건 대비 목표치를 초과하는 홍보 적극 진행
  - 페이스북, 트위터 게시물(카드뉴스, 웹툰, 영상 공유 등) 333개

□ 주요성과

- 2020년 및 올해 상반기에 시도하지 않은 방송·포털 등 대중매체 제휴 추진, 파급력 있는 홍보를 통한 법무부 정책 인지도 제고
  - 대중 인지도 높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프로그램 제휴를 통해 방송·유튜브 등으로 법무부 정책 확산
  - 국민 접근성 높은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활용, 브랜드 검색 홍보 신규 추진('21.10.27.~12.5.), 법무부 정책 호감도 제고
- 국민 정서에 맞는 시리즈 홍보물\* 및 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난 홍보물 제작, 콘텐츠 품질 제고
-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독자 수 증가
  - ※ 페이스북 팔로어 157,529명(11.19. 기준, '21 문체부 목표치 139,480 상회)
  - 트위터 팔로어 93,765명(11.19. 기준, '21 문체부 목표치 85,577 상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개선·보완 필요사항
  - 他 정책 집행 기관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관심 높은 법무부 정책 발굴, 국민 체감도 높은 홍보물 제작 필요
  - 전략적 운영을 통해 유튜브 구독자 수 등 목표치 미달 성과지표 달성 주력
- 향후 조치계획
  - 콘텐츠 질적·양적 성과 제고를 위해 기획홍보물 제작 건수 확대
  - 콘텐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 활용 및 인플루언서 협업 등 추진 예정
  - 법무정책 노출 및 국민 점점 극대화를 위해 '22년에 온라인 소통 채널 정비·추가 등, 보다 효과적인 운영 전략 기획·집행 예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소셜미디어 시장 및 현황 분석과 2021년 인터넷 동영상 시청행태 및 광고 태도에 관한 보고서를 활용</li> <li>■ 외부 홍보컨설팅 전문 업체를 통해 '법무부 2021 디지털 소통 전략 수립' 컨설팅</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과제의 목표는 법무정책 홍보를 통한 정책실효성 증대 및 고객 중심 법무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동영상 조회수, 콘텐츠 생산량 등 산출 지표 이외에 홍보효과(예 : 정책인지도 향상률 등)에 대한 결과지표 보완 필요</li> </ul>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li> </ul>
4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 정부와 협업을 통해 아동 보호 관련 영상 홍보물 2종 제작 및 확산</li> </ul>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정책 소통 동영상 조회수(회) 등 4개 지표</li> </ul>
6	정책 효과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추진 정책 등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이 높은 6개 국가 언어로 제작,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 파급력 있게 홍보</li> </ul>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로그 기자단 온라인 카페 및 단톡방 운영 등 현장의견 5회 수렴</li> </ul>
8	홍보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공식블로그 홍보물 게시 등 홍보 실적 20회</li> </ul>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에게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li> </ul>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li> </ul>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관리과제(「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제고」)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 공유의 확대,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개선을 적극·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을 2024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9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형사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을 마련하였음
- 형사사건 관련 통계를 분석하고 형사사법기관 실무자회의, 형사사법포털 이용만족도 조사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27개 추진과제 중 26개는 추진 일정에 맞게 추진되었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어 전체 일정이 늦어졌으나,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내 사업자 선정 예정임
- 형사사법기관 간 신속·정확한 정보 공동활용과 전자적 사건처리 확대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이를 통해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확대 제공

## □ 주요실적

-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법무 서비스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1.10.19.제정)

-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21년~'24년 시스템 구축, '24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
- 형사사법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공동활용 가능 정보 확대 발굴 ('21.1.~12.)
  -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계 인터페이스 29건 개발
  - 경찰 빅데이터플랫폼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1건 개발
  - 경찰 국방부 신원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2건 개발
  -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연계 인터페이스 11건 개발
  -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6건 개발
  - 보호관찰 이통사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 연계 인터페이스 6건 개발
- 형사사법 전자문서 서비스(전자결재, 유통관리, 서식관리, 문서관리) 개선 지속 추진('21.1.~12.)
  - 형사사법 유통·비유통 전자문서 서식 34종 신규 개발
  - 전자문서 서비스 기능 및 오류 개선 11건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21.3.~7.)
- '경찰-이동통신사' 이중화 구성을 위한 연계용 보안소프트웨어 구매('21.8.~9.)
- 형사사법포털 디지털원패스 도입('21.5.)
- 형사사법포털 공동인증서 갱신 방법 개선('21.7.)
-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갱신, '21.11.)
-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년 2회), 정보보안을 위한 수탁업체 대상 교육(4회) 실시

## □ 주요성과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추진과 함께 현 노후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 기반의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주요 진행 경과) 본 사업 대기업 참여 인정('21.2.) → 각 기관 사업계획 확정('21.4.) → 총사업비 2,958억 원 확정('21.7.) → 사업 발주('21.8.) → 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21.11. 현재)
- (기대효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형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IT기반의 종이 없는(Paperless) 녹색행정 실현, 연간 약 9억장의 종이 절감으로 약 85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 기대

- 인터넷 접속 환경의 변화(웹→모바일)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 포털 모바일 서비스 개선을 통한 편의성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

<개선사항>

-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로그인 방식에 대한 확대 적용
- 비밀번호 변경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비밀번호 변경 시기를 알려주는 알림 기능 제공
- 형사사법포털에 등록된 공동인증서의 갱신·변경 시 ID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는 개선 방식을 도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필요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라고 한다) 구축 사업은 대규모·다기간·다부처 사업의 특성상 기관 간 업무 연계 등 협의·조정이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는 차세대 KICS팀 구성원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단기 파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인력 확보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의견 수렴 및 「2020년 형사사건 접수현황」, 「형사사법 통계현황」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 공동활용 건수는 형사사법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 과제의 목표를 대표할 수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교정 통계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정기관 사용자 확대 방안 협의 및 사용자 권한 관리방안 논의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4%	■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건수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서비스 제공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기관(경찰, 해경, 검찰, 법무부) 간 실무자회의 등 현장의견 3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홍보 웹툰 제작 등 홍보 실적 6건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 등에게 가족 또는 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접견제도는 수형기간 동안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된 수용생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
  - 장기간 수형생활로 인한 가족해체와 자녀들의 비행·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의 대물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예방 효과 기대
- 특히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생업에 종사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원거리 교정시설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 민원인 편의 증진에 기여함
  - 스마트접견 제도는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어 민원인과 수형자간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고, 수형자 가족 관계 회복에 기여함
  -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에 수용 확인 등이 필요한 수용자 또는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로서,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
    - ※ 기존의 수용(출소)증명서 방문 발급과 더불어 민원인의 공공서비스 선택권을 확대시켰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위와 같이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원거리 교정시설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
  - 특히 스마트접견 활성화는 수용자와 가족들과의 유대감 강화 및 관계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용생활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 주요실적

- 스마트접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완료('21. 5.)
  - 일반접견실의 마이크 콘솔·화상기기, 스마트접견실의 PC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태블릿 형태의 단말기 도입, 접견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대용량 서버 증설, 신규 접견단말기(태블릿) 및 접견진행 프로그램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
-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관련 대국민 홍보('21. 5.)
  -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및 시행 관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홍보 실시
- 교정기관별 무선 LTE 태블릿 단말기 배부('21. 6.)
  - 무선 태블릿 단말기를 활용한 스마트접견과 관련하여 무선 LTE 태블릿 단말기 우선 배부
    - ※ 총 300대 : 284대 우선 배부, 전면시행 후 16대 추가 지급
-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대국민 홍보('21. 6.)
  - 수용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시행 및 발급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일선 교정기관 민원실, 청사입구 등 TV 모니터에 지속적으로 송출, 대민 접근성 제고
- 통합접견시스템 운영 관련 실태 점검('21. 11.)
  -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교정민원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을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 스마트접견 및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 관련 담당자 간담회 실시('21. 11.)
  -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교정민원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을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 운영상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의견 청취

## □ 주요성과

- 스마트접견 및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홍보 강화
  - 시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대민 접근성 제고
    - ※ 스마트접견 실시 현황 : '19년 86,976건, '20년 259,029건, '21년 10월 199,032건
    - ※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현황 : '19년 3,905건, '20년 6,791건, '21년 10월 7,241건

-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스마트접견 활성화로 수용자 접견권 보장**
  - 코로나19로 인한 교정기관 방문접견 제한 조치의 장기화에도 스마트접견을 통해 수용자 접견권 제한 최소화
    -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스마트접견 장비 확대 설치 및 녹음·녹화 저장용량 확보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미결수용자도 스마트접견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비대면 교정 민원 서비스 활성화로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 '단계별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이 제한되는 등 한정된 공간에 다중이 모이는 것을 지양하는 현 시점에서, '스마트접견' 및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 교정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역할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일부 개방처우급(S1급) 수형자의 스마트접견 독점
  - 일부 개방처우급(S1급) 수형자의 경우 1일 1회 접견을 할 수 있는 점을 활용, 월 20회 이상 스마트접견을 독점하는 등 타 수형자와의 기회균등 문제 발생
  - 스마트접견 호실 부족 및 선착순 접수 방식의 현 시스템 등으로 인한 수형자간 기회 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이에 스마트접견 처우등급별 접견 호실 운영 등 스마트접견 기회 분산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받는 경우 공인인증서 문제, 민원인별 컴퓨터 이용 능력 부재 등으로 민원 발생
  -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을 점검하고,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민원인 예약시간 불이행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인한 민원 발생
  - 민원인 예약사실 미숙지로 인한 예약시간 미접속 시 민원실 직원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접속요청을 하는 등 직원업무부담 가중
  - 접견 실시 중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인의 경우 스마트접견 중

-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담당직원이 영상 차단 및 자막 전송에 의한 경고를 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만으로는 실질적인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직원, 민원인 간 마찰 발생
- 이에 스마트접견 어플리케이션 기능 개선, 자동 예약 불이행 처리 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최근 3년간 스마트접견 및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실적 통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분석,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정도 평가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21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차세대 접견시스템'의 효과성 및 편리성 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측정하고,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 파악 필요, '스마트접견 실시 이용자 만족도'는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대표성 보유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 오류 내용 확인, 사용자 요구사항 및 개선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 향후 시스템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방안 논의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2.4%	■ 스마트 접견 실시 이용자 만족도(%)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스마트접견 제도 전면 시행 및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 교통비용 106억원 및 이동시간 94만시간 절감 효과 발생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미흡	■ 스마트접견 및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제 등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8	홍보 노력도	미흡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4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미흡	■ 실적 미제출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해당없음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해당없음	



## □ 총 평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내외적 홍보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SNS 및 유튜브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정책홍보를 강화하였음
-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 △수용자 대상 공모전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교정 온택트 워크숍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교정행정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음
- △법무부 교정홍보대사 위촉 △유튜브 인플루언서 교정행정(교도관, 수용자)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음
-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주요 교정정책과 교정의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섬

## □ 주요실적

- **홍보 효과성을 고려한 유튜브 게시용 영상 제작 적극 추진**
  - 접근성이 좋고 영향력이 높은 유튜브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교정본부 교화방송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 ‘교도소 24시’에 게시
    - ※ ('20.) 15건 게시 → ('21. 11. 30. 기준) 46건 게시
- **‘대국민 공모전’ 및 ‘수용자 대상 공모전’ 실시**
  - (대국민 공모전) UCC/ 영상 공모전 개최('21. 8.)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교정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
    - ※ 공모주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 (수용자 대상 공모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으로 수용생활 카툰 공모전을 개최('21. 10.)하여 수상작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 공모주제 : 수용생활 중 변화된 삶

○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한 ‘교정홍보대사’ 위촉 및 ‘유튜버 교정행정 체험’ 실시

- (교정홍보대사 위촉) 배우, 가수 등 방송연예인을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교정행정 관련 주요정책 홍보  
※ (6. 4.) 가수 강진,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 (10. 20.) 국악인 하윤주
- (유튜버 교정행정 체험) 유튜브 인플루언서 ‘진용진’의 교도관·수용자 체험 콘텐츠 제작('21. 12.)을 통해 교정행정을 효과적으로 홍보

○ 국제회의를 통한 교정정책 대외적 홍보

- (9. 29.) APCCA 재정위원회 및 관리이사회 개최
- (11. 18.) APCCA 실무자 웹 세미나 참가  
※ APCCA :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 「월간 교정」 발간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매월 교정본부 소식지인 「월간 교정」을 책자와 온라인 웹매거진으로 동시 발간하여 교정공무원의 다양한 활동과 시의성 있는 교정정책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주요성과

○ 적극적 언론홍보 및 대응을 통해 교정정책 관련 이해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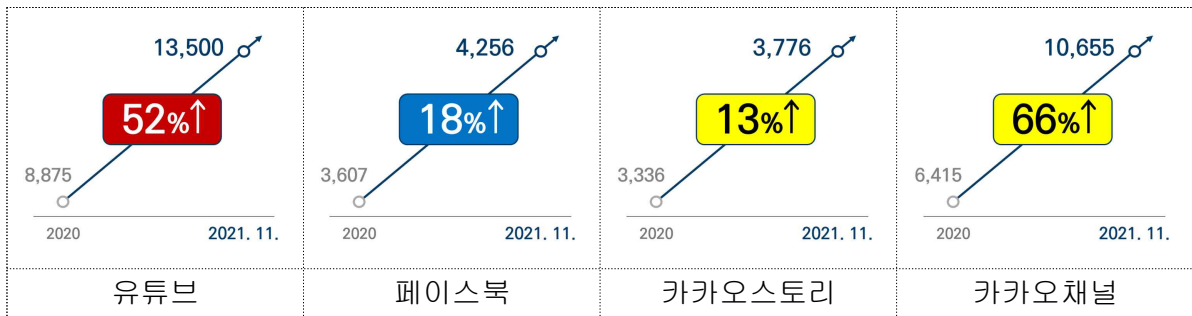
- 과거의 취재요청에 대한 자료 제공의 수동적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등 영상 제작 △유튜버 교정행정 체험 △보도자료 배포 △언론브리핑 등 적극적 홍보방식으로 전환하여 교정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유튜브 등 영상 46건 제작, 보도자료 547건 배포, 언론브리핑 3건 실시
-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리스크 과제 관련 오보 발생 시 설명자료 적극 배포 및 정정보도 신청 등으로 교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 설명자료 69건 배포, 정정보도 신청(언론중재위 조정신청 포함) 10건

○ 홍보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온라인 홍보채널 구독자·팔로우 수 전년도 대비 대폭(45%) 증가

- 교정본부 주요정책 추진사항 및 직원 미담사례 등을 영상 제작,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 4개 채널)에 적극 게시하여 구독자 및 팔로우 수를 지속 증가시킴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소통 강화



※ 구독자 및 팔로워 수 현황 : ('20.) 22,233명 → ('21. 11. 30.) 32,187명으로 9,954명(45%) 증가(↑)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상반기에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체험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정시설 외부인 출입제한 등으로 인해 추진 곤란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배우, 가수 등 방송연예인을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교정 홍보활동 강화



- 11월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유튜버 교정행정 체험' 은 12월 중 실시('21. 12. 16. ~ 12. 17. 예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교정본부 홍보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교정본부 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20. 10.),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정공무원 문화 교양지 개편 추진('20. 12.)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해 교정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자료 배포 실적, 홍보자료 제작 실적 등 단순 산출 지표 외에 교정정책 홍보 전·후 교정정책 인식도 개선효과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대국민 공모전과 수용자 대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방영하는 등 교정본부와 전국 교정기관 간 협업으로 교정행정 홍보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	■ 정책홍보활성도(점수)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우수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방식의 홍보방안을 강화함으로써 다중의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요 교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 제고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대체복무제 시범기관 개선의견 조회 등 현장 의견 수렴 7회 실시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7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 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충족	■ (14-8)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 분야 역량 강화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온라인 홍보 선호도 증가 경향에 따라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활동을 행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온라인 홍보플랫폼 영향력 및 인지도 대폭 제고
  - ※ '20년 대비 증가한 SNS 구독자 수: 페이스북(11,957명 ▲31%), 카톡채널(5,843명 ▲58%), 유튜브(1,416 ▲290%)
- 정책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정책 홍보 효과를 주기 위해 온라인홍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홍보 활동을 하여 맞춤형 홍보 제공
  - ※ 언론홍보, 지하철, 옥외전광판, 라디오, 버스정류장 스크린 광고, 메타버스 등
- 국가적인 현안 이슈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홍보 활동으로 부정 인식 감소 및 신뢰도 제고
  - ※ 21년 본부 주요 현안: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집단감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전자여행허가제(K-ETA) 최초 시행 등

## □ 주요실적

- SNS 홍보 채널 영향력을 대폭 제고 하였으며, 민원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 홍보 플랫폼인 본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12월 개편 완료)하여 가독성과 직관성을 향상, 민원인에게 본부의 정책 정보 및 성과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 대형 무빙배너 설치, 모바일 UI개선, 시각화 및 단순화, 타임라인형 게시판 신설 등
  - ※ 본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접속 현황(명)  
(’20. 12.)125,684, (’21. 1.)128,946, (’21. 2.)118,478, (’21. 3.)152,248, (**’21. 4.)272,890명**
  - ※ 2020, 21년도 홍보만족도 조사 시 홍보 플랫폼 방문경험 1위(평균 70%)
- 코로나19 방역(코로나19 무료검진, 백신접종) 홍보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 질병청,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업, 주한공관 대상 홍보 활동 등으로 과급효과 확산
  - ※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완료율 '21. 8. 28. 기준 27%에서 '21. 11. 16. 기준 72.2%로 약 45% 증가

## □ 주요성과

- 홍보활동 다양화와 다국어 홍보활동으로 SNS 홍보 영향력 대폭 제고, 유튜브의 경우 올해 구독자 수 증가율이 300%에 근접

※ 페이스북 올해 도달 건수: 789,968건, 유튜브 노출 건수: 360,632건

- 정책여론수렴시스템에 따르면 연초(3월) 대비 연말(10월) '외국인 코로나' 관련 부정 언급이 크게 감소(50%→23%)하였으며, 국민들의 긍정 언급이 증가(15%→33%)함

- 전자여행허가제(K-ETA) 본격 시행에 앞서 대언론홍보(내·외신 대상 보도자료 배포, 기관장 인터뷰 등) 활동을 하였으며, 동영상, 리플릿 등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인플루언서 등을 적극 활용한 홍보로 성공적인 제도 시행에 기여함

\* (8개 언어) 한국어, 영어, 일어, 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21. 8. 16. 업로드된 홍보동영상 조회수 약 1만 6천회, 페이스북 도달수 약 7만회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다국어 홍보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외국인 정책 다국어 홍보물의 번역완성도를 높여 국내체류 외국인이 정확하고 일관된 정책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다국어 홍보물 번역오류 사례 : '21. 3. 게재된 외국인 코로나 검진 안내문 (20개 국어)의 오역 및 오타자 등 번역오류 사례가 다수 지적됨

- 다국어 홍보가 시급한 건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번역·감수 자원을 상시 확보하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번역 품질 및 신뢰성 제고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결과'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미디어 기기별 보유율 현황, SNS 서비스 이용률 변화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동 과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홍보하여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 이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홍보 활성화도', '홍보 만족도'는 대표성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보통	■ 7월 백신접종 사전예약제 시행을 앞두고 질병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업망을 구축하여 외국인 대상 백신접종 다국어 홍보물 자체 제작 관련 부처·지자체·유관기관에 배포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1.9%	■ 정책홍보 활성화도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SNS, 홈페이지, 정책메일 등 파급효과가 있는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효과 제고 및 정책 고객의 접근성 향상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출입국 소식지 봄호 리뷰이벤트 등 현장의견 6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1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관리과제의 성과달성을 위해 온라인민원서비스 및 보안활동 등 8개 업무 분야 18개 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이행, 각 평가지표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효과 발생
- 특히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조성 등의 협업 성과, 민원 의견 적극 수렴·반영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의 정책 효과,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한 정보화 성과지표 개선 등 우수 성과 다수

## □ 주요실적

- 사용자 중심의 정보화 정책
  - ‘온라인 변호인 접견 예약’ 등 비대면 온라인민원서비스 확대
  - ‘홈페이지 소식 SNS 공유’ 등 의견 수렴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 장애인·고령자 등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행
  - 원격근무 시 필요한 업무시스템(법무샘·e사람·전자우편 등 14종) 지원
  - 법무포털시스템(법무샘) 사용자 의견 및 오류 개선·반영
  - 소년원·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 수감자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
- 수요자 위주의 데이터 정책
  -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법무공공데이터 온라인(유튜브) 설명회 개최
  - 사회안전·법률복지 분야의 공공데이터 12개 목록(17종) 추가 개방
  - ‘법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사업 예산 확보
  -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학습동아리 운영
  - 법무데이터의 기관 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 보안사고 예방 활동
  - 보안관제 통합분석시스템 및 자동화시스템 확충 등 시스템 고도화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취약점 점검
  - 법무부 BSC 평가에 ‘정보보안 예방활동’ 공통지표 추가



○ 정보화 협업

- 실·국·본부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행정정보화 예산 확보
- 실·국·본부 정보화 업무 협의체 참여 및 전문 전산인력 지원

○ 평가위원 개선의견 반영

-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화 노력도' 지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보화 성과지표 개편

□ 주요성과

○ 사용자 중심의 운영과 의견 수렴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비대면 온라인민원서비스('온라인 변호인 접견 예약' 등) 확대 도입과 민원 의견('홈페이지 소식 SNS 공유' 등) 반영으로 온라인 편의성 제고
- 차별 없는 웹 사이트 이용 환경 조성과 보편적 이용권 보장으로 법무부 웹 사이트 7곳에 대해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 국민 불편 해소 노력으로 '2021년 3분기 민원서비스 종합 포상' 국민제안 분야에서 홈페이지 업무담당자 우수 직원으로 선정
- 법무포털시스템(법무샘) 사용자 의견 및 오류 151건(4분기 기준)을 개선·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업무 환경 제공
- 원격근무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통한 이용자 확대(11.26. 기준 전년 4,975명 대비 1,392명 증가한 6,367명) 및 행정공백 발생 방지
-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을 통해 자격취득·진학·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사회통합에 기여

○ 데이터 정책 추진으로 대국민 편익 증진

- 추가 개방된 법무공공데이터 17종 포함 지금까지 총 127종을 개방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리 향상
- 법무공공데이터 온라인 설명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법무공공데이터의 국민적 관심도 및 이용실적 증가 ('21년 최종 이용실적은 39,239건으로 전년 23,048건 대비 70.24% 증가)
-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직원들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관심도 확산과 빅데이터 필요성 인식전환 및 이해도 제고

- 법무 빅데이터 플랫폼 추진으로 데이터 분석에 기반 한 법무정책 추진 지원의 기반 마련
- 법무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동활용데이터로 등록·제공함으로써 타 기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등에 도움

#### ○ 보안사고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법무행정 서비스 환경 구현

- 보안관계 통합분석시스템 연계 및 자동화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위협 탐지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법무행정 환경 구현
- 주요 시스템(‘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에 대한 긴급 취약점 점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성·안전성 확보
- ‘정보보안 예방활동’ 지표의 BSC 평가 반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

#### ○ 정보화 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업무 추진

- 실·국·본부 주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협업으로 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과 우수한 사업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전산 전문 인력이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완수 및 효율적 추진

#### ○ 평가위원 의견 반영으로 성과지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

- 2개(‘전자민원서비스 이용 실적’,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이용 만족도’)의 지표로 간소화하고 측정산식을 단순화해 성과 측정이 용이하도록 신규 정보화 성과지표 설계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 미흡한 점

- ‘법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법무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나, 아직까지 빅데이터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직원들 인식·역량 다소 미흡
- 보안관계·침해대응·개인정보보호 등의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

○ 개선·보완사항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학습동아리' 및 '법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관심도 확산과 빅데이터 필요성 인식전환 및 직원 역량 제고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문화조성에 더욱 박차
- 정보보호 인력을 대체하고 보안위협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보안관계 통합분석시스템 및 자동화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보다 객관적인 정보보호 소요인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정운영인력 산출을 위한 컨설팅 추진 여부도 검토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통신재난 대비 정보통신망 고도화와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이전 등 '20년도 정보화 업무계획 총 51개 추진과제의 세부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미흡한 점 등을 분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19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개발한 지표로서 기술·'절차및활동'·'고객' 3가지 성과영역 및 6개 세부 성과항목(공공데이터 개방수준, 정보시스템 개선노력, 정보보안 수준강화, 정보시스템 응답시간, 홍보노력, 소통노력)으로 구성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4	협업 노력도	미흡	■ 사이버위기 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정보시스템·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모의훈련을 실시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	■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화 노력도
6	정책 효과	보통	■ 장애·나이 또는 기술 환경 등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수준을 향상시켜 법무부 운영 웹 사이트 7곳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법무행정정보화 신규 정보화사업 설명회 등 현장의견 7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홍보물품 제작 등 홍보 실적 11건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해당없음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 □ 총 평

- 올 한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국면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법무부는 시설의 취약성으로 인해 감염병 유입 예방 및 대응 능력이 중요한 부처임
- 이에 따라 기관의 방역 위험수준을 계량화한 코로나19 상황관리 지표를 마련하여 매주 단위로 기관 방역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을 통해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긴장감 조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
- 더불어 수용시설의 실태에 맞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수립하고, 수립한 지침을 기반으로 월 1회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기관 자체적으로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코로나로 인한 기관 내 피해 발생 및 업무 마비를 최소화하고 있음
- 또한, 법무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여 기존의 매뉴얼 적용 대상이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그 외 소년보호기관, 출입국기관 등의 재난대응 매뉴얼이 부재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무부 전 기관 총괄 차원의 종합적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한층 더 안전한 법무행정 환경을 구축함

## □ 주요 실적

### ○ 수용시설 코로나19 대응매뉴얼 제정('21. 2월)

- 코로나19 유입 시 집단감염에 취약한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기관별 대응지침을 수립(교정기관 54개, 소년보호기관 12개, 외국인보호시설 21개로 총 87개 보유 중)

○ **코로나19 상황관리지표 분석 실시·보고(‘21.1~10월)**

- 기관 소재지 거리두기 단계, 기관 격리실 마련 현황 등을 통해 방역 위험도를 계량화하는 ‘상황관리지표’를 마련·활용하여 매주 전 소속기관 방역수준 모니터링
- 매월 분석한 지표 수준을 장관님까지 보고하여, 기관 실태 보고

○ **본부 불시점검 및 실·국·본부장 방역책임제 실시(‘21.4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본부 직원들의 방역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월 1회 비상안전기획관실 직원들이 불시 전체 사무실을 점검하고(‘21.4월~),
- 부서장 방역 관심도 및 직원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직접 사무실을 순회하며 점검하는 실·국·본부장 방역책임제 도입·실시(‘21.7월~)

○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 실시(연중)**

- 상황관리지표 저조 기관 등을 선정하여,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주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 지도 및 애로사항 청취

○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제정(‘21.1~5월)**

- 교정시설에만 국한되어 마련되었던 재난대응 매뉴얼을 모든 법무시설을 총괄하는 매뉴얼로 제정하여 체계를 전면 개편
- 우리 실이 관리하는 「법무시설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립(‘21.1.8. 행안부 승인), 실국본부의 「법무시설 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수립(‘21.3.9. 비상안전 승인), 전 소속기관의 「법무시설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21.5.25. 전 기관 완료)

○ **일일재난안전결산 시행(‘21.1~계속)**

- 매월 한 가지 의무점검 테마(집중호우, 태풍, 산불·화재 등)를 선정하여 계절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기관 시설물 및 장비를 선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님까지 매월 보고

○ 법무부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9월)

- 재난관리 목표, 재난·안전관리 체계, 법무시설별 안전관리 대책, 재정투자 계획 등 연간 추진할 안전관리 총괄 집행계획 작성

○ 법무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8~10월)

- 총 159개 기관(교정 140개, 출입 3개, 보호 16개)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33개의 지적사항을 발굴(현장시정 2개, 보수·보강 29개, 정밀안전진단 2개)

○ 2021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1월)

- 11. 23.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안양소년원에서 진도 5.5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붕괴 및 원생 도주이탈 등의 복합재난 긴급 발생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역량 제고

○ 법무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12월)

- 재난 발생으로 본부 청사가 손상될 시 핵심업무를 중단없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이 수립된 계획 마련

□ 주요성과

-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적극 추진을 통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확진자 발생을 안정적으로 관리
- 우리 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편 및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태세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 확보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기존 규모대로 업무를 추진했을 때보다 적은 효과를 거둠
  - 2021년도 안전한국훈련은 직원들이 동원되는 실제 훈련이 아닌 소규모 도상훈련으로만 진행하였음(행정안전부 지침)
- 2022년도는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정화되어 정식 규모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코로나19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전 소속기관 대상 매월 취합한 상황관리지표 통계를 관리, 코로나19 현장점검 대상기관 선정 시 활용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코로나19 방역상황 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은 법무부 코로나19 방역태세 유지 및 재난안전 관리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관통하는 직접적 성과지표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일부일정 지연)
4	협업 노력도	보통	■ 「법무시설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유관기관 실무 매뉴얼 수립을 요청하여, 현재 소방청·경찰청·국방부 수립 완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	■ 코로나19 방역상황관리(건) 등 2개 지표
6	정책 효과	보통	■ 코로나19의 법무시설 유입차단 및 효과적인 확산방지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법무환경 조성
7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생활방역팀 회의 등 현장의견 6회 수렴
8	홍보 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적 11회
9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책 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전략목표 반영도	해당없음	
	미흡과제 개선 노력도	충족	■ 전년도 미흡 원인을 충실히 분석하여 개선
	기관장 노력도	충족	■ 국회 대응, 현장 점검 등 장·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충족	■ 자체평가 위원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 및 반영



2021년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2022. 1.

법무부

#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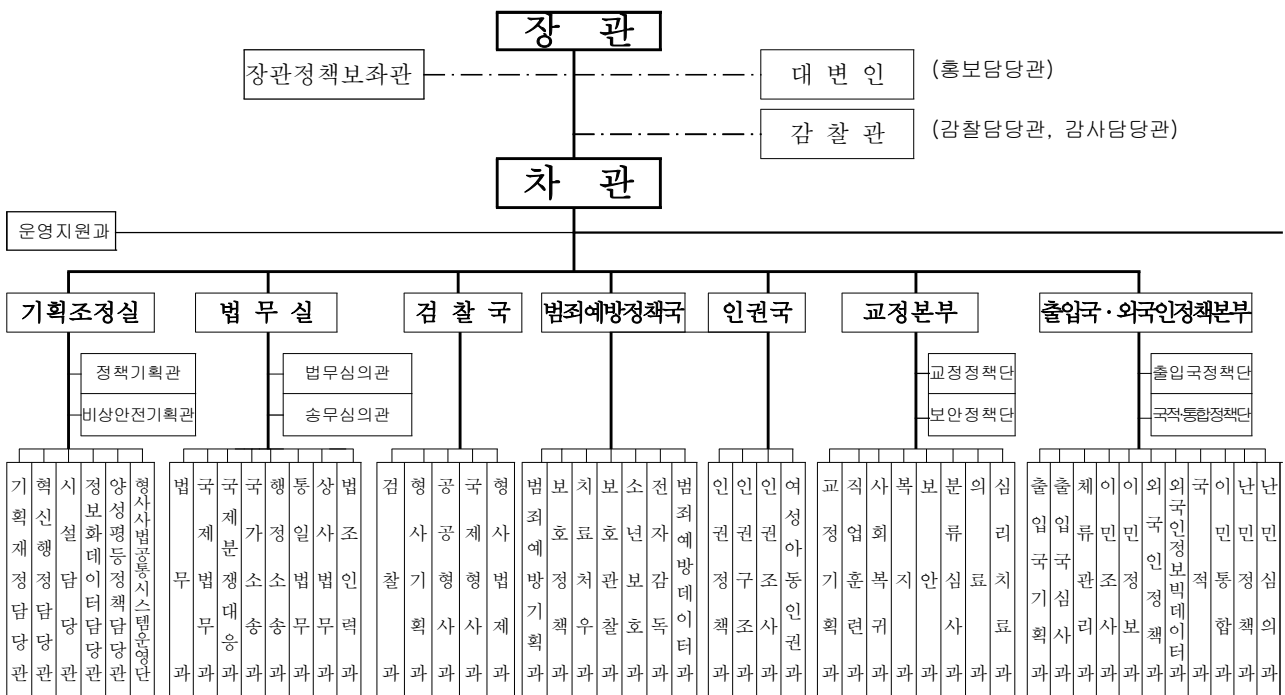
◇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제32조)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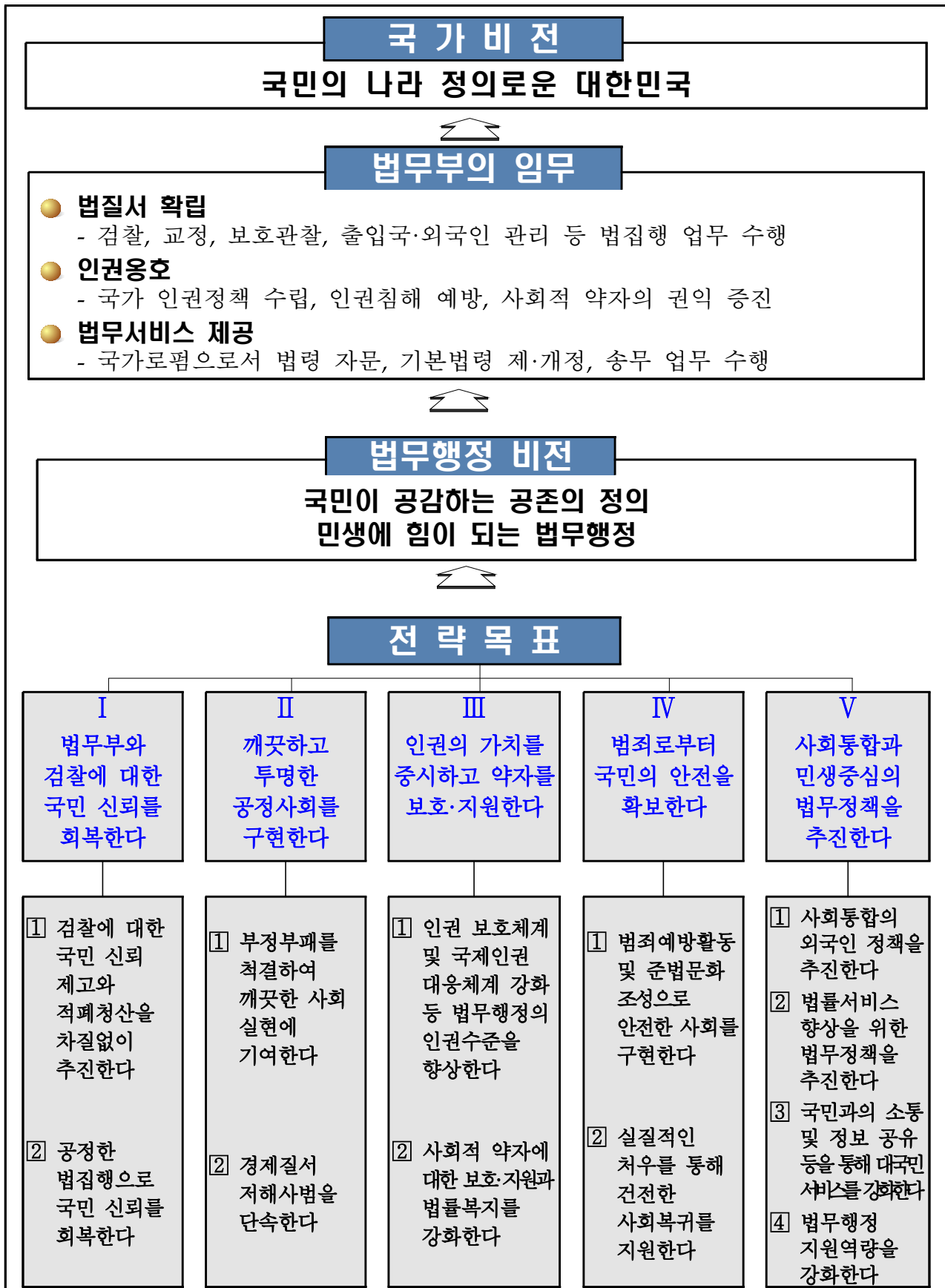
## □ 핵심 기능

<b>검찰·법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사무의 지휘·감독</li> <li>■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li> <li>■ 국가송무의 수행 및 지휘·감독</li> </ul>
<b>행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예방 및 범법자의 재범 방지</li> <li>■ 범법자의 교정·교화</li> </ul>
<b>인권옹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옹호 및 법률구조</li> </ul>
<b>출입국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 및 국적·난민 사무</li> </ul>

□ 조직 : (본부) 2실 3국 2본부 10관 53과, (소속기관) 202개



## 2. 전략적 목표체계



## 2021년 법무부 전략목표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24년 목표치
I. 법무부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법무·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도(점수)	한국행정연구원 주관 연도별 사회통합실태조사(국가공인통계) 상 경찰신뢰도(4점만점)×25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57.5
II.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5대 중대부패 범죄 단속 실적 (점수)	5대 중대부패 범죄 기소 실적 1명 당 0.032점 (기소 1명 × 0.032점)	대검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자료취합	37
III.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 지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인권위 권고 건수 ÷ 법무부 수용 건수 (일부 수용의 경우 0.5건으로 집계)	국가인권위 확인	95
IV.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당해연도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 범자 수 / 당해연도 집중보호관찰 대 상자 실시인원)×100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작성 통계 및 보호관찰 통계분석 시스템	10.5
V.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지표 삭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대표성 낮음 등의 사유로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삭제(국조실 전문가T/F, '19년)			

## I.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 성과지표

###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점수)

####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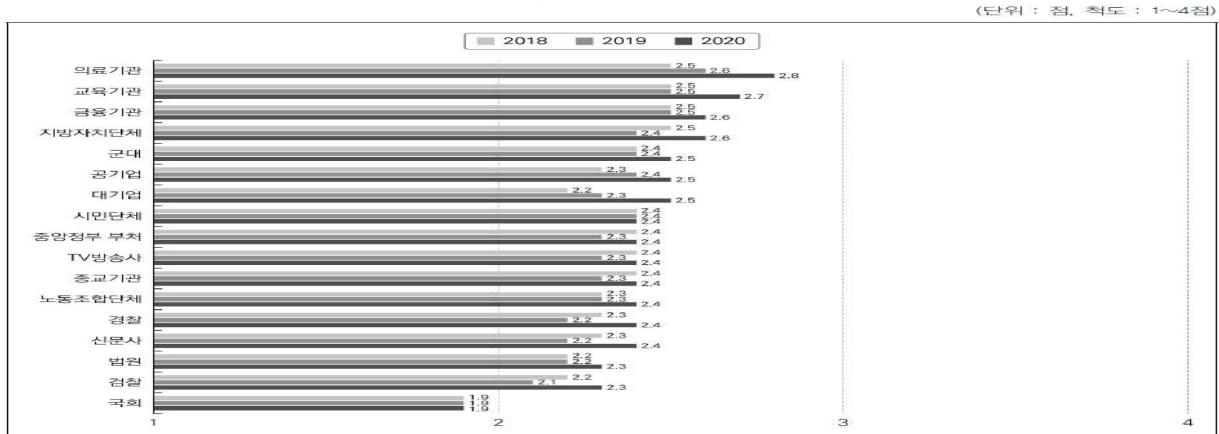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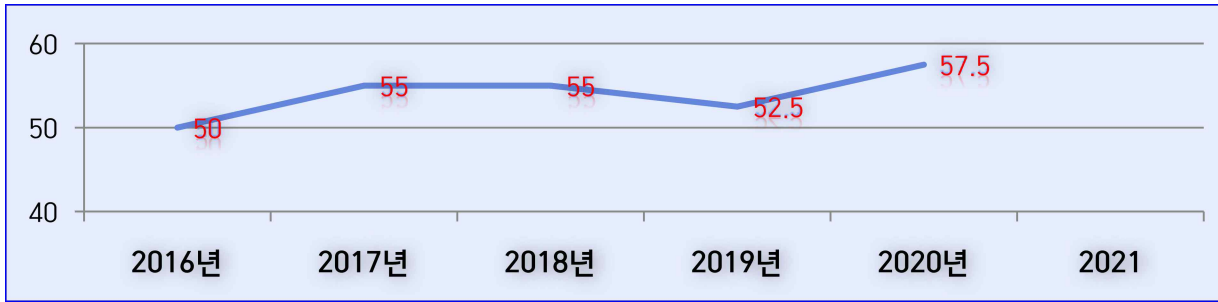
##### 〈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

- 개념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통계
- 조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성인 남녀
- 측정산식 : [사회통합실태조사\* 상 검찰 신뢰도(0~4점)] × 25
- \* 사회통합실태조사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참여·사회적소통·신뢰 등 9개 부문 조사('11년~)

#### □ 2021년 측정결과

⇒ 한국행정연구원의 '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법무·검찰신뢰도)' 발표가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22년 4월 발표 예정) '20년 실적 기준으로 작성

- (목표 달성률) '20년도 '검찰 신뢰도' 실적은 57.5점(2.3점\*25)으로 목표치인 57.5점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 '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검찰을 중앙정부 부처(2.4)·경찰(2.4)·법원(2.3) 등 타 국가기관 및 종교기관(2.4)·방송사(2.4)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 국회(1.9)에 대한 신뢰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 (추세치) '20년 검찰 신뢰도는 최근 5년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지원 등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16년) 50점 → ('17년) 55점 → ('18년) 55점 → ('19년) 52.5점 → ('20년) 57.5점



## □ 성과분석

○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인 「검사인사규정」(21. 1.), 세부 인사 기준절차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개정(21. 12.)하였습니다.

※ 특정 부서 근무나 인맥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인사시기, 전보원칙, 필수보직기간, 외부기관 파견 기준 준수

- 인권·민생 중심의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공인전문검사<sup>1)</sup>·우수 여성 검사<sup>2)</sup>를 발탁하는 등 **기회의 균등 보장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 공인전문검사 : 검사의 전문성을 위해 2013년부터 조세, 증권, 금융 등 36개 분야에 인증제 도입(지금까지 224명 : 블루벨트 218명, 블랙벨트 6명)

2) 여성 검사 발탁 : 상반기 인사 시 법무부 검찰과·대검 검찰연구관·주네덜란드 대사관 법무협력관 등 15명, 하반기 인사 시 법무부·대검 대변인 등 27명 배치

○ **검사 징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개정** (‘21. 4.)하였습니다.

- **검사징계위원회 규모(7⇒9명) 및 외부위원(3⇒5명) 비중을 확대\***하고, **추천 권한을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외부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함으로써 징계 심사에 있어서 법무부의 영향력을 축소하였음

**<검사징계위원회 실효성 강화>**

- 징계부가금 사유를 일반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사유와 동일시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범위 확대(前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검사징계위원회 위상 강화>**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제도 도입, 의결 방식 및 절차 개선을 통한 검사징계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검사징계위원회 확대>**

- 현행 7명 ⇒ 9명으로 확대, 그 중 과반수(5명)를 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추천 권한을 외부기관으로 확대

기존 (7명)	개정안 (9명)
법무부장관(위원장)	⇒ 동일
법무부차관	⇒ 동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 동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총 3명) 위촉	⇒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각 1명(2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변호사 2명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

○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전국 6대 고검 및 지방 5개 지청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하고, 8대 지점에는 **‘인권보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가 6대 범죄(경제·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수사 시 통신 및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 등을 감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였습니다.**

- 검사의 법무부 등 파견 필요성·적정성 등을 엄정 심사하여 파견 근무인원을 축소\*하고, 해당 인력을 일선 검찰청에 재배치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사 18명 파견 감축(40개 기관 64명 파견 ⇒ 33개 기관 46명 파견), 수사·공소제기·국가소송 등의 목적으로 검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중

○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 및 실질화('21. 6.)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2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이 최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 검찰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운영하고 있으나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 공판 초기부터 수사검사로 구성된 공소유지 전담 공판팀을 운영하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특검과 검찰에서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총 45명 중 현재 까지 36명의 판결이 확정(35명 유죄)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확정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1년 들어 7명 추가 유죄 확정, 나머지 9명은 현재 재판 중



- 또한 국정농단 관련자 등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담당자 교육회의 등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조직적 사기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19. 8.)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 11.)

범죄수익환수 관련 교육 및 회의		
연번	시기	교육 및 회의 내용
1	’21. 2.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당이득 산정 TF 회의 개최
2	’21. 2.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 관련 FATF(자금세탁 방지국제기구) 총회 참석
3	’21. 3.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공조방안 논의를 위한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참석
4	’21. 4.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 관련 UN뇌물방지 협약의 ’09년 권고안 개정을 위한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참석
5	’21. 6.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공조방안 논의를 위한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참석
6	’21. 9.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 관련 UN반부패 협약의 이행 및 현안 논의를 위한 UN반부패협약 회의 참석
7	’21. 9.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 관련 UN뇌물방지 협약의 ’09년 권고안 개정을 위한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참석
8	’21. 10.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공조방안 논의를 위한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정례회의 참석

- 성 착취 불법 영상물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 10.) 등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가정폭력<sup>1)</sup>·성폭력<sup>2)</sup>·스토킹<sup>3)</sup> 범죄 등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 가정폭력 범죄 신고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사항으로 현행법 체포, 피해자 보호명령 고지 등 신설 등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등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처벌 강화(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등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 10.)」 :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스토킹 범죄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등)

- 법무부 내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를 구성('21. 7.)하여 '성폭력·가정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21. 12.)하고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을 제정('21. 12.)하였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 ▶ 구 성 : 법조·언론·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
- ▶ 주요 활동 : 전체 회의 8회 및 소위원회 22회 개최 / 1~3차 권고안 마련
  - (1차 권고)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2차 권고)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위한 '응급조치' 신설
  - (3차 권고)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 등 가이드라인 제정
- ▶ 주요 행사
  - ('21.9.)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그 후 1년' 화상 세미나
  - ('21.10.)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위한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
  - ('21.11.) '디지털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



 <b>법무부</b>		<b>보도자료</b>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1. 7. 27.(화)	담당부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담당팀장	서 지 현 검사	담당자	사무관 정길수(02-2110-4364)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 음성화·다양화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능동적인 변화-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아동인 범죄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21. 2.~) 및 운영하여 관련 범죄에 전문적·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4. 7. 재·보궐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범 대처 등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하에서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였으며,
  - 4. 7. 재·보궐 선거사범 339명 입건, 당선인 5명 등 107명을 기소하여 폭력선거, 금품선거 등 주요 선거사범을 엄정 처리하였습니다.

4. 7. 재보궐 선거 관련 단속 실적				
구분	흑색·불법선전	금품선거	선거폭력·방해	기타
광역단체장	113	9	70	82
기초단체장	10	7	0	4
광역의원	7	7	5	20
기초의원	2	2	0	1
합 계	1명 기소	23명 기소	75명 기소	106명 기소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등 국제공조업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외도피 사범 송환 등 국제형사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UN 범죄예방·형사사범위원회 회의'(21년 4회), '미 법무부 범죄인 인도 관련 협의'(21년 2회)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형사사범 공조체계를 강화하였으며,

- 각국 사범당국 및 인터폴과 협력하여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사안별 맞춤형 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상해범·마약사범·강간범 등 국외도피 사범 64명을 국내 송환하였습니다.

- 이는 국제 형사사범공조\*(1,026건 공조, 최근 10년 중 최다 실적)를 통하여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모범 성과입니다.

\* 2개 이상 국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수사·기소·재판과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공조 요청 시 상대 국가가 상호주의에 따라 협력하는 제도

국제형사사범공조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6건	189건	259건	346건	357건	400건	515건	610건	622건	1,026건

## □ 향후 추진계획

-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1년간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인권 친화적 검찰상 확립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5개 고등 검찰청에 최초 설치한 '영장심의위원회' 및 인권보호부·수사협력부 등의 운영 성과를 점검 예정
  - 검·경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범죄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 부패·금융범죄 수사의 공백 방지를 위해 신설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협력단'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
-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 대검 내 사건 접수, 담당 부서 지정 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 및 합리적 조정 절차 규정 마련 등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여 불합리한 수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수용자 반복조사 감독 절차 및 수용자 면담 기록화 방안, 증인사전 면담 시 기억의 오염·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
- 지속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의 필요성, 통제 및 점검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겠습니다.
  - 고검 기능 강화를 통한 조직 내 역할 재정립, 시민참여제도로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 강화 방안 등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 ※ 대검 자체 개혁 기구인 「국민중심 검찰추진단(21. 6. 출범하여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 업무 적극 지원

- 제20대 대선 등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22. 3.)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2. 6.) 관련 선거사범을 적법한 수사 절차 및 양형기준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선거사범 수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울러, 4. 7. 재보궐 선거 등과 관련된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당락·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습니다.
    - ※ 당선무효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 하되,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소
- 외국 사범당국과 국제형사협력을 강화하여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범죄 증거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제 형사사범공조를 통하여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범죄인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강제추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 범죄를 범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또한, 형사사범 공조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 등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겠습니다.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부정한 권력을 사용하여 부정재산을 축적할 경우 언젠가는 처벌 받고 환수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 Ⅱ.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 사회를 구현한다

### 성과지표

###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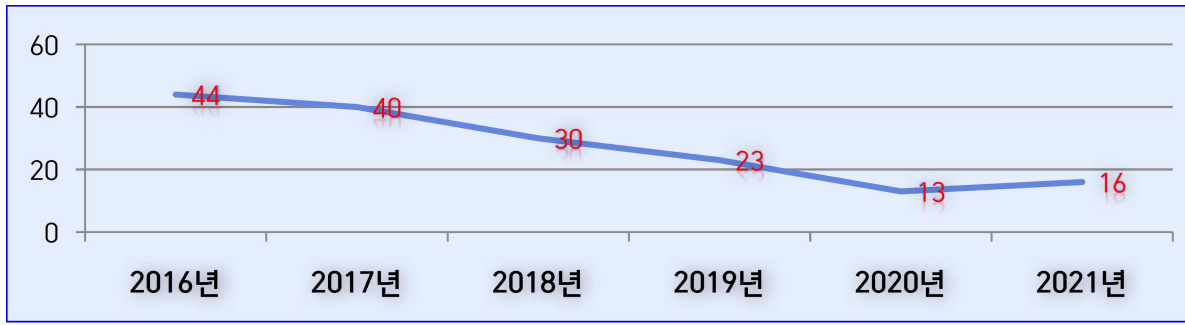
#### □ 성과지표 개요

#####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

- 개념 :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 조사기관 : 대검찰청
- 조사대상 :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 조사방법 :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
- 측정산식 : 5대 중대 부패범죄 기소 실적 1명당 0.032점(기소 1명 × 0.032점)

#### □ 2021년 측정결과

- (목표 달성률) '21년도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은 16점(499명)으로서 당초 목표치인 17점(538명) 대비 93.9%를 달성하였습니다.
  -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등으로 인지수사 총량이 감소하여 단속 실적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각종 부정부패 사범 등 적극적 수사활동 전개 지속하여 '이스타항공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횡령) 사건' 등 499명 기소, 123명 구속 수사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신설하여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증권금융,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21. 1)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설정

## □ 성과분석

-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5대 중대 부패범죄를 적발하고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엄정히 정립하고 검찰의 구형을 강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실현하였습니다.
  - 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계좌추적·회계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철저한 자금추적 및 범죄 수익 환수로 범죄유발 동기를 차단하였습니다.

### 중대 부패범죄 적발 사례

- ▶ 울산지검은 2021. 4. 환경부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계좌추적, 압수수색,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환경업체 대표로부터 금전, 향응 등 합계 1,600만 원을 수수한 A시청 前 환경OO과장(4급, 서기관), A시청 공무원, B기술원 직원 등에게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정부지원금 약 6,400만 원을 편취한 C환경업체 대표이사를 각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2명 구속)
- ▶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회의원 A에 대해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동산개발업자 B○○로부터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하여 합계 4억 6,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구속 기소, A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개발업자 B○○, 정00 의원의 지시를 받고 위 범행을 조력한 C○○ 등을 불구속 기소

- 국민의 삶과 관련된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다중인명 피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교육비리, 금융비리, 방위사업비리, 채용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부패범죄에 상향된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실현하였습니다.
  - **시민재해,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 1.)**」 및 **시행령**을 제정(21. 10.)하여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중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 다중인명 피해범죄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방위사업비리(5명 기소), 공기업·공공인프라 비리(9명), 교육비리(18명) 등 **다양한 유형의 부패범죄에 상향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부 신뢰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약 154억원을 환수하는 등 **법조비리** 관련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철저한 자금추적을 실시하여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함**으로써 범행동기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 군납 비리 단속 사례

- ▶ 甲항공사로 하여금, 자신이 설립한 乙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뒤, 乙회사를 통해 65억 원 상당의 링스 헬기 재생부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납품대금을 수수한 현역 해군 중령 A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에 공모한 乙회사 대표 B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조력한 해군 상사 F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시가 14억원 상당 불법재산 추징
- ▶ 육군 무인항공기(UAV) 착륙보조제동장치 납품비리사건을 보완수사하여, 사경에서 무혐의 송치된 스웨덴 원제작사 명의 품질보증서 위조 혐의를 규명하고, 국내 에이전트 대표가 이를 이용해 국내산 모조부품을 원제작사 정품인 양 끼워 납품하여 국가, KAI로부터 1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 기소



- 상장회사 횡령·배임 등 기업관련 범죄,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하여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행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재정·경제 분야 비리 등을 중점 척결비리로 선정하여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및 대출비리 등 금융 관련 비리 사범 95명을 단속하였습니다.
- ※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설치('21. 9.)하여 시세조종 등 자본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집중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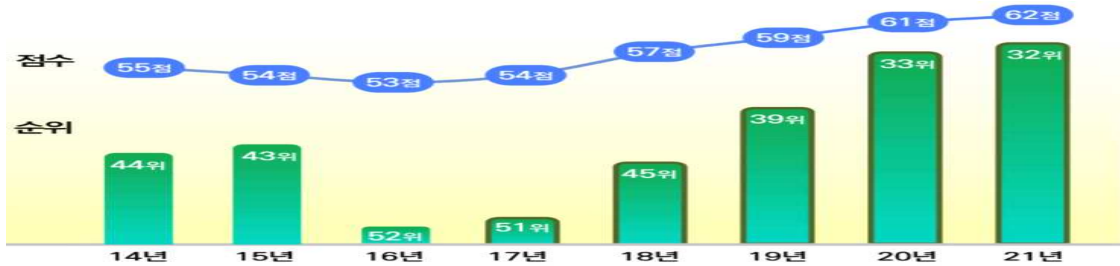
#### 금융 비리 단속 사례

-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접수받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설계·운용·판매에 관여한 A증권사에 대해 수사한 결과, A증권사 임직원 5명과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혐의를 확인하여, '21. 5. 25. 특경(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1명을 구속 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 8. 임직원들의 위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A증권사를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
- ▶ 서울남부지검은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A증권, B금융투자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 ▶ 서울중앙지검은 배달앱 운영업체가 가입 음식점들에게 해당업체에서 보다 직접 전화주문, 경쟁 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위반(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기소
- ▶ 청주지검은 신고리 5.6호기 폐수처리설비 입찰 과정에서 한국전력기술에서 작성한 기술평가보고서 요약본과 타 업체 설명자료를 입찰 참가 업체에게 건네준 前 한국전력기술 처장 및 업체 간부 등 2명을 구속기소, 업체 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

○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는 '21년 역대 최고 '국가 청렴도'\*를 기록하였으며, 외신\*\*에서도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2017년 51위에서 19단계 상승 및 5년 연속 상승)

\*\*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 '21.11월) G20 실무그룹이 발간한 '부패측정 모범 사례집'에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흥미로우며 일부는 다른 곳에서도 모범사례 (best practice)로서 유용'하다고 평가



※ 법무부는 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근 3년간('19~'21년) 최고 등급인 1등급에 선정

## □ 향후 추진계획

○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전국 검찰청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향후 성과지표 목표 : '22년 23점(713명) → '23년 24점(749명) → '24년 25점(786명) → '25년 26점(825명)

○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등 변화된 형사 법제에 따라 재정립된 검찰의 주요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지역별 숨은 비리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또한, 근본적인 부패원인 탐색을 위해 부패 관련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클린 피드백\* 유관부처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부처가 공유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비리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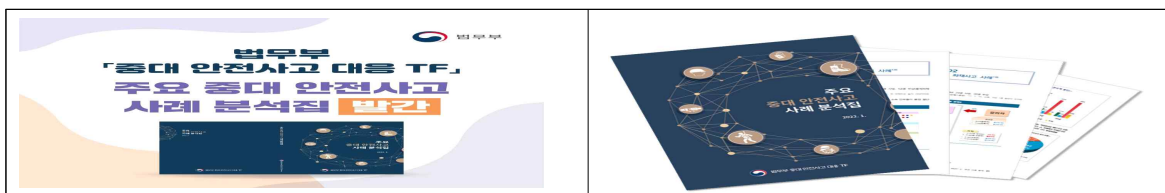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 1. 27. 시행)이 현장에 안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중대재해·안전사고의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21. 7.)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3개 분야(총괄 분야, 산업재해 분야, 시민재해 분야)로 구성, 안전사고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부처 간 공유

총괄 분야	산업재해 분야	시민재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 운영 총괄</li> <li>▶ 유관기관과 협업 지원</li> <li>▶ 입법적 필요사항 등 TF 논의과제 발굴, 연구</li> <li>▶ 피해자 보호 및 지원</li> <li>▶ 제도개선 후속조치 점검</li> <li>▶ 공보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 산업재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처리시스템 점검·개선</li> <li>- 사례 분석 및 사고 방지 시스템 발굴</li> <li>- 업무매뉴얼 정비</li> <li>- 양형기준 재정립</li> </ul> </li> <li>▶ 법령 개정 업무</li> <li>▶ 범정부TF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 시민재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처리시스템 점검·개선</li> <li>- 사례 분석 및 사고 방지 시스템 발굴</li> <li>- 업무매뉴얼 정비</li> </ul> </li> </ul>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동종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하였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22. 1.)하였습니다.



- 또한, 대검·고용노동부가 권역별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새로운 안전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등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와 같이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대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Ⅲ.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 성과지표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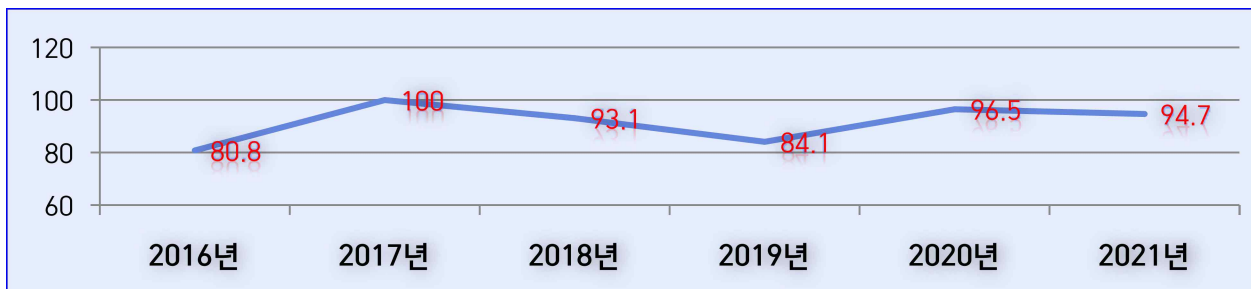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 개념 : 법무부 대상 국가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를 측정하여 인권개선 정도에 대한 정량적 검토 추진
  - 조사방법 : 자체 계수
  - 측정산식 : (법무부 수용 건수 ÷ 인권위 권고 건수) × 100
- ※ '일부수용'의 경우 0.5건으로 집계

#### □ 2021년 측정결과

- (목표 달성률) '21년도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은 94.7%로서 당초 목표치인 91% 대비 3.7%p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지표 추세치) '일부수용 및 불수용' 감소 노력으로 인해 '20년부터 94% 이상 유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	인권위 권고 (A)	수용 여부			수용건수 (D=B+0.5C)	수용률(% (D÷A)
		수용 (B)	일부수용 (C)	불수용 등		
2016	13	9	3	1	10.5	80.8
2017	13	13	-	-	13	100.0
2018	29	27	-	2	27	93.1
2019	22	16	5	1	18.5	84.1
2020	29	27	2	-	28	96.5
<b>2021</b>	<b>19</b>	<b>17</b>	<b>2</b>	<b>-</b>	<b>18</b>	<b>94.7</b>



## □ 성과분석

### 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검토

□ 교정시설 내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보호외국인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보호도구 사용행위 중단 등 인권위 권고에 대한 개선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정시설 의료체계) 교정시설에서 '장애인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전국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sup>1)</sup> 편의시설 실태점검을 실시('21. 4.), 출입구 접근로 등 8개 항목<sup>2)</sup>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중이며
  - 1) 전국 교정기관에 장애인 수용자 1천여 명 수감 중
  -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화장실, 경사로, 출입구 높이 차 제거 등 8개 항목
- 중증 장애인·환자 수용자를 위해 간병도우미, 대체복무요원 등 돌봄 인력을 계속 지원하고, 생활하는 거실과 치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 사례



<화장실 안전바 설치>



<화장실 입구 경사면 설치>



<처치 침대 및 치료용 가림막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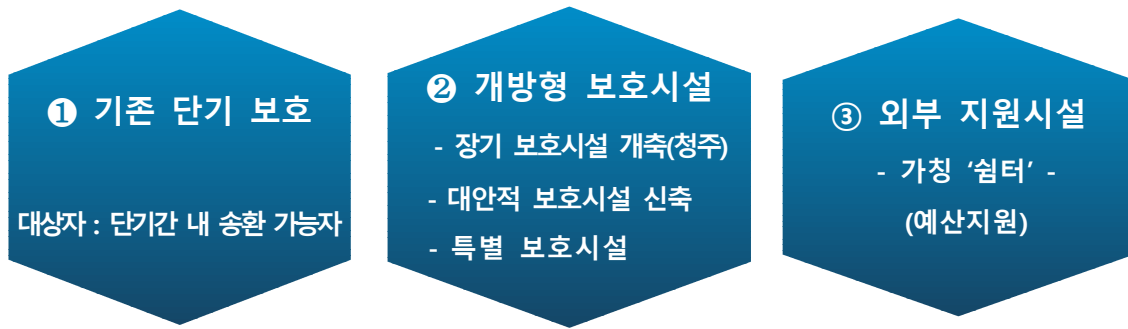
<수용자 거실 의료용 침대 설치>

- 더불어, 점자책·목발·에어매트 등 장애 관련 용품을 선제적으로 구비하여 장애인 수용자 입소 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보호외국인) '보호장비 사용 방법 등 규정 구체화', '특별계호 제도 개선', '직원 직무교육' 등에 대한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장·단기' 보호시설을 구분 및 운영하고 새로운 '대안적 보호시설' 신축을 추진하는 등 인권 친화적 보호시설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 화성보호소 일부 시설을 개축하여 도주·자해·난동의 위험성이 적은 여성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호소 내 이동의 자유를 일부 보장하는 공간으로 시범 운영('22. 3.)



- ①보호 담당 직원의 면담 의무화 ②의사·인권단체 등 외부 의견 청취절차 도입 ③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장기 보호외국인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를 실질화를 추진 중입니다.

\* 심의 주기를 보호기간 1년에서 9개월로 단축, 위원 9명 중 5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외부통제 강화

-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안·보호장비의 종류·사용 요건·방법 및 특별 계호 절차 등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각종 난동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순찰팀 신설 및 수사권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22년 상반기 개정 예정(관계부처 의견수렴 중)

- 아울러, 보호장비의 사용 절차·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방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옹호 정책 총괄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단순 수용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국가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인권정책기본법’ 국회 제출(‘21. 12.), ‘22년 국회 통과 추진 중

### 「인권정책기본법」 주요 내용

- ▶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명시
-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장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지자체 인권기구’ 설치 근거 마련
- ▶ 학생, 공무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및 정부의 인권교육 지원
- ▶ 국가보고서 제출, 국제인권기구 권고 사항의 국내 정책 반영 노력 의무 규정 등

- 법무부는 2013년부터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 법안 내용 등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은 4차례 실무협의, 인권위원장 법무부 초청\* 등 적극 소통하였으며, 의견 조정 및 보완을 거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법무부-인권위) 입법예고(‘21. 6.)하였습니다.
- \* 인권위원장 법무부 방문에 대한 답방 및 인권보호 정책 협의를 위해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회를 방문(‘21. 8.)

### 법무부-국가인권위 협력 사례



- 주요정책 ‘인권모니터링’ 제도를 중앙부처 최초로 실시하여 인권침해요소가 높은 분야에 대한 사전 평가와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인권모니터링 제도 개요

- ▶ 법무부는 인신구속, 수용자 관리 등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고, 특히 검찰·보호·교정·출입국 등 다양한 직렬이 각자 업무처리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존
- ▶ 제3차 NAP 및 인권위 권고 이행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추진시 국내·외 권고 준수 여부, 재량권 행사 시 인권보호방안 구비 여부 등 자문

- ※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규정」(훈령) 제정·시행(21. 4.) 후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총 6건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 2022년 접수 예정 과제 : ①「수감명령 등 집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②「보호소년 등의 면담 신청권」 제도, ③ 무자격외국인 단속 관련 지침/매뉴얼

-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전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이행점검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제3차 NAP 2020년도 이행상황 현황>

분 야	추진 과제	2020년도 이행상황				
		소계	과제 완료	정상 추진	추진 지연	기타
합 계	272	272	19	248	3	2
■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25	25	2	21	2	-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2	12	-	11	1	-
■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23	23	7	16	-	-
■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8	8	-	8	-	-
■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93	93	8	85	-	-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69	69	1	68	-	-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32	32	1	30	-	1
■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10	10	-	9	-	1

-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력 강화를 위해 이행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를 개발, 2차 시범과제 13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실시



### ③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인권 정책의 연계성 제고

-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20. 5.) 이행의 일환으로 법무부-인권위 공동주최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최근 핵심적 인권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 배포(21. 12.) 등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 ‘유엔 제48차 인권이사회’ 사형제 문제 결의안 찬성 표결 검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우리 기업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연루 관련) 및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검토 등 국제인권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연임 중임
- ‘제1차 국가인권정책협의회’(21. 5.) 서면 개최 및 ‘대국민 하이브리드 공청회’(21. 4.) 등을 통하여 우리 정부 인권정책에 대한 유엔의 우려 및 질의를 파악하고, 국제기준에 비추어 현행 정책을 검토,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대응 감방 폐지 등 교정시설의 물리적 여건 개선 및 기타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대표적 개선 사항 제시
- 매년 미국이 전세계 국가 인권상황을 파악 및 발표하기 위해 작성하는 ‘인권보고서’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 연례적 반복 답변에서 벗어나 답변 보장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인권보고서 중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 향후 추진계획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단순 수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 및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권고 이행계획에 따라 수반되는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제도·정책에 대해서는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제인권규범, 재량권 행사 시 인권보호 방안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규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 <향후 5개년 목표> '22년 93% → '23년 94% → '24년 95% → '25년 95.5% → '26년 96%
- 아울러,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직원교육 등을 통한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해 나아가겠습니다.
  -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등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행위를 발굴하여 개선토록하고 개선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 인권 사각지대에 있거나 인권향상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주제별 집중 실태조사'를 도입('21년)하여 시행 중
  - 또한,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외부강사 기관 방문 교육' 등 직렬별 다양한 인권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인권 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시설 내 수용자·보호청소년과 대면하여 수시로 상담요청을 받는 교정·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정직·보호직 인권 심리상담' 교육과정 시범운영
-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 현재까지는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구금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개선 권고)하여 왔으나,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인권위가 동반자적 협력관계에서 각종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인권정책책임관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

#### IV.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 성과지표

### 보호관찰대상자 중 집중대상자 재범률(%)

#### □ 성과지표 개요

#### 〈보호관찰대상자 중 집중대상자 재범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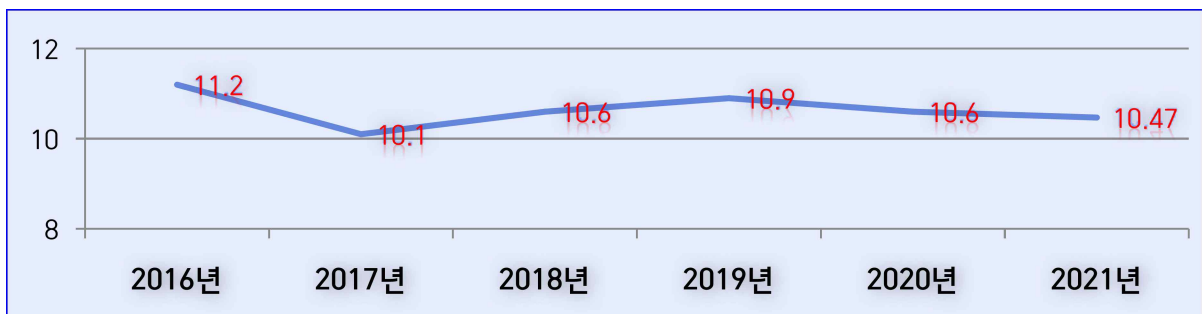
- 개념 : 보호관찰대상자 중 성폭력, 강도, 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측정을 통해 재범 방지 실적 평가
- 조사대상 :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집중대상자 재범률 측정
- 조사방법 :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작성하는 통계 및 보호관찰 통계 분석 시스템에서 추출
- 측정산식 : 집중보호관찰 재범자 수 /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실시인원 × 100

#### □ 2021년 측정결과

- (목표 달성률) '21년도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0.47%로 당초 목표치인 10.6% 대비 0.13%p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한 '보호관찰(전자감독) 대상자' 4,600명 중 성폭력·강도·살인 등 재범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고위험자 650명

- (지표 추세치) 최근 3년 동안 집중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11%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성과분석

- 아동 성범죄자 조OO 출소를 앞두고 성폭력·강도·살인 등 재범률이 높은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출소 전 고위험 성범죄자를 선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 요청', '맞춤형 준수사항 신청' 등 선제적으로 개입·관리하였습니다.
  - 전자감독 지식과 경험이 많은 직원이 고위험 범죄자를 집중 관리 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시행하는 등 기존 '지역별' 관제 방식을 '위험성' 수준에 따른 방식으로 개선(효율화)하였습니다.
    - \* 관리역량 우수직원 1명이 고위험자 6명(기존 50명) 내외를 집중 관리·감독
  -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을 확대 실시하여 범죄 취약계층의 보호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 ※ 1:1 전자감독 누적 실시 인원 : '20년 33명 → '21년 61명
-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1. 6.)을 통해 전자감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전자감독 대상자를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가 시행되었으며,
  - 적극적인 수사로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65일·24시간 대응 가능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하였습니다.
    - ※ 13개 기관(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에 수사 전담요원 66명 전환 배치
  - 아울러, 경찰과 '대상자 정보 상시 공유', 훼손사건 시 유기적 공조를 위한 '협조중심경찰서' 지정·운영, '통신수사시스템' 구축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수사·검거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상황 파악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지자체 CCTV 연계 지역을 기존 7개 광역지자체에서 11개 광역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 서울 4개 구(강서구·도봉구·강남구·서대문구), 전남, 충남, 인천, 경북 추가 연계

-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안전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실시(15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21. 7.)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 국민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 위험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 신고자 위치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즉시 전화 연락 및 보호관찰관 현장 대응



○ 또한, 집단 폭행 등 날로 흉폭화되는 ‘청소년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감독의 질적 향상 등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야간 시간대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외출제한 명령’, ‘심리상담 전문가 대면 상담’, ‘콜코칭’(야간전화 상담, 14,460회)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 보호관찰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격 교정 및 자발적 변화 동기 유도를 위해 위험요인별 ‘상담형 면담 프로그램’, 정신질환 치료지원(마음보듬) 및 심리상담(마음톡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학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등 재범 방지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399개교 732명)

- 더불어 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범죄 등 **생활밀착형 사범**에 대해 해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인 상담 능력을 보유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면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피해아동 가정방문, 불시 마약검사와 같이 현장점검 위주로 밀착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며
  - 특히 성폭력·마약·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보호 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사·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범의 근본적인 원인을 상담 및 치료하였습니다.

## □ 향후 추진계획

□ 최근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효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 <5개년 목표> '22년 10.6 → '23년 10.55 → '24년 10.5 → '25년 10.45 → '26년 10.4

### ① 준수사항 위반죄·훼손죄 신속 대응 체계 확립

- 준수사항 위반은 훼손 및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으로 현장출동 등 **신속한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 최근 화제가 된 훼손 및 재범사건도 주말 야간에 발생
  -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 대상자 주거지·차량 수색, 주요정보 경찰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21. 10. 국회 제출)

## ②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감독 실시

-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를 선제적으로 개입·관리하겠습니다.
-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담기록·심리치료·재범 위험성 평가내역 등 각종 정보를 상시 공유하겠습니다.
- 출소 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요청,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예산·인력 충원 전이라도 1:1 전자감독을 확대하여 출소 직후부터 주1회 이상 대면면담, 행동관찰 등 밀착 감독을 통한 지역사회 내 성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 또한 보호관찰소 심리전문가 확충 등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왜곡된 성인식·음주문제·분노조절·폭력성향 등 근원적인 재범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③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 훼손사건 발생 즉시 특사경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하여 빈틈없는 검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행) 112상황실에 훼손사실만 전파 ⇒ (개선) 훼손사실 전파 시 신상정보 및 요구정보 동시 제공
  - ※ 위험성이 큰 4대 특정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수신자료)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법무부에서 형사사법망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감독대상자 정보를 일선 경찰서 현장근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하여 시스템 등 필요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각종 영장 청구의 신속한 처리, 조기 검거를 위한 통신자료 조회, 특사경 전문화 교육 등을 확대하겠습니다.